

환자는 어찌란 말인가

수원 백성병원, 병동간호사 대거 부당 발령...노조탄압 조합원 강한 반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백성병원이 지난 12일 환자상태에 대한 기본적인 인계절차도 없이 노조 조합원인 병동 간호사들을 대거 수술실, 중환자실로 배치하는 부당인사조치를 감행, 환자 권익은 뒷전으로 한 노조탄압이라는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백성병원 측은 지난 10일 노조 조합원이 가장 많은 5층 병동 간호사 중 한 명을 제외한 5명 전원을 중환자실 등으로 배치하는 인사발령을 공고, 12

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를 묻기커녕 적응훈련기간은 물론 환자상태에 대한 인계절차 없이 인사발령을 강행했다.

이에 대해 김경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경기본부장은 "환자상태에 대한 기본적인 인계절차 없이 간호사들을 부당배치한 것은 환자들을 방치한 의료기관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파행"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병원 측은 또한 지난 1월27일 신상

무지부장이 돈 때문에 노조를 만들었다는 병원측의 입장에 대응해 사심 없이 노조를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제출한 사직서를 병원장이 찢어버리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29일 권용택사무국장이 중간간부회의를 소집한 뒤 사표를 전격 수리했다. 그러나 지난 12일 보건의료노조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권사무국장은 사표 수리 이후에도 신지부장에게 업무지시를 내린 사실을 실했다.

이와 관련해 박미일노조부지부장은 "노조의 정당함을 밝히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을 뿐이며 병원장이 직접 찢어버리라고 한 사표를 수리하고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인사는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행동"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병원측 관계자는 "중환자실 간호사가 사직서를 제출해 인원 재배치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번 인사조치를 취한 것 뿐"이라고 한 뒤 "병원장으로 사직서 처리에 관한 어떤 이야기도 들은 바 없고, 사직서를 제출해 수리한 것"이라고 했다.

백성병원은 지난 1월11일 노조 설립 이후 진통을 겪어왔으며 지난 5일 의사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며 진료를 중단, 환자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다.

한편 노조 조합원들과 신지부장은 13일 부당인사에 반발하며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서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서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했다. **다산**

소장 취임사

실천으로 답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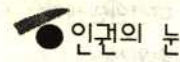
지난 며칠동안 주위 분들을 만나면서 다산인권센터의 새로운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의 포부는 이렇다고... 소장 이·취임식이 끝난 이후에도 애정 어린 조언과 충고, 혹독한 비판에 눈물이 쏘옥 나올 지경입니다.

한 인간이 태어나서 좋은 사람들과 만나 의기투합한다는 것. 뜨거운 애정으로 삶을 함께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난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 눈물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인권활동가, 아니 인권운동가로 산다는 것이 뭐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삶에 충실하고 타인을 배려하면서 인간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사는 많은 평범하지만 꿈이 있는 사람들, 모두가 운동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과 함께 진보를 위해 실천할 수 있다는 것. 이 얼마 아름다운 삶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우리와 아름다운 삶을 개척하는 동지가 되어주십시오. 다산인권센터는 그러한 치열한 삶을 함께 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과 기꺼이 굳건한 연대의 어깨를 걸고 가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실천으로 답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산인권센터 소장 이·취임식에 보내주신 여러분의 성원과 축하에 먼저 이 지면을 통해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역(逆)억압을 넘어서는 성 표현

고길실/문화연대 편집실장

예전에 한 여 후배와 밤새 싸운 적이 있다. MT 갔을 때였다. 그 후배가 나보고 '시체놀이'를 하자고 했다. 난 아무 뜻 없이 그러면 '시체 닦는' 놀이도 하는 거냐고 되물었다. 그랬더니 그 후배는 다짜고짜 나보고 거부장적인 발언을 한다고 성토를 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내가 한 발언, 즉 시체를 닦자고 한 말이 여자인 자신의 몸을 만지는 것으로 상상하였고 그것을 남근주의적 발상으로 간주한 모양이었다. 충분히 그렇게 상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상상한 것은 그녀였지 내가 아니었던 데에 있었다. 난 그녀의 공격을 받으면서 어이가 없었다. 시체놀이를 하자는 것은 괜찮고 시체 닦는 것을 하자는 것은 나쁘다? 시체 닦기 놀이를 하자면 모두 여자(시체가 된 여자)의 몸을 만지는 것으로 상상해야 한다? 물론 그렇게 지레 상상하는 것도 나름대로는 일리는 있다. 그러나 선형적으로 그렇게 상상해버리고, 아니 상상하는 것까지야 말할 수 없지만, 그렇게 단죄해 버리려고 하는 태도에 대해 늘 불만스럽게 나의 기억 속에 남아 있다.

나는 최근 다시 거론되고 있는 성희롱/성폭력의 문제를 접하면서 그 기억이 다시 살아났다. 성희롱/성폭력이 사회적으로 문제화가 되어야 하고 여성의 인권침해가 사라져야 한다는 점에 나도 동의한다. 그런데 가령, 그 후배에 대한 나의 발언도, 그 후배의 상상력에 따르면 '성희롱'일 수 있다. 그러나 그런 담론이 성희롱으로 간단히 귀결되는 순간 우리는 담론과 상상력에 있어서 계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말 한순간 한순간마다 자기검열을 받아야 한다. 작가가 청소년보호법에 대해 스스로 검열을 해야 하듯이...

난 분명 '성희롱'을 옹호하려는 것은 아니다. 화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청자에 있어서 성희롱으로 비약되어 버릴 수 있는 상상력의 엇갈림을 좀 생각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설령 성 표현적으로 시체 닦는 놀이를 제안했다고 치자. 피해자 중심주의대로라면 그것은 분명 성희롱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청자여성이 성의식이 전혀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말들을 기꺼이 받아칠 수 있는 기지가 있다면 말이다. 이 말 또한 남근주의적 발상일까?

내가 하고싶은 말은 성희롱과 인권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의제화하여 여성의 성 이미지나 정체성을 올바르게 자리잡게 하려는 데 있어서 성표현/성문화가 다시 또 억압성으로서가 아니라 긍정성의 차원으로 고려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 그것의 현실적 고민은 참으로 복잡하다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경기남부지역단체들 14일 한나라당경기도본부서 집회

경기남부연합과 경기남부총련은 14일 오후 1시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집회를 한나라당 경기도본부 앞에서 가졌다. 이날 이들은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야 한다'는 내용의 전단을 시민들에게 배포한 뒤 오후 3시부터 한나라당 경기도지부에서 "국가보안법 처리 연기를 철회하라"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열었다.

다. 송원찬 다산인권센터 소장은 "50여 년 동안 국민들을 옥죄어온 국가보안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반인권 악법"이라며 "국가보안법 폐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 사안이기때 국회의원들은 이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산**

다산인권

The Center for Human Rights Dasan

제11호
2001.2.28.(수)

- 발행처 : 다산인권센터
- 발행인 : 송원찬
- 편집인 : 다산인권편집위원회

442-380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1의6 법전빌딩 313호 ☎ 031-213-2105 Fax 031-215-4395 e-mail :humandasan@hanmail.net

“불평등 소파개정 받아들일 수 없다”

27일 국회 통외통위 소파개정안 통과...국민행동 김판태 할복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은 28일 국회 통외통위소위원회에서 소파 비준동의안이 통과된 것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한나라당사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항이 하나도 개정되지 않은 데다가 개정 또는 신설된 조항 역시 단서조항을 달아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등 오히려 개악에 가까운 이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주권을 포기한 행위”라면서 국회비준 반대, 재협상 촉구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통외통위소위원회는 27일 찬성 9명, 반대 2명, 기권 1명 등 압도적인 찬성으로 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를 참관했던 김판태 소파개정 국민행동 사무처장은 “한미행정협정을 비준하지 말라”고 외치며 미리 준비한 칼로 복부를 서너 차례 찔렀다. 또 상임의장인 문정현신부도 “비준 동의 반대”를 외치다가 회의실 밖으로 쫓겨났다.

이번 개정안은 본협정 31개조 중에서 고작 1개조인 22조5항만이 개정됐고,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정한다’는 식의 선언적인 문구로 작성

된 데다 일부 개정조항에는 단서조항을 달아 실효성이 전혀 없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김용한 소파개정 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28일 진행되는 국회 본회의

에 참석해서 소파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압력을 행사할 것”이라며 “만일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폐기하는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다산**

개혁 의지 상실한 정부를 규탄한다

27일 개혁실종규탄 수원지역203인 시국선언 발표

수원지역 인사 203인은 27일 오전 11시 다산인권센터 회의실에서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법, 부패방지법 등 3대 개혁입법 실종을 규탄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날 박희영 수원환경운동센터 공동대표는 시국선언을 통해 “국가보안법 폐지뿐만 아니라 부패방지법, 국가인권위법 등이 개혁의 명분만을 부여잡으려는 여야 정치인들에 의해 껌데기뿐인 법안으로 통과될 수도 있다는 것에 분노한다”면서 “평소 당론 뒤에 숨거나 정쟁 분위기에 편승해 사회의 개혁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국회의 진정한 책무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시민사회가 제기하고 있는 최소한의 개혁과제마저 이행하지 않는다면 지난 총선연대에 버금가는 국민적 저항을 맞보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시국선언은 현정권의 개혁의지가 상실된 상황에서 지난 총선연대에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시민사회의 결집된 힘이 개혁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 송원찬 다산인권센터소장은 현재 논의중인 가칭 경기도 시민사회연대기구에 3대 개혁입법을 실현하기 위한 공동대응방안을 제안할 것이며 ‘개혁실종을 규탄하는 3. 1.시국대회’에 시국선언단체들이 공동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산**

종교 강요에 거리로 나선 교사와 학생들

안양성문고 종교의 자유 침해 등 파행운영 문제제기

안양 성문여고(교장 정열모) 교사, 재학생 및 졸업생들이 학교측의 종교 강요 및 교사들에 대한 부당 인사 조치 등 파행적인 학교운영을 문제삼으며 지난 23일부터 안양역 일대에서 매일 집회를 갖고 있다.

27일 교사들과 학생들에 따르면 학교측은 지난해부터 교내에 ‘우리성문교회’를 만들어놓고 오전 명상시간과 금요일 자유시간을 예배시간으로 바꿔 전교생과 교사들에게 예배를 강요하고 있으며, 불참 시 불이익을 주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에 보장돼 있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학교측의 횡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또 이들은 본인의 의사도 묻지 않은 채 종업식날인 지난 17일자 시행으로 교사 4명을 같은 재단의 중학교로 발

령을 냈다며 이는 명백한 교권 침해이자 부당인사라고 주장했다. 현재 학생들은 반 배정도 통지받지 못한 채 봄방학에 들어갔다.

특히 이와 관련해 교사들은 지난해 11월 학교측의 파행적인 운영을 지적하며 참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전교조에 가입한 것에 대해 학교측이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부당한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학교측은 문제가 외부로 알려지면서 두 차례 면담자리를 마련했으나 교사들의 인사절차가 잘못됐음을 시인하면서 철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과 교사들은 파행적인 학사운영 중단과 관계자 퇴진, 부당 인사 철회 등을 내세우며 거리집회를 여는 한편 참교육 성문분회 홈페이지를 통해 사이버투쟁을 함께 벌이고 있다. **다산**

교도소부지 고층아파트건설 철회하라

수원교도소부지에 35층 아파트건설, 시민단체들 반발

경기도 여주로 이전될 수원교도소 부지에 35층 고밀도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는 것과 관련해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에 고층 고밀도 아파트가 들어서면는 것은 도시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아파트 건설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현재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수원교도소를 여주로 이전하면서 월드건설에 새로 지을 교도소 건설비를 대는 조건으로 현재의 교도소 부지를 넘겼다. 월드건설은 지난해 이 부지에 35층 짜리 고밀도 아파트단지를 짓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다.

이후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이 사업계획안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심의에서 (3면에서 계속 ➡)

□인권마당□

□외국인노동자 항소심서 10년 실행
지난해 5월 체불된 임금을 받으려갔다가 실랑이 끝에 사장을 죽여 살인죄로 기소된 인도네시아 외국인노동자 부용 아부바카의 항소심에서 서울고법 형사5부는 실행 10년을 선고했다.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왔다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지난해 초 경기도 오산에서 프레스공으로 일한 그는 본국의 가족과 부인, 아이의 생활비를 부담해왔다. 변론을 맡은 최강호변호사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돈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사고로 볼 수 있는데 형이 과하게 부과된 것 같다”고 말했다.

□재건축부조합장 분신 경찰 재수사
안양시 호계동 경향아파트 재건축조합 부조합장 분신사망과 관련, 유족들이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접수했고 경찰이 재수사에 들어갔다. 당초 사건은 지난 6일 밤 부조합장인 최성주씨가 자신을 해임한 조합임원들에 불만을 품고 몸에 신나를 뿌려 분신, 사망했다는 것. 그 자리에 있었던 이들은 경찰 진술에서 “최씨가 한 손에 라이터를 들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씨는 숨지기 4시간 전 경찰2명이 참석한 가운데 “라이터는 안 갖고 있었으며 내가 불을 붙인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유족들은 “불을 끄려 한 이가 한 명도 없었고 세 명이 황급히 차를 타고 갔다”는 최초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했다. 유족들은 권력욕에서 비롯된 분신사건으로 조사되고 있는 것에 항의하며 진상을 밝혀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수원지검과 경찰에 제출했다.

인권의 눈

벼랑 끝에 선 대우노동자들의 분노

손경미/노무사

대우자동차에서 만 17년을 근무한 김씨는 지난 17일 생산직 노동자 1천750명과 함께 결국 해고통지서를 받았다. 올해로 42세인 그는 대우차에 입사해 서로들끼리 '아오지'라고 부르는 주물공장에서 일을 시작해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그랬듯이 철야, 특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노조 일에도 열심히 참여해왔다고 한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해고통지서였다.

"젊었으면 어떻게 하겠지만 나이를 먹고 보니 다른 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직장엔 20년 가까이 일한 사람들은 해고가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사형선고를 받고 자신들의 땀이 배어난 그 작업현장에 모여든 노동자들... 컴퓨터 오락에서나 본 듯한 투구 쓴 전경들에 아버지가 끌려나갈 때 놀란 토끼눈으로 쳐다보아야 했던 어린 아들, 딸들...

그리고 2월 20일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에서는 분노한 노동자들의 화염병 시위가 있었다.

하지만 그 화염병시위에 대해 주위사람들 누구도 비난하는 것을 나는 아직 보지 못했다. 아니 다른 때 같았으면 언론에서도,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국민의 정부 들어서 처음 등장한 화염병시위의 폭력성을 운운하며 어떻게 하든 시위대의 정당성을 깎아 내리려 하였을 텐데, 어떤 일인지 애써 부각시키지 않으려는 의도가 역력해 보였다. 과격성여부를 따지기 전에 어찌하면 이것은 벼랑 끝에 선 사람들의 정당방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며 젊은이들에게 돈과 권력과 포부의 성공담을 한껏 뽐내며 존경을 받아왔던 김우중씨는 결국 세계 곳곳을 누비며 또 다른 의화낭비를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그에 의해 고용되고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걸었던 대우노동자들은 아무런 잘못 없이 또 다시 인생을 포기하라는 강요를 받고 있다.

이제 우리는 되돌려 물어보아야 할 것이다. 벼랑 끝에 서 있는 이들에게 누가 고통을 분담하자고 할 수 있을 것인지. 누가 이들의 투쟁이 우리 경제현실을 무시한 이기주의적 집단행동이라고 매도할 수 있을 것인지.

'교통체증 완화방안을 수원시와 협의해 이행하라'는 '조건부 가결'을 내렸다. 이로써 이 건설계획은 현실화됐다. 이와 관련해 수원환경운동센터 안병주상임활동가는 "지역주민의 의견 없이 사적인 기업의 이익을 위해 졸속적으로 추진된 이 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10월5일 법무부 장관 명의로 '새로 조성하는 교정시설 공사

가 원만히 추진되어 계획된 시기에 수원교도소를 이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는 협조공문이 수원시에 접수된 사실이 최근 밝혀지면서, 지역시민사회단체들은 "법을 집행하는 국가기관에서 단지 합법이라는 이유로 수원시민의 권리를 훼손하고 시에 압력을 넣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분개하고 있다. 이들은 "법무부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무시한 채 일방

적으로 추진한 이번 사안이 앞으로 이 전될 서울, 안양, 영등포 교도소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며 "국가기관의 이 같은 횡포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 현재 진행중인 수원교도소부지활용방안을 백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환경운동센터는 3월2일 법무부 앞에서 "고밀도 아파트단지 건설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 집회를 갖고 조만간 지역연대기구를 구성할 계획이다. **다산**

다산인권

The Dasan Center for Human Rights

제12호
2001.3.14.(수)

- 발행처 : 다산인권센터
- 발행인 : 송원찬
- 편집인 : 다산인권편집위원회

442-380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1의6 법전빌딩 313호 ☎ 031-213-2105 Fax 031-215-4395 http://rights.or.kr humandasan@hanmail.net

“정당한 노조활동 보장하라”

지노위 노조 합법성 인정 불구, 집회 참여 부천 레미콘노동자 강제연행

지난 12일 오전 10시 20분쯤 노동조합 인정과 부당노동행위중지를 요구하며 회사 앞에서 집회를 벌였던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부천 이순분회와 부천 유진분회 소속 노동자들이 회사측의 업무방해 신고로 달려온 경찰에 의해 70여명 전원이 부천 중부 경찰서로 강제연행됐다.

13일 현재 일부는 조사를 받고 나왔으나 이순, 유진분회 조합원 5명은 14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한편 경찰은 조사 중 지문채취를 요구해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노조활동을 했으나 회사측은 노조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그동안 탄압을 일삼아왔다. 특히 이순분회의 경우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정상적으로 지급되던 고속도로 통행료와 식사보조비를 중단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순분회는 회사측에 단체교섭을 요청했으나 묵살당했고,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월 19일 노동자들은 정당한 노동쟁의를 할 수 있다는 조정종결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노조원들은 사측이 이런 결정에도 아랑곳 않고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로 밀어붙이기식 노조탄압을 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현재 노조원들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부천지방노동사무소에 부당노동행위로 회사를 고발한 상태다. **(2면에서 계속됨)**



저희 다산 작은 인권영화제 **대지의 소금**

필름 속 인권을 잡아라

다산인권센터는 올 3월부터 한 달에 한번씩 작은 인권영화제를 마련합니다. 영화를 통해 인권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매달 셋째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필름을 돌린답니다. 영화를 사랑하는 분, 인권으로 수다를 풀고 싶은 분,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무료죠.

첫 번째 영화는 뉴멕시코 탄광노동자들의 파업을 그린 '대지의 소금'입니다. 지난 5회 인권영화제때 호평을 받은 작품으로 출연 배우들 모두 탄광노동자들입니다. 제작 당시 대부분의 미국 영화관들은 이 작품의 개봉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른 지금은 미국독립영화의 자랑스런 성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파업전야>와 견줄만한 독립영화라고 할 수 있겠죠?

일시 : 2001년 3월 20일(화) 오후7시부터

장소 : 다산인권센터 소극장

연락처 : 031-213-2105

다산인권센터 홈페이지가 마침내 개통됐습니다!!!

<http://rights.or.kr>

합법집회 강제 저지로 노점상인 10여명 부상

수원 팔달문 노점상 집회 저지 용역단속반 폭행 휘둘러...현장 경찰 나몰라라

수원시 팔달구 일대 노점상인들이 지난 7일 강제 단속 반대,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팔달문 일대에서 집회를 벌이던 중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용역단속반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이로 인해 척추장애인 정혁구씨(38)가 허리를 다치는 등 14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들 가운데 12명이 여성 노점상인들이었다.

노점상인들은 수원시가 지난 1월5일부터 용역단속반을 앞세워 노점 단속에 들어간 데에 강하게 저항하며 두달여 동안 매일 집회를 벌여왔다.

이날도 노점상인들은 집회신고를 내고 합법적으로 집회를 벌였다.

그런데 오후 3시20분 집회가 끝날 무렵 갑자기 용역단속반 50여명이 달려들어 집기를 부수고 노점상인들을 폭행하며 강제로 집회를 저지했다.

노점상인들은 당시 현장에 수원중부서 소속 경찰들이 있었으나 용역단속반원들의 난동을 속수무책 지켜보았으며 분개했다.

박종일 전국노점상연합 조직1국장은 "물건을 팔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합법적인 집회였는데 집회를 방해하며

폭력을 휘두른 용역단속반들의 행태를 그냥 지켜본 경찰의 태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팔달구청과 수원시청 측에 피해보상을 요구했으나 관할 행정기관은 서로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생계가 막막한 노점상인들을 물리력을 동원해 무조건 내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나"이라며 반발했다.

현재 노점상인들은 수원시청과 팔달구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수원시장과 용역업체 사장, 수원중부경찰서장을 상대로 고소할 계획이다. **다산**

(1면에 이어)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법상에서는 이들 레미콘 운송기사들을 근로자로 보기 때문에 해당 행정관청과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서는 이들이 제기한 부당노동행위고발과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와 심리가 진행중이다. 하지만, 회사측은 국가행정기구에서 인정한 이들의 근로자성을 무시한채 법으로 규정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금하며 이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또한, 회사측은 이들을 상대로 노동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이제 레미콘 근로자들의 근로자성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원으로 넘겨졌다. **다산**

공공부문구조조정투쟁의 선봉 한국통신계약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원합니다.
ARS 700-7008

■인권단상■

학생들 대상 지문채취 강요 '반인권적 교육발상'

최근 안양의 한 중학교에서 잇따라 분실사고가 나자 학교측이 학생들에게 지문을 채취하겠다고 한 일이 발생했다. 학교측은 학생들의 지문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보내 범인을 찾아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학교측은 교육적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은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학교측의 사과로 일 단락 됐다.

이 같은 발상은 우리 교육계의 인권지수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한 사례다. 우리는 주민등록지문날인이 국민을 범법자로 규정하는 것이며 이는 인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침해라며 거부운동까지 벌이고 있는 사회단체들의 주장이 되짚어봐야 한다. 학교측은 전교생들을 범법자로 상정한 것이다. 교육현장에서 학교와 학생들 사이의 이 같은 관계설정이 타당한 것인가.

특히 지문날인 강요행위는 굴욕적인 것이며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조항을 침해한다. 교육현장에서 단순히 도둑을 잡겠다는 발상으로 지문 채취를 강요한 것은 학생들의 인격권을 무시한 행위이다.

왜 교육을 하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과 함께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파시즘, 인권불감증을 들춰내야 할 것이다. 특히 청소년들의 인격을 충분히 인정하지 않는 우리 교육현실에서.

아이 앞에서 폭행...알몸 수색까지

대우차사태 곳곳서 인권침해, 인권단체들 조사 결과 드러나

지난달 감행된 대우자동차 정리하고 이후 인천 부평은 인권유린의 지대다. 경찰은 정리하고 반대를 외치며 거리로 나선 대우자동차 노동자들과 가족들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하고 있다. 시민들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국내 인권단체들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이들 간 부평에서 발생한 경찰의 인권침해를 조사했다. 이번 조사에는 인권운동사랑방 이창조, 이광길, 국제민주연대 최재훈씨가 참여했다.

인권침해 조사팀은 지난 7, 8일 대우자동차 정문 앞 집회에서 발행한 침해를 집중적으로 조사했으며 현재 160여건의 사례를 수집했다. 이번 조사 결과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은 물론 가족, 시민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은 광범위했으며, 특히 어린아이들도 경찰이 휘두른 방패 따위로 부상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로는 집회 전 단계에서는 불

심검문, 불법 연행이 가장 많았으며, 집회 중에는 절차 없는 무력진압과 그로 인한 부상이 다수 접수됐다. 또 경찰이 연행 뒤 호송과 조사과정에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으며, 알몸 수색까지 자행했다는 사례도 확보한 상태다.

인권운동사랑방 이광길씨는 "어린아이 앞에서 방패를 휘둘러 아이가 다치거나 밤에 경기를 하는 사례도 수집했고, 남편과 면회할 때 수갑을 찻던 한 여성은 모멸감으로 고통스러워했다"면서 "경찰은 관행적으로 또 무감각하게 이런 인권유린을 버젓이 자행했다"고 말했다.

인권침해 조사팀은 조사 결과를 유형별로 분석하고 인권단체와 법조인들의 의견을 넣어 이번 주 내로 보고서를 작성, 발표할 계획이다.

또 시민사회, 노동계진영과 함께 경찰의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대응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다산**

수원농생고와 함께 인권교육

다산인권센터는 오는 15일부터 9주 동안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과 함께 인권교육을 한다.

이번 인권교육은 수원농생고에서 청소년들에게 인권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다산인권센터에 강의를 요청해오면서 이뤄졌다. 센터는 그간 시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진행해 왔다.

강의는 인권의 소중함 알기, 인권선언 되짚기, 청소년 인권이야기, 여성 인권으로 진행된다.

경기민중연대 출범한다

경제위기를 노동자, 빈민에게 떠넘기면서 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맞서 공동으로 대응할 경기민중연대가 출범한다.

경기민중연대준비위원회는 오는 24일 수원 장안공원에서 민중대회를 갖고 정식 출범한다. 여기에는 경기지역 노동계, 빈민, 학생연합체가 참여한다. 이들은 앞으로 구조조정, 노점단속 등 서민들의 삶을 옥죄고 있는 현 정책에 공동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인권마당□

□경찰 폭력시위감시단 구성 논란

지난 9일 경찰청이 불법·폭력시위를 감시하기 위해 시민단체들이 참관하는 '집회시위현장 시민참관단'을 운영하겠다고 발표하자 인권단체들이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찰청은 과격시위가 예상되는 집회에 시민단체의 참관을 요청하는 형식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인권단체들은 과격한 집회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현실 인식은 뒷전으로 한 채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송원찬 다산인권센터 소장은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같은 발상은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시위가 왜 일어나는가에 대한 현실인식 없이 모든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순애 구명운동 나섰다

경기여성연대 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잔혹하게 폭력을 일삼던 남편을 살해, 구속된 임순애씨 구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인권위원회는 이천과 경기지역 단체들을 중심으로 '임순애 구명을 위한 공동대책협의회'를 구성, 서명운동과 함께 재판과정모니터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또 "임씨는 비극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가정폭력의 현실이 만든 희생자였다"며 석방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전화:031-243-4600

다산인권

The Center for Human Rights Dasan

제13호

2001.3.28.(수)

- 발행처 : 다산인권센터
- 발행인 : 송원찬
- 편집인 : 다산인권편집위원회

442-380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1의6 법전빌딩 313호 ☎ 031-213-2105 Fax 031-215-4395 http://rights.or.kr humandasan@hanmail.net

“야, XXX야...” 경찰 여성활동가에게 성폭력 발언

군산서 경찰, 미군기지 앞 집회서 군홑발 폭행·성폭력 언사

최근 경찰이 여성인권활동가에게 모욕적인 성폭력 언행을 자행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내 인권단체들과 여성단체들이 강력하게 맞서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28일 ‘경찰의 여성활동가에 대한 성폭력을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여성인권활동가에게 성폭력 발언을 한 것은 경찰 한 명의 일탈행위가 아니라 명백한 국가폭력”이라고 규정하며 관련자들 파면 및 징계,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사건은 지난 23일 오후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상임대표 문정현신부)이 군산미군기지 정문 앞에서 170회 금요집회를 벌이면서 일어났다.

이날 경찰은 평화적인 집회가 끝날 무렵 문정현 신부의 허리를 차고 지팡이를 빼앗아 부러뜨렸다. 또 고승희 민주노동당 군산지부 홍보부장에게 집단폭행을 가해 코뼈가 함몰되는 부상을 입혔다. 경찰은 또 이날 밤 9시쯤 미군기지 철조망 앞에서 집회를 벌이던 문신부를 ‘작은 자매의 집’으로 강제이송했다.

한편 군산경찰서 특경대장 문승태

장은 이날 상황을 촬영하던 김영옥 전 북평화와 인권연대 사무국장에게 “야 이 XXX야, 나 코피 나는 것 찍지 말고 너 피나는 거기나 찍어라, 이 X야”

라며 성폭력 언사를 자행했다. 또 경찰은 문신부에게 “이런 XX놈아, 니가 신부면 다냐. 나 오늘 옷 벗는다”라며 (2면에서 계속됨→)

학습권 침해 장애인 대학생 학교 상대 첫 소송

학교측에서 장애인 학생들을 위한 학습시설을 마련하지 않아 학습권을 침해받았으며 28일 국내 최초로 장애인 대학생이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승실대에 다니다 휴학한 박지주씨(30. 사회 사업학과 3년)는 강의실이 3, 4층에 있는데도 장애인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지 않아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고, 화장실이나 구내식당에도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마련돼 있지 않아 학교를 다니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면서 학교를 상대로 학습권 훼손에 따른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박씨는 일일이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휠체어를 옮기다 계단에서 구른 적도 수 차례 있다며 목숨을 담보로 학교에 다녔다고 밝혔다.

박씨는 학교측의 이같은 조치는 장애인들의 교육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뇌성마비 장애인에 대해 원서접수조차 거부한 청주 서원대를 시작으로 편입을 거부한 청주대, 신체 검사 조항을 들어 시각 장애인을 거부한 서울 교대까지 그동안 장애인 입학거부 문제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있었다.

그러나 재학중인 장애인 학생이 학교를 상대로 학습권 훼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박씨가 처음이다. [다산]

“레미콘운송기사 노동법상 명백한 근로자”

서울지노위, 구제신청서 심판서 결정...사측 부당노동행위에 책기

지난해 9월 출범한 건설운송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레미콘운송기사들에게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있는 회사측에게 책기를 박는 결정문이 나왔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월13일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19일 계약해지를 당한 파주미화분회 분회장 김봉현 외 2명이 같은 해 12월

(1면에 이어) 모욕적인 언사를 잇따라 내뱉었다.

당시 경찰들은 술을 마신 뒤 집회에 나왔다. 김 사무국장은 “당시 경찰들에게 술 냄새가 났으며 한 경찰이 회식하다 말고 불러나왔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김사무국장은 “집달당한 기분”이라며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평화와 인권연대는 지난 26일 배회선 전북지방경찰청장을 면담했으나 공개적인 사과 없이 잘 해보자는 말만 들었다. 배경철청장은 성폭력 언사와 관련해 내부조사를 한 뒤 조치를 취하고, 문정현 신부를 개인적으로 만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여성단체들은 경찰의 성폭력 언사 규탄과 경찰 대상의 성교육 실시를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경찰서에 보냈다.

이번 사건은 경찰에 인권침해와 공직사회의 성폭력 문화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준다. [다산]

11일 접수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서 심판 결정에서 ‘레미콘 운송기사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라며 레미콘운송기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서울지노위는 ‘레미콘운송기사가 개인사업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경쟁시장이 존재하지 않으며 경쟁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영업의 자유도 전혀 없는 점을 감안해 볼 때, 피신청인 회사의 사업장에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며 당연히 미화콘크리트주식회사의 근로자로 인정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지노위의 결정은 레미콘운송기사가 노동법상 근로자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레미콘운송기사들에 대한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노동법에 위배됨을 재확인해주었다.

송주현 다산인권센터 노동인권부장은 “이번 결정으로 법적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정규직들에게도 법률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게 되었다”면서 “그러나 노조법상의 적용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완전 적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산]

**인권침해 사례
제보·상담 받습니다
031-213-2105**

폐교설 나도는 가운데 교사 철야농성 돌입

안양 성문고 사태 갈수록 악화

전교조 교사 4명에 대한 인사 조치로 불거진 안양 성문고(진선학원) 사태가 폐교설이 나돌고 있는 가운데 교사들이 27일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교사들은 이날 “학교 이사장이 지난 토요일 학교를 폐교시키겠다고 말한 뒤 폐교절차를 알아보고 있는 등 상식 밖의 비민주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인사조치 철회, 행정실장과 부패재단 퇴진이 관철될 때까지 철야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학교측에서 인사조치된 교사들을 ‘우울증 환자’, ‘무능력자’로 매도하면서 자신의 비리를 무마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문고사태는 지난 2월17일 학교측이 전교조 분회 설립을 주도한 교사 4명에 대해 전보발령을 내면서 불거졌다. 교사들과 학생들은 종교에의 강요, 급식비 7천200백만원의 전용 등 학교측의 비리를 폭로한 뒤 참교육을 요구하며 거리집회, 서명운동을 벌여왔다.

지난 22일에는 학부모들이 가세해 학교 강당을 점거하고 부패 재단 퇴진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으며 학생들도 점심시간을 이용해 기습시위를 해왔다. 학부모들은 28일 오후 4시 학교에서 안양역까지 가두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한편 현재 학교측은 교사에 대한 인사조치를 철회할테니 다른 사안은 문제삼지 말라는 제안을 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산]

인권의 눈

교육감선거와 학생들의 권리

최종식 경기일보 기자

2001년 4월 19일 새벽 5시 중학교 2학년 민지는 평소 보다 일찍 일어났다. 어머니의 불호령이 떨어지기 전에 일어난 적이 없지만 오늘은 달랐다. 앞으로 4년을 이끌어 갈 교육감선거를 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민지는 기호 2번 김00후보의 참관인으로 자원했다. 민지가 지지하는 기호2번의 공약은 교과목 대폭 축소, 교과목 학생선택권 보장, 다양한 특기적성교육 등이었다.

물론 다른 후보의 공약 중에도 민지가 좋아할 만한 것도 있지만 기호2번의 공약은 전체적으로 학생중심의 교육 정책을 약속한 것이 특징이었다.

그런데 민지와 함께 선거권을 갖고 있는 어머니의 생각은 달랐다. 어머니는 과목을 줄이는 것은 찬성하면서도 수업시간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다. 그래서 기호1번 이00후보를 지지하고 있다.

공약이 발표되고 수 차례에 걸쳐 어머니와 토론을 벌였지만 어머니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민지는 솔직히 어머니가 지지하는 기호1번이 교육감으로 당선돼도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후보 모두가 선거권을 갖고 있는 학생표를 의식한 공약을 내 놓았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학생들은 이번 4월19일의 교육감선거를 '21세기 청소년 권리혁명'이라 이름지었다.

오는 4월19일은 제3대 경기교육감선거가 실시된다. 학교운영위원들이 뽑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 많은 후보가 제각각 당선을 자신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당선자에 따라 자신의 위치와 생활이 달라지는 학생들은 누가 후보인지, 누가 어떤 공약을 내 놓았는지 모르고 있다. 그들에게는 선택권도 알 권리도 없기 때문이다.

강압수사 제동 건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가 불법체류의 국인노동자들에게 수갑을 채워 강제 연행하는 등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의 무리한 단속과 강압수사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안산외노센터는 27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법무부에서 국내 거주 불법체류자들을 적발하기 위해 집중단속에 나서고 있으나 무리한 강압수사와 전시효과에만 치중하고 있다"면서 "특히 외국인 인권관련단체에 대한 의도적인 보복성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제기했다.

이들은 이날 밤 11시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규탄 집회를 가졌다. 센터측은 지난 22일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센터 근처에서 외국인노동자 한 명을 강제연행 했으며, 이에 항의하자 험악한 말로 일축해 버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센터측은 지난 1월11일 여권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외국인노동자들에게 다짜고짜 수갑을 채워 연행한 것과 관련,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항의한 데 대한 의도적인 보복성 단속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센터는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집중단속기간에 외국인노동자들에게 불심검문, 가방과 옷을 뒤지는가 하면,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이유로 수갑을 채우는 등 강압수사를 벌여왔다고 주장했다. **다산**

이주여성인권연대 발족

이주여성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이주여성인권연대'가 28일 발족했다.

참가단체는 안양이주노동자의 집(031-449-2876), 부산외국인노동자인권을 위한 모임(051-802-3438), 구미 가톨릭근로자문화센터(054-455-2816)

다산인권

제 14호

2001. 4. 4. (수)

매주 수요일 발행

●발행처 : 다산인권센터 ●발행인 : 송원찬 ●편집인 : 다산인권편집위원회

442-380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1의6 법전빌딩 313호 ☎ 031-213-2105 Fax 031-215-4395 http://rights.or.kr e-mail: humandasan@hanmail.net

HOT NEWS

경찰, 사건 터지면 학생·민중진영 일단 용의자로

경기지방경찰청, 학생·사회단체 대상 수원 노동사무소 화재사건 무리한 수사 벌여

경기지방경찰청이 지난 8일 새벽 수원노동사무소에 화염병이 투척돼 불이 난 사건을 조사하면서 수원지역 대학생, 사회운동단체 활동가, 과거 학생운동을 했던 이들을 용의자로 놓고 무리하게 수사를 벌여 물의를 빚고 있다.

수원지역 대학생들과 사회운동단체들에 따르면, 사건이 일어난 이후 경찰이 전화를 해 사건 당일 날의 행적을 묻고 학교 강의실이나 직장까지 찾아와 조사를 했다는 것.

대학생인 우모군은 지난 12일 중부서 경찰로부터 "만나서 협조해야 할 일이 있다...일단 만나자"는 전화를 받았다. 우군은 경찰에게 사건당일 날의 자신의 행적을 밝혔으나 계속해서 '이모씨'가 우군의 인터넷 아이디로 노동사무소 화재관련 기사를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다면 '이씨'와의 관계를 밝히라고 강요했다. 그 뒤 경찰은 학교 강의실로 찾아가 사건 당일 날의 행적을 진술서로 써라, 우군의 아이디를 도용

했다는 이유로 '이모'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쓰라고 협박했고, 우군은 결국 강압에 의해 고소장을 썼다.

우군은 "경찰이 핸드폰 사용내역을 조사해 전화통화 했던 사람들에게 일일이 전화해 사건과의 연관성을 캐묻는가 하면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면서 "알리바이가 분명한데도 경찰이 강압적으로 수사를 펴 생활 자체가 마비될 정도였으며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지난 17일 직장인 이모씨 집을 찾아가 컴퓨터 파일 제목을 적어 갔고, 며칠 뒤 압수수색을 했다.

이밖에도 사회운동단체에서 활동하거나 학생운동을 했던 10여명이 경찰로부터 "사건 당일 날 어디에 있었느냐?" "노동사무소 화재사건을 아느냐"라며 캐묻는 전화를 받았다.

이들은 "마치 범인인양 추조 당하는 기분이었다"면서 "사건만 터지면 용의자로 세워 강압적으로 무리하게 수사를 벌이는 것은 경찰의 폭력"이라고 말했다.

최근 경찰청은 화염병 시위에 강경 대응하겠다고 화염병전담기동타격대를 설치하고, (2면으로 이어짐)

주간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다산인권이 이번 호부터 주간(2면)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그동안 격주간으로 다산인권을 발행하면서, 곳곳에서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인권에는 양보가 있을 수 없다'는 응골찬 마음으로 인권 유린의 현장에 더 발 빠르게 다가가고자 합니다. 이제 저희는 더 강하게 '다산인권'이라는 불화살을 힘껏 쏘아 올리고자 합니다. 또한 참 인권세상을 향해 열심히 뛰고 있는 여러분들과 자주 만나보고자 합니다.

이번 호부터 칼럼 '인권의 눈'을 새로 써 주실 분들입니다.

- 김용한 불평등소파개정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김운자 한신대 국제경제학과 교수
- 조용희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중국상담실장
- 최강호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



미군의 인권과 한국인의 운명

김용한(평화운동가, 불평등한소파개정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지난 3월27일 슈위츠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 상원 군사위 내년 예산 청문회에서 "10년 동안 주한 미군의 주요 기지 46개를 25개로 대폭 줄이겠다"고 했다. 부시는 클린턴보다 주한미군을 일부 철수시킬 가능성도 높다.

'미군 기지 되찾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환영해야 할 일인데, 마음이 무거워 정말 전될 수가 없다.

미국이 미군 수를 줄이는 것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 무기 생산 업체들을 위한 한반도 전쟁이라는 무시무시한 저의가 깔려있기 때문이다.

지난 1994년 6월 미국이 평양을 공격해서 전쟁을 일으키려 했을 때, 우리나라에 있는 미군 가족과 미국인을 국외로 내보낼 계획까지 갖고 있었다. 그 사람들이 죽으면 안 되니까.

미국의 군수 업체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재래식 전쟁이 아니라, 고성능 최첨단 무기로 벌이는 전쟁을 해야 한다. 그런 전쟁에는 미군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 고가의 첨단 무기만 팔아먹으면 된다. 공연히 한반도 전쟁에서 미군이 한두 명이라도 죽거나 납치라도 당하는 날이면 미국의 언론과 여론은 난리가 날 것이고, 그러면 부시가 임기도 못 채우고 물러나야 할지도 모른다.

미국은 그런 걱정뿐이다. 이 속에서 우리 민족이 살길은 하나다. 미국에게 한반도 전쟁의 명분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남북이 화해와 평화와 통일의 길로 가지 않으면, 미국은 분명 자기들 살기 위해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매향리로의 초대

제3회 보름달축제
4월7일 매향리에서 열려

미 공군기의 폭음에 잠들지 못했던 매향리에서 평화의 노래가 울린다.

'동아시아의 평화, 환경, 인권을 생각하는 제3회 보름달 축제'가 오는 7일 오후 4시30분 화성군 매향리 주민대책위 사무실 앞마당에서 열린다.

이날 축제는 매향리를 비롯해 오키나와, 히로시마, 삿포르 등 일본 26개 지역, 중국 상하이, 미국 하와이에서도 동시에 열린다.

이번에 열리는 축제는 평화와 풍요를 기원하는 풍물패의 흥겨운 가락을 시작으로 시작된다. 특히 올해는 액막이이자 서로 맺혔던 것을 푸는 해방의 자리이기도 했던 지신밟기와 어민들의 풍어를 기원하는 풍어제로 출발한다. 매향리 어린이와 어린이 예술단 아름다운가 전하는 평화의 메시지, 달집 태우기와 평화의 배 퍼포먼스로 꾸며진다.

한편 이날 기지촌 매매춘 여성들의 전업과 재활을 위한 쉼터 의정부 '두레방'에서는 기지촌 여성들이 직접 그린 그림들과 공예품을 판매, 전시하고 대인지뢰피해자들의 모임인 '함께 가는 사람들'에서도 지뢰피해와 관련된 사진전을 마련한다. 또한 매향리 평화를 염원하는 사람들의 손도장을 찍은 걸개도 전시된다. **다신**

◀가는 길▶

◆ 수원에서 출발:

수원버스터미널에서 조암행

버스→조암에서 매향리행 시내버스

◆ 사당역 출발: 4월7일 오후 2시

사당역에서 행사참가자 수송버스

(1면에 이어) 고무충격총을 사용하겠다고 밝히는 등 무리한 시위진압에 따른 인권침해가 크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그동안 사건만 터지면 학생·민중진영을 우선 용의자선상에 놓고 무리한 조사를 벌여 문제로 지적돼 왔었다.

송원찬 다산인권센터 소장은 "경찰의 건수 올리기식의 무리한 수사가 여전히 횡행하는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시민들의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최근 경찰의 강경 진압 방침과 이 같은 수사관행에 따른 인권침해가 우려되고 있는 현실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지방경찰청은 2일 수원지방노동사무소 화재사건과 관련해 대학생 2명을 현주건조물 방화와 화염병 사용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5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다신**

다산인권

제15호

2001. 4. 11.(수)

매주 수요일 발행

●발행처: 다산인권센터 ●발행인: 송원찬 ●편집인: 다산인권편집위원회

442-380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1의6 법전빌딩 313호 ☎ 031-213-2105 Fax 031-215-4395 http://rights.or.kr e-mail: humandasan@hanmail.net

HOT NEWS

노동운동가 박태순 의문사 진상 밝혀야

9일 대책위 발족...의문사 10대 의혹 밝혀야

92년 8월29일 부천시 역곡동 포장기 제작공장에서 일을 마친 뒤 귀가하던 중 행방불명 됐던 노동운동가 박태순씨(당시 26세)가 의문의 죽음을 당한 것으로 밝혀진 것은 지난 2월이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진상규명 진정을 받아 조사한 끝에 박태순씨가 사건 당일 밤 9시55분께 시흥역에서 광주행 무궁화호 열차에 치여 사망했으며 신원불명의 변사자로 분류돼 용미리 무연고자 납골당에 안치돼 있다고 밝혔다. 행방불명된 지 8년 만에 비로소 처음으로 그의 죽음에 관한 진실이 한 겹 벗겨진 것이다.

그의 죽음에 얽힌 진상규명이 진척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일 '박태순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발족됐다. 이해학목사가 대책위원장을 맡았으며 김윤자민교협회장(한신대 교수), 김상근목사, 박정기 유가협회장, 한신대 교수평의회, 한신대 민주동문과 총학생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박태순씨는 한신대 철학과 85학번으로 2학년을 마친 뒤 수원과 부천에서 노동운동을 했으며 행방불명 당시 그는 병역 거부로 기무사의 추적을 받아왔다.

실종된 이후 가족과 그의 지인들은 신문에 실종자 광고를 내고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 끝내 찾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접수하면서 그의 시신을 찾게 된 것이다.

그의 죽음은 공안정국 하에서의 대표적인 의문사 사건이었다. 대책위는 이날 발족식을 갖고 사망 이후 신원불상으로 처리된 경우, 소지품의 행방,

지문조회 결과 및 담당자 신원 등 그의 죽음에 얽힌 10대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책위는 민주화 과정에서의 의문사 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 및 적절한 보상을 위해 싸울 것이다. 또한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운동을 벌이고 있다.

현재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박태순 의문사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기관의 관련 여부, 지문감식을 통한 신원확인 여부 따위를 중점적으로 조사에 들어갔다. **다신**

인권
단상

화염병 시위 배후자를 긴급수배한다

화염병 때문에 난리가 아니다. 정부와 경찰은 연일 화염병 시위 근절대책을 내놓고 있고 언론에서는 외국투자자들이 떠나간다고 아우성이다. 집회시 각서제출, 화염병 사용시 집회주최자 형사처벌, 감청·계좌추적을 통한 배후자 색출업단, 화염병 시위자의 공직제한 등 가히 초법적, 반 인권적 대책들을 남발하고 있다. 이런 정신나간 대책들이 누구의 머리에서 나오는 건지 기가 찰 노릇이다.

그 이면에는 화염병 시위를 포장해서 집회시위 자체를 무력화하고 분위기를 반전시키려는 공안당국 의도가 엿보인다. 한반도 직접사용하지도 않은 신종화염병을 경찰이 제조해서 성능시험까지 보이는 교묘한 언론플레이와 고무충격총 사용, 그리고 그 뒤를 잇는 화염병 대책들은 이러한 의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구시대적 유물인 화염병을 누가 불리하게 했는가? 누가 역사를 후퇴시키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은 어디에도 없다. 화염병시위는 바로 화염병을 권하는 사회에 대한 민중들의 분노의 표현임은 자명하다. 그리고 정부의 강경한 처방은 보다 더한 대응을 불러올 것 또한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화염병 시위의 배후자인 현 정권을 고발하고 긴급수배한다. 그 배후자는 성난 시민, 노동자, 학생들이 아니라 화염병을 던지게 만드는 바로 현 정권임을 밝히고 그리고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하자. 그래서 화염병을 우리 역사의 뒤안길로 과감히 내 던지자. 굿바이 화염병.

경기여연, 호주제폐지 앞장서기로

지난 7일 경기여성단체연합(이하 경기여연. 공동대표. 권미라, 오숙희)은 올해를 호주제 폐지 원년의 해로 정하고 16개 소속단체들과 함께 호주제 폐지운동본부를 발족했다.

그동안 여성단체들은 호주제가 남아선호사상을 부추겨 여야 낙태 및 심각한 성비불균형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이혼이나 재혼, 미혼모 가구들이 연 30%가 넘는 현실에서 호주제는 이들 가정의 자녀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지난 97년 3월 부모성 함께 쓰기를 시작으로 서명, 청원활동 등을 통해 호주제 폐지운동을 활발하게 벌여왔다.

경기여연은 부모성 함께 쓰기와 호주제 폐지 및 기본 가족별 편제방식(호주를 없애고 결혼한 부부와 그 미혼 자녀로 구성된 2대 가족관계를 기록하는 방식)의 도입을 위한 서명작업을 지속적으로 펼친다. 또한 호주제 폐지 및 불만전화를 운영하고, 호주제 폐지를 위한 연극 순회공연, 심포지엄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산**

국보법 폐지 공개서한 발송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11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며 수원지역 국회의원들에게 공개질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상정할 것을 요구하며 수원지역 국회의원들의 국보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입장을 묻는 내용의 공개질의서를 보낸 것.

이와 함께 시민사회단체들은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오는 14일까지 서면으로 전달할 것을 요구했다.

수원 시민사회단체들은 수원지역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국보법 폐지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일 계획이다. **다산**

부당노동행위에 총파업으로 맞섰다

건설운송노조 10일 대규모 집회, 중노위 합법적 파업권 인정

전국건설운송노조(위원장 장문기)는 최근 레미콘운송기사들에 대한 사측의 탄압을 규탄하면서 10일 총파업과 함께 서울역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고 14일까지 서울대에서 노숙투쟁에 들어갔다.

이날 집회에는 레미콘 운송기사 등 1천여 명이 참여해 서울역 광장을 가득 메웠으며 레미콘 차량 5백50여대가 동원돼 차량시위도 함께 벌였다.

운송노조는 노조인정, 매주 일요일 휴무 실시, 운반단가 현실화, 시간의 근로수당지급차 제도화, 공정한 배차제도화, 도급계약서 철폐 단협 적용

등 6대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날 인천, 부천, 전남지역의 운송기사들은 경찰의 회사 정문 봉쇄로 차량시위가 무산됐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는 7일 운송노조가 신청한 노동쟁의조정신청과 관련, "사용자가 적법하게 설립된 노조의 단체교섭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다"면서 "지금의 노동쟁의 상태에 이르는 과정에서 회사들의 잘못들이 크다고 판단된다"면서 노동쟁의조정종료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운송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었다. **다산**

매향리 주민들 1억3천만원 배상 판결

11일 서울지법, 미 공군폭격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서 원고 승소판결

11일 서울지법(민사37단독 장준현판사)은 매향리 미 공군폭격 주민피해대책위원장 전만규씨 등 화성군 매향리 주민 14명이 인근 쿠니사격장의 미군 전투기 사격 훈련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주민들에게 1억3천2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들이 그동안 공업지역에 해당하는 소음 수준에 노출돼 신체적, 정신적 피해와 생활에 방해를 받은 만큼 미군 훈련의 위법성이 인정된다"면서 "주민들이 소음피해 대책 수립을 국가와 미군측에 요청하기 시작한 지 20년 이상동안 피해 감소책을 취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처음으로 주한미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매향리사건과 유사한 다른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매향리 주민들은 1952년 미공군 사격장이 들어선 이후 오폭 사고 및 소음 등으로 부상을 당하는 등 신체적,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려 왔다. 그러나 이번 소송에서 재판부는 소음피해는 인정했으나 주민들의 오폭불안감이나 생업피해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각했다. 전만규위원장은 "법원의 배상판결은 당연한 결과이지만 50년 동안 주민들이 입은 피해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액수"라고 지적하면서 "주민피해에 대한 추가 소송과 사격장 철폐를 위한 법적 조치를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산**

다산 인권

제 16호

2001. 4. 18.(수)

매주 수요일 발행

442-380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1의6 법전빌딩 313호 ☎ 031-213-2105 Fax 031-215-4395 http://rights.or.kr e-mail: humandasan@hanmail.net

HOT NEWS

사법부, 레미콘불하차량 운송기사 "근로자"로 인정

인천지법 부천지원 17일 노조법상 근로자 결정, 운송기사들 노동3권 확보

회사로부터 차량을 불하 받아 근무해오던 레미콘불하차량 운송기사들이 노동조합법 상 근로자임을 인정하는 사법부의 결정이 최초로 나왔다.

인천지법부천지원(제2민사부 부장판사 이혁우)은 17일 레미콘사업주인 이순산업과 유진기업이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소속 부천 이순분회와 유진분회 운송기사들의 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며 접수한 '노동조합원활동금지처분'과 '업무활동금지처분', '업무방해금지처분'신청서에 대해 "사측의 운송차주들은 사측에 종속된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노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사법사상 최초로 운송기사들을 노조법 상 근로자로 인정한 것으로, 이제 레미콘불하차량 노동자들은 노동3권 등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받게 됐다. 또한 그동안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을 계약 해지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회사측의 행위가 부당하다는 것을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다.

이번 결정문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조합법상의 적용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완전 적용의 교두보가 됐다는 점에서 중요한 결정이라 할 수 있다. **(2면으로)**



Second Human Rights Film Festival

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선
주제가 있는 작은 인권영화제
두번째 이야기

충무로, 영화 그들의 노동 겨울밤이야기를 듣다 A Winter Night Story

작은 인권영화제의 두 번째 이야기는 홍상수 감독의 세 번째 영화 <오! 수정>의 촬영현장에서 시작된다. 촬영현장에서 감독과 스태프, 배우들은 최선을 다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지만, 촬영장에는 걸로 드러나지 않는 미묘한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

● 이 영화는 영화를 만드는 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의 노동문제를 정면에서 다루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대의 개런티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스타들의 그늘에서, 영화 스태프란 이름으로 자신들 노동의 존재조차 찾지 못하는 사람들은 한국영화에 애정을 갖고 있는 이들 모두에게 더 이상 수면 아래의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 영화 시간 : 4월 24일 오후 7시
- 상영 장소 : 다산인권센터 소극장(수원지방법원 정문앞 법전빌딩 313호)
- 감독 : 황 윤 / 제작형태 : DV 6mm / 상영시간: 61분

주제가 있는 작은 인권영화제는 매달 마지막 주 또는 셋째주 **화요일 저녁 7시**에 **다산인권센터 소극장**에서 상영됩니다. 앞으로 상영될 영화 상영작들은 장애인, 동성애자, 청소년, 아줌마, 민주화투쟁, 사파티스타, 시애틀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의 이야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집니다.

좋은 영화를 통해 특별한 만남을 갖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문의 031-213-2105)

“인권이 죽은 사회”

인권단체들, 공권력의 인권유린 강력 대응...규탄집회, 해외단체와 연대

2001년 4월, 한국의 인권은 죽었다.

생존권을 박탈당한 노동자들을 군화 발로 짓밟고 몽둥이로 사정없이 두들겨 때리는 경찰. 화염병 시위를 엄단하겠다는 전대미문의 기동타격대를 만들었고 시위대를 향해 고무충격총을 발사하겠다는 공권력.

인권을 약탈하는 점령군, 이것이 2001년 지금 경찰의 모습이자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는 정권의 모습이다.

국내 인권단체들은 지난 14일 인권운동사랑방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현 상황을 '인권이 죽은 사회'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미 인권단체들은 지난 13일 대우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을 향한 경찰의 무차별적인 만행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김대중대통령이 경찰 제복을 걸친 강패를 보내 연일 테러에 나섰다"고 분명하게 규정했다.

지난해 롯데호텔 사건을 시작으로 한국통신 사태, 대우자동차 해고노동자들에 대한 만행에 이르기까지 경찰이 보여준 일련의 행위는 인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게다가 경찰은 한술 더 떠 화염병 시위를 엄단하기 위해 화염병 타격 기동전담반을 구성했고, 고무충격총을 발사하겠다고 하고 있다.

또 화염병 시위자에 대한 공직 제한, 집회시복면 착용 금지, 평화집회를 하겠다는 각서 제출을 조건으로 집회신고를 받겠다는 등 헌법에 보장돼 있는 기본적인 권리마저 침해하는 조치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공권력이 국민들을 향해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날 회의에서 인권단체들은 이 같은 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의 현실을 그대로 묵과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들은 해외 인권단체들과 연대활동을 펼치는 것과 동시에 인권조사단을 구성해 '부평만행'을 조사하고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또 1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 탑골공원에서 민가협이 목요일 집회에 공동 참여해 폭력 경찰에 의한 인권유린을 규탄하는 집회를 갖기로 했다.

한편 '4월10일 부평만행' 피해자와 인권·사회단체들은 17일 이무영경찰청장, 민승기 전 인천지방경찰청장, 강원지방경찰청 전투경찰대 이기호 중대장 등 경찰관계자와 폭행에 가담한 전투경찰대원들을 살인미수, 폭력행위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고발했다. [더신 투쟁중이다. [더신

(1면에 이어) 이 소송을 맡았던 김철준 변호사(법무법인 다산)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에 대한 논란이 많았는데 이번 결정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노동조합법상 합법적인 근로자로 인정받음으로써 노동3권을 보장받게 됐다"며 "사용자들은 이제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걷고 근로자들의 정당한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레미콘불하차량 노동자들은 지난해 9월22일 영등포구청으로부터 노동조합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을 설립했다.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은 32개 레미콘사업주들을 상대로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서를 접수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7일 노동쟁의조정종료 결정을 하여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은 합법적인 단체행동권을 획득했다.

현재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2천여 조합원은 지난 10일부터 노동조합 인정, 단체교섭요구 등 6개항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고 현재까지 노숙 투쟁중이다. [더신



주제가 있는 작은 인권영화제 상영 일정표

4월 24일	영화, 충무로 그들의 노동 겨울밤이야기를 듣다 (A Winter Night Story)
5월 29일	이반, 우리 이웃의 이야기 이발소異씨 (Uncle 'Bar' at Barbershop) sugar hill 신자유주의 no! 자본의 세계화
6월 26일	사파티스타
7월 24일	세계를 뒤흔든 5일, 시애틀 투쟁
8월 28일	끝나지 않은 전투, 민주주의여 4월9일
9월 25일	장애인 자매의 일상 이야기 팬지와 담쟁이
10월 23일	한국 독립영화, 인권을 말하다 구타 유발자... 잠들다 (Four million blows) 남정순, 엄마누라춤 (Don't cry Mommy)

“미온적 태도...눈치보기”

수원 국회의원들 국보법 질의서 답변

지난 11일 수원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이 발송한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국회의원 공개질의서와 관련, 수원지역 국회의원들이 답변을 보내왔다.

우선 답변을 보면, 남경필 의원(한나라당)은 국가보안법 중 반인권적 요소가 있는 일부 조항에 대한 개정 입장을 밝혔다. 남의원은 한나라당내 미래연대에서 개정안을 마련, 당론을 거쳐 제출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종희 의원(한나라당)은 미래연대 소속으로 남경필 의원과 동일한 입장이며 국가보안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신현태 의원(한나라당)은 북한의 실제 인정, 대화, 교류를 통한 남북간의 상황 변화에 따라 보다 신중하게 논의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보내왔다.

국회의원들의 답변과 관련해 다산인권센터 송원찬 소장은 "신현태 의원은 국내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조차 없으며, 또한 개정안에 동의하는 두 의원 역시 중요한 7조의 찬양, 고무의 부분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내 보수파들의 반발과 당내 역학관계를 이유로 보다 적극적인 시도를 유보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진다"라고 말했다.

송소장은 수원지역 시민단체들과 함께 국회의원들의 답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국회의원들에게 다시 전달하고,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항의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신

**인권침해 사례
제보·상담 받습니다
031-213-2105**



국경 없는 마을을 향하여

조용희목사/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중국담당

얼마 전 대우자동차 조합원들을 상대로 자행된 경찰의 폭력진압과정이 담긴 동영상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무자비하게 짓밟고 곤봉으로 치고 방패로 내리찍는 등 차마 필설로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의 잔인한 폭력이 마구 자행되고 있었다.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이 땅에서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이 어떻게 그토록 잔인하게 국민에게 폭력을 가할 수가 있을까?

한국의 노동자들이 이렇진대 하물며 현재 34만 명이나 되는 외국인노동자들의 현실은 어떨겠는가. 현재 전국에 있는 외국인노동자상담소에는 임금체불을 비롯해 신체적 가혹행위 등으로 상담해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만 해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4만5천여 건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외국인노동자를 관리하는 관공서의 횡포다. 단적인 예로 지난 1월경 안산역에서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과 직원들이 나와서 불법체류자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한국에 관광차 나온 외국인이 단지 여권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제로 수갑을 채우고 수감했다.

당시 안산외노센터는 이에 항의하며 관계자 문책을 요구했다. 이 일이 벌어진 이후부터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안산외노센터를 에워싸듯 집중표적 및 보복적이고 테러를 연상케 하는 단속을 벌였다. 이에 항의하는 안산외노센터 관계자들에게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센터가 무슨 성지냐?" "무슨 특권의식을 가지려고 하느냐?" "다시 전화하면 죽여버리겠다"는 등 언어 폭력과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

안산외노센터는 법무부장관 앞으로 항의서한을 두 차례나 보냈고,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또한 두 차례나 항의집회를 하였지만 아직까지 사과는커녕 아직까지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고 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외국인노동자들에게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고 있다. 또한 그들에게 유일한 보금자리인 단체도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횡포에서는 예외가 아니다. 대우자동차 폭력사태 비디오를 보면서 자꾸만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이 오버랩 되었다.

현재 안산외노센터에서는 '국경 없는 마을'을 운영하고 있다. 국적의 구별 없이 모든 시민과 외국인노동자가 하나되어 불신의 벽을 없애고 함께 사는 마을이다. 정글의 법칙을 넘어서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문화, 사회적 권익과 차별 없는 인권보장, 사랑과 평화, 공동체로 이루어지는 삶의 질 형성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염원인 것이다.

외국인노동자들에게 대한 차별과 폭력이 난무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국경 없는 마을'이 계관으로 바위 치기적은 아닌지, 스스로 자문도 해 본다. 그러나 현실세계가 견고한 벽으로 둘러싸여 있긴 하지만 그래도 국경 없는 마을을 통해 그 벽을 더디지만 조금씩 무너뜨릴 것이란 희망을 가져본다.

다산 인권

제 17호

2001. 4. 25.(수)

매주 수요일 발행

442-380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1의6 법전빌딩 313호 ☎ 031-213-2105 Fax 031-215-4395 http://rights.or.kr e-mail: humandasan@hanmail.net

HOT NEWS

91년 5월, 그 죽음을 기억하는가

강경대군 비롯한 11명의 젊은이 폭압정치에 죽음으로 저항...10주기 맞아 잊혀진 역사 재조명

91년 5월을 기억하는가. 불온한 시대, 11명의 젊은이들이 '민주주의'를 외치며 산화했다. 그러나 그 해 5월은 역사 속에서 묻혀 버렸다. 그리고 10년이 흘렀다. 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이하 국민연대)와 열사 추모회들은 올해 10주기를 맞아 '91년 5월'을 재조명하는 행사들을 마련한다.

우선 강경대 열사 추모회는 26일 10년 전 바로 이날 노태우정권 타도 및 학원자주화를 위한 시위 도중 백골단의 쇠파이프 난타로 숨진 고 강경대군(당시 19세. 명지대 경제학과)을 기리는 추모제를 연다.

추모회는 이날 오후 2시 명지대에서 열사정신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오후 5시 추모제, 오후 7시30분 추모 문화제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추모자료집과 91년 잔인한 봄을 기록한 CD를 제작했다.

국민연대도 오는 5월9일 '제12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 준비위원회'와 함께 '91년 5월 열사 10주기 기념사업 준비위원회 결성식'을 갖고 91년 5월을 재조명하는 학술제 및 문화제를 준비하고 있다.

91년 5월은 제2의 6월 항쟁이라 불릴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를 외치며 거리로 나왔고, 스스로 몸을 불살랐다. 대학마다 학생들의 등록금 현실화 요구와 함께 학원자주화 운동이 들불처럼 번져나갔고, 정치적으로는 초반의 수서비리 사건을 시작으로 노태우정권의 도덕성을 의심케 하는 일련의 사건들이 연달아 터졌다.

특히 공안정권이었던 당시, 민주주의를 외치며 집회에 참가했던 이들에게 가한 폭력진압은 노정권의 폭압정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케 했다. 강경대군이 시위 도중 공권력의 구타로 숨진 이후 폭압정치에 대한 분노는 건잡을 수 없이 번졌다. 대학생들은 강경대군을(2면으로→)

레미콘조합원들, 한밤중 용역들에게 집단 구타당해

구로 제일레미콘 10여명 조합원들 집단폭행에 감금, 처량 및 통장 빼앗겨

지난 22일 새벽 5시 30분쯤 구로제일레미콘(대표이사.이석주)이 용역깡패를 동원해 합법적인 노동쟁의를 하고 있는 10여명의 조합원들을 집단폭행, 감금하고 조합원들 소유의 레미콘 차량 및 통장 등을 빼앗는 절도행각을 벌였다. 전국건설운송노조(위원장. 장문기) 구로제일분회는 지난 2월 28일부터 3차에 걸쳐서 회사측에 단체교섭요청을 했으나 회사측은 이를 무시했다. 제일분회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지난 3월28일 노동쟁의조정신청서를 접수하고 조정종료결정을 받아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었고, 지난 10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조합원들은 22일 새벽 분회 사무실로 난입한 회사측 고용 용역원 50여명에

의해 속옷바람으로 밖으로 끌려나가 집단으로 구타당하고 감금되어 조합원중 1명은 구급차로 병원에 실려가 현재 치료를 받는 중이다. 또한, 이들 용역들은 분회 사무실에 있던 500여만 원이 든 분회소유 통장과 출금도장 등을 훔쳤고, 공장 안에 있던 조합원 소유 레미콘 차량을 렉카로 끌여갔다. 이날 아침이 되어서야 용역깡패들에게서 풀려난 조합원들은 현재 공장정문을 지키고 있는 용역깡패들 때문에 공장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다. 제일분회 조합원들은 23일 이들 용역원들을 폭력행위와 절도로 경찰에 고발했다. [다산]

최형규 항소심서 선고유예로 석방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구속돼 1심에서 실형 8개월을 선고받았던 최형규씨(27)가 24일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로 풀려났다. 고등군사법원(재판장 김홍석)은 이날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군 복무 중인 최씨는 불법 출판물을 소지하고 이적단체를 구성해 활동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으로 지난해 11월17일 구속됐었다. [다산]

여성 범죄 법적 심판받는다

전쟁이나 분쟁지역에서 자행되는 여성에 대한 범죄가 법적 심판을 받게 됐다. 제 57차 유엔인권위원회는 전쟁범죄와 인권침해 행위의 책임을 규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여성폭력과 관련된 사례는 반드시 기소해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권고를 담은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유엔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 인권위는 23일 본회의에서 한국, 독일, 스웨덴, 캐나다 등 39개국이 공동 제안한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에 관한 결의안 초안을 상정해 표결 없이 53개국 회원국들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본문 제1항에서 일본군대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과 희생자에 대한 보상책임 인정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1면에 이어) 죽음으로 몰아간 노태우정권 퇴진을 외치며 거리로 모였다. 그 해 4월29일 전남대 박승희양이 폭력살인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분신했고, 이를 뒤인 5월1일 안동대 김영균군이 그 뒤를 따랐다. 또 5월3일



민주주의의 틀을 짜야 한다

김윤자교수/한신대 국제경제학과

오랜 권위주의적 통치를 거쳐오면서 우리는 자신의 권익을 주장하는 것에 익숙지 않았다. 90년대 이후, 여전히 미흡하기 짝이 없지만, 절차적 민주주의가 일정 정도 확보되면서 여기저기서 내 권익을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불거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내 권익을 주장하는 것에 익숙지 않아 때로 내 권익을 앞세워 남의 권익은 돌아보지도 않는다는지, 소속 집단이나 사회 전체의 이해관계는 아예 안중에도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 내 권익의 관철을 위해 상대의 사생활을 모독하는 인신공격도 마다하지 않는다.

아마도 이 모든 광경이 우리가 전에는 아예 체념했던 자신의 권익에 눈을 떠가는 과정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잘 경과하고 나면 나의 권익을 주장하는 방법, 그러기 위해 남의 권익을 존중하는 훈련, 그리하여 사회 전체 속에서 각자의 주장과 이익을 조정하는 훈련들이 쌓여갈 것이다. 무엇보다도 남의 주장에 귀기울이는 훈련, 비판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인식, 권익은 책임과 불가분이라는 인식, 이런 것들이 공유되어야 하리라.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 훈련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전제조건이 요구된다. 노동복지와 노동법규의 미비, 번번이 반복되는 노사정 합의, 휴지조각이 되어버리는 노사협약, 무엇보다도 노부모 부양과 자녀교육 등 가족의 생계가 걸린 구조조정에서 자신은 한마디 의견도 개진할 장치가 없는 채 거리로 내몰려야 하는 우리의 의사결정구조, 이런 것들이 극렬한 저항을 불러오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토론문화는 결코 훈련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어서 그럴 수 있는 정치 경제적 개혁을 전제하는 것이다.

'강경대 학우 폭력살인 한 노태우정권 타도를 위한 결의대회' 도중 천세용군(경원대)이 분신했던 것을 비롯해 노동운동가 박창수,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 전남대 운용하 등 11명의 젊은이들이 꽃다운 나이에 운명을 달리했다. 강경대 열사 추모회 문치용씨는 "우리 현대사에서 단일한 사안으로 91년 5월처럼 많은 이들이 죽은 적은 일찍이 없었다"면서 "89년 문익환목사 방문사건 이후 공안통치가 극에 달하던 91년 강경대열사를 비롯한 열사들은 당시의 시대가 만들어낸 필연적인 비극이었다"고 말했다. 91년은 이후 우리 사회의 향방을

예견하는 해였다. 소비문화중심의 사회로의 진입, 학생운동의 침체기, 신세대 담론의 등장, 운동진영의 분화... 이런 상황적인 변화들은 91년 5월 열한 명의 젊은이들의 죽음이 새로운 시대의 전망을 여는 밑거름으로 거듭나지 못하게 했던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올해 10주기를 맞아 잊혀졌던 '91년 5월'이 '폭압정치에 맞선 숭고한 저항'으로 되살아날 것이다. [다산]

△5월9일 오후 2시 '91년을 말한다'(집체토론)/ 오후 6시 문화제
△5월12일 오후 1시 학술제
-91년 5월, 죽음과 폭력의 정치를 넘어서

다산인권

442-380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1의6 법전빌딩 313호 ☎ 031-213-2105 Fax 031-215-4395 http://rights.or.kr e-mail: humandasan@hanmail.net

HOT NEWS

공권력 인권침해 더는 안 된다

인권위법 30일 국회 통과...실효성 발목 잡는 조항 여전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인권위법)이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4년만에 결실을 맺게 된 인권위법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조사해 규명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는 점에서 중요한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인권위법은 수사기관이 조사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인권위가 진정을 할 수 없으며 인권위의 출석 요구 등에 불응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없는 등 인권위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데는 여전히 한계를 갖고 있다.

▲인권위의 권한과 구성

이번에 통과된 인권위법에 따르면 인권위는 독립적인 국가기구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민간진영이 요구했던 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인권위원은 대통령이 지명한 4인과 국회 추천 4인, 대법원 지명 3인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에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인권위원들은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조사권과 청문회 개최권, 자료제출 요구권, 증인출석 요구권과 함께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인권위의 활동

우선 국가기관 등에 의한 인권침해

행위와 직장이나 교육시설에서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인종, 사상, 동성애, 전과 등의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받는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권이 부여됐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인권위는 진정된 사안을 조사해 해당기관에 시정권고 하거나, (2면으로)

제 18호

2001. 5. 2. (수)

매주 수요일 발행

노동절, 그 이후

-제 111주년 노동절 기념대회를 보고-

지난 1일은 제111주년 노동절이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각각 서울 대학로와 서울역 일대에서 기념 집회를 가졌다. 이날 서울 시내에는 2만여 노동자, 학생, 시민들의 함성이 울려 퍼졌다.

그 어느 때보다도 주최자들이나 참석자들은 상기된 표정이었다. 집회참가자의 수도 그렇지만 그동안 산개되다시피한 노동자들의 힘이 단일한 입장과 주장으로 규합, 표출되고 비정규직, 외국인노동자, 장애인등 다양한 세력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북돋아져 터져 나오는 현실을 이 집회가 보여주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대중정권의 실정들 즉, 공교육, 건강보험 등에 대한 다양한 주장들이 현 정권을 전방위로 포위하며 신자유주의 반대와 김대중정권 퇴진의 대세를 반영하기도 했다. 비록 이것이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힘으로 표출되는 상황은 아니라 하더라도 말이다.

하지만 여전히 남은 과제는 산적해 있다. 앞서 정리한 많은 구호나 주장들이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 단일한 대오와 힘으로 6월 총파업을 추동해 내고 관찰시키기 위한 민주노총의 고민은 거기에 있다. 어쩌면 현 정세는 노동자들의 주동적 힘이기보다는 김대중정권의 실정으로 인한 민생파탄의 이완된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역전시킬 힘을 모아내고 있는지 이번 집회를 냉철히 평가해 보아야 할 것이다. 언론에서는 이번 노동절 집회가 무사히 마쳤다고 국민의 입장인양 안도의 숨을 쉬고 있다. 민주노총도 광화문까지 행진하지 못한 것을 몇년만에 장악한 시청 앞의 상징적 정리집회를 감동으로(?) 마무리했다. 유럽을 비롯한 전세계의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숨막히는 투쟁적 메이데이 집회가 신문 한권을 장식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노동절다운(?) 행사를 기대한 것은 소아병적 생각일까? 이날 정리집회에서 밝힌 단병호 민주노총위원장의 '6월 12일 광화문 진격투쟁'이 힘있게 관철되기를 기대한다. 우리 모두와 함께... [다산]

'에바다' 민주재단 구성으로 정상화 길 찾아

지난 30일 추가 선임된 이사 송탄등기소에 등기신청

파행으로 운영되던 사회복지법인 에바다복지회(이사장 김종인 나사렛대학교수)가 새로운 이사진의 참여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4년여 제 계속되고 있는 '에바다 사태'는 지난 3월 2일 에바다복지회 이사회가 '신임 이사 3명 선임과 신임 교장 임명 등'을 결정하면서 정상화가 기대됐었다. 그런데 갑자기 구 재단측 이사들이 결정내용을 거부하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는 규탄집회를 통해 구 재단측의 합의 번복을 규탄하고 즉각적인 이행을 주장해왔다. 결국 지난달 27일 구 재단측 이사들은 이사회 결정내용을 인정했고, 곧바로 지난 달 30일 오후 4시경에 평택지원 송탄등기소에 추가이사(이찬진 변호사, 윤귀성 치과원장, 우철영 목사) 선임 등기신청서를 접수했다.

신임 이사진이 등기부상에 등재되면 그동안 민주적 이사진 구성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였던 문제들이 일단락 될 것이다. 그리고 공은 이제 에바다복지회 이사회로 돌아가게 됐다.

하지만 아직도 정상화의 길은 멀기만 하다. 현실적으로 이사진 구성에서 구 재단측과 신임 이사진측이 5명 대 5명 구도이어서 파행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사회의 안정적 운용이 이루어지려면 이사회의 구성을 보다 민주적으로 재편해야 한다. 이와 함께 아직도 농아학교와 농아원의 운영에 개입하고 있는 비리재단측 인사의 고리를 끊는 것 또한 우선 과제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동안 파행적 운영으로 인해 농아원생들의 실질적인 복지증진과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에바다복지회로 거듭나는 쇄신

등 실질적인 정상화를 위한 시스템과 프로그램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에바다연대회의 관계자는 "다시금 96년부터 시작된 에바다 투쟁의 정신을 돌아보고 장애인 인권과 에바다복지회의 정상화를 위해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혜가 더욱 필요하다"며 아직도 에바다 투쟁을 끝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다산]

나와 세상을 사랑하자

수원지역단체, 5일

어린이청소년한마당 열어

오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2001수원어린이청소년한마당'을 수원청소년문화센터에서 개최한다. '나와 세상을 사랑하자'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4일 '초록 동요제'를 시작으로 23일 '수원청소년 리코더 합주' 행사까지 보름동안 진행된다.

어린이날 행사는 '가장 가까운 과거 돌아보기-흑백 TV와 검정고무신' 전시회, 어린이 도서전시회, 인형극·아동극 공연 등으로 꾸며지며 전교초 중등지회가 마련한 새끼 꼬기·굴렁쇠 굴리기 등 전통놀이 한마당이 5일 펼쳐진다.

다산인권센터는 어린이 인권캠페인, 인권거리미술전, 어린이인권협약 퍼즐 맞추기 등의 행사를 진행한다. [다산]

경기시민운동연대준비위 발족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3일 가칭 '경기시민운동연대' 준비위원회를 발족한다. 지역단체들은 총선시민연대 활동을 토대로 단체들간의 연대활동과 지역현안에 대한 공유를 강화하기 위해 연대기구를 발족하기로 했다. [다산]

인권침해 사례
제보·상담 받습니다
031-213-2105

다산 인권

제 19호

2001. 5. 9.(수)

매주 수요일 발행

●발행처 : 다산인권센터 ●발행인 : 송원찬 ●편집인 : 다산인권편집위원회

442-380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1의6 법전빌딩 313호 ☎ 031-213-2105 Fax 031-215-4395 http://rights.or.kr e-mail: humandasan@hanmail.net

HOT NEWS

경기남부지역 공안탄압 진행 중

지방노동사무소 사건 구속자 속출, 경찰 조직확대 · 인권침해수사에 학생진영 반발

지난달 8일 새벽 발생한 수원노동사무소 화염병 투척사건 용의자로 우용해군(한신대 96학번)이 7일 밤 학교 교문 앞에서 긴급체포 됐다. 이로써 이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대학생 5명이 구속됐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이 사건에 연루된 이들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8명을 수배하고 경기남부 지역 대학들을 상대로 계속 수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 경찰의 수사가 대학생들의 인권침해와 더불어 이 사건을 계기로 과거 방식대로 학생운동의 조직사건으로 확대하려는 의도가 엿보여 학생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경기남부 대학들이 주축이 돼 구성된 '공안탄압, 인권탄압 분쇄를 위한 경기지역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달 28일 경찰의 반 인권적인 수사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경찰의 학생운동 탄압을 비판했다. 또 전국에바다대학생연대회의도 9일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수사와 관련, '경기남부지역 불법공안탄압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경기남부지역 대학생들에 따르면 현재 경찰이 수배 학생들을 잡겠다고 교내를 순찰하고, 주변 인물에 대한 탐문수사를 벌이면서 인권침해수사는 물

론 무리하게 확대수사를 벌이고 있다. 학생들에 따르면 경찰은 이 사건에 중앙대 학생이 가담한 것으로 파악하고 저녁마다 2~3대의 차량으로 학내를 순찰하고 있다고 한다. 또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폭언과 구타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예로 아주대 학생 두 명이 연행돼 폭언과 구타를

당하면서 수사를 받은 뒤 6시간만에 나왔다고 밝혔다.

또한 수배중인 학생들과 친분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수사로 자취방을 찾아 오고, 핸드폰 통화내역을 확인해 "누구와 통화했느냐" "어디에 갔다왔느냐" 등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2면에 이어)

"행령 임금 지급하고 노조 인정하라"

경기노조 안산분회 조합원들, 청소년업체 노조탄압 맞서 싸움

안산시 8개 청소년업체 소속 1백16명 환경미화원들이 사측의 단체교섭 불응과 부당노동행위에 강하게 반발하며 연일 집회를 벌이고 있다.

조합원들은 사측이 안산시로부터 노동등급으로 청소년취업 계약을 했으나, 실제로 조합원들에게는 계약서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이들은 지난해 1월 설립된 경기도 노동조합에 올 3월 가입해 안산분회를 결성했다.

조합원들은 사측에 계약서에 명시된 임금 지급을 포함해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불응하고 있다. 오히려 사측은 대체근로를 실시하고, 노조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으며 조합원 2명을

해고했고, 9명을 징계했으며 20여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특히 안산분회 조합원들에 따르면, 이들 8개 청소년업체들은 지난 3월27일 사측의 친인척, 허위인원 등으로 구성된 단위노조를 결성했다는 것. 조합원들은 8개 업체 노조 직인이 모두 똑같고, 조합원의 구성원으로 볼 때 유명노조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미숙 조직국장은 "사측이 유명노조를 만들어 노조를 탄압하고 임금을 행령하고 있는데도 안산시는 책임 있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조합원들은 노조 인정, 부당노동행위 중지 등을 요구하며 경찰과 대치 중이다.(다산)



소년법에 대한 범죄자의 시선을 거두어야

최강호운영위원/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소중한 가족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가정의 달 5월이 돌아왔다. 그러나 얼마 전에 발표된 소년법(만 20세 미만의 범죄자)에 대한 통계자료는 그늘진 청소년들의 자화상을 보는 것 같아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한다.

서울보호관찰소는 지난 한해동안 소년법에 대한 환경, 전과 등을 조사해 모두 708건의 분석 결과를 도출했다. 이 결과를 보면 소년법이 재범을 하는 시기적인 간격은 1~5개월이 약 34%, 6~10개월이 약 24%로, 소년법의 약 58%가 10개월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11~15개월의 재범률도 약 14%에 이르러, 3년 이내에 재범을 하는 소년법 약 12%까지 포함시킨다면, 약 84%에 이르는 거의 대다수 소년법이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자퇴 등으로 학교교육에서 이탈한 소년법의 비율이 전체 소년법의 약 68%에 달했으며, 소년법의 약 45%가 이혼한 가정 등에서 자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필자가 경찰서나 구치소에 갇혀 있던 소년법들을 만나본 경험에 의하면, 범죄자세가 절도, 폭력 등으로 상대적으로 경미하며, 자기에게 불리한 범죄사실도 솔직하게 말하고, 부모님 이야기가 나오면 눈물을 머금을 정도로 마음씨가 착한 아이들이 대부분이어서, 소년법들을 범죄자가 아닌 보호를 요하는 우리 아이들이라는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통해 사전적, 사후적 프로그램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소년법들을 포함한 청소년들 모두 밝고 건강한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어른들 세상이 맑고 정의롭게 바뀌기를 간절히 바란다.

다시 보는 인권 영화

'5.5인권영화제' 18일 개막...팔레스타인 분쟁 작품 대거 선보여

'5.5 인권영화제-다시 보는 명작선'이 인권운동사랑방의 주최로 18일부터 23일까지 서울 광화문 아트큐브에서 개최된다. 올해는 지난 5년간 상영됐던 작품들을 다시 보는 자리로 마련된다. '다시 보는 명작선'은 인권운동사랑방이 추천하는 세계명작 인권영화 및

인기작품들로 꾸며진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분쟁과 인권의 문제를 다룬 영화들이 대거 선보이는 '이슈포커스'코너. 또 '애니휴먼'코너에는 그 동안 인권영화제에서 상영됐던 애니메이션들을 다시 볼 수 있다.(다산) 문의 02-741-2407

민주노동당 권선지구당 창당

민주노동당 권선지구당(위원장 김현철) 창당대회가 9일 오후 7시 수원시

체육회관에서 열린다. 김위원장은 "앞으로 지역 주민들과 밀접하게 결합해서 진보정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다산)

시대 읽는 '청년광장' 열린다

수원새시대청년연대는 시대의 현안을 주제로 한 강좌 '제 1회 청년광장'을 오는 16일부터 6월3일까지 3주간(매주 수, 목요일 오후 7시30분) 서울농생대학교 강당에서 마련한다.

이번 강좌는 NMD, TMD 구축문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의 의미와 한반도의 앞날, 주한미군문제, 대우자동차정리해고 문제, 언론 등 6가지 분야의 현안들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강사는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 최규열 민주노동당자주통일위원장, 김용환 불평등한 SOFA개정국민행동 집행위원장, 위원장, 김여준 판지일보 총수 등. (문의) 031-232-2729/ 3만원

다산 인권

제20호

2001. 5. 16.(수)

매주 수요일 발행

●발행처 : 다산인권센터 ●발행인 : 송원찬 ●편집인 : 다산인권편집위원회

442-380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1의6 법전빌딩 313호 ☎ 031-213-2105 Fax 031-215-4395 http://rights.or.kr e-mail: humandasan@hanmail.net

HOT NEWS

사학 민주화 앞장섰던 교수노조 이용구 위원장 구속

10일 재단 비리 파헤친 이교수 명예훼손으로 구속...사학민주화 탄압 교수노조 등 10개 단체 반발

사학 민주화를 위해 활동해온 전국교수노동조합(준) 위원장 이용구교수(전 경문대 교수)가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됐다.

이교수는 경문대 교수로 재직 당시 이사장인 전재욱씨가 교비를 유용하고 비민주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는데 반발, 재단비리척결 및 사학 민주화를 위해 싸워왔다. 이 과정에서 이교수는 전씨가 지난 92년 동우공업전문대학을 설립하면서 당시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이었던 모영기씨에게 설립인가 대가로 8천만원을 건넸다는 사실을 언론을 통해 확인하고 이를 유입물에 실어 배포했다.

그런데 모씨는 8천만원 뇌물수수에 대해 지난 95년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았다면서 이교수를 수원지방법청 청 평택지청에 고소한 것. 평택지원은 지난 11일 이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 무리한 구속이며 사학민주화운동에 대한 탄압이라는 비판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지난 4월 발족된 전국교수노동조합(준)을 비롯한 10개 단체들은 '사학 민주화 탄압과 이용구위원장 부당 구속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를 구성한 뒤 지난 12일 성명서를 내고, 이교수를 구속한 것은 자의적인 법 해석에 따른 것이며 사학 민주화를 탄압하는 의도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15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앞에서 항의집회를 가졌고, 구속적부심리가 열린 16일 오전부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실 그 동안 검찰은 이교수가 사학 비리의 책임자라며 구속 수사하라고 요구했던 전씨에 대해서는 교비 2백75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불구속 기소한 반면, 오히려 재단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활동해온 이교수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한 것이다.

교수노조는 모씨가 지난 89년 전교조 교사 대량해직을 주도했던 점을 들면서 이번 이교수에 대한 구속이 교수노조에 대한 탄압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이들은 "재단의 비리를 폭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명예훼손사건에(2면으로)

'학교 화장실 청소 대행' 선심으로 신문구독을 확장

수원 일부 초등학교, 청소대행 조건 학생들에게 소년조선일보 구독 권유

수원시내 일부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신문구독을 종용하고 있어 학부모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학교측의 이 같은 신문구독 권유가 특정어린이신문업체로부터 화장실 청소를 대행해주겠다는 조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D초등학교는 얼마 전 어린이신문 구독을 권장하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학부모에게 발송했다.

이 학교 이모 학부모는 담임선생님이 소년조선일보를 보면 화장실 청소를 안 해도 된다고 했으며 아이가 신문을 봐야 한다고 졸랐다고 말했다.

S초등학교 민모 학부모도 "딸아이로부터 D초등학교에서와 같은 내용의 말을 들었다"며 "아이들에게 청소 대행을 미

끼기로 신문구독을 늘리는 것은 부도덕할뿐더러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겠느냐"고 지적했다.

실제로 H초등학교의 한 관계자는 학생 1천800명중 200명이 소년조선일보를 구독하고 있으며, 신문업체에서 파견한 사람이 화장실청소를 대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수원지회 관계자도 "소년조선일보를 구독한 일부 학교에서는 신문 사측에서 파견된 사람이 나와 화장실 청소를 대신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소년조선일보 수원 담당자는 "가정 배달시 들어가는 배달료를 줄여 학교 화장실 대행을 해주는 것"이라며 "강요는 없었다"라고 말했다. [다산]



매항리 승소, 그 의의와 문제점

김용한 (불평등한SOFA개정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매항리 주민들이 지난 4월 11일 승소했다. 50년 동안 폭격 전쟁을 겪고 있는 분들의 첫 승소라 의의가 있다. 미군 폭격 훈련 피해를 국가가 처음 인정한 것이나, 앞으로 미군 기지 주변 주민들도 배상 받을 길이 열린 점은 높게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다. 피해는 50년인데, 배상은 3년 치뿐이다. 결과를 비웃기라도 하듯 미군은 폭격을 계속한다. 이번에 승소한 분들 말고도 똑같은 피해나 더 큰 피해를 당하는 분들은 한 푼도 배상 받을 수 없다. 오늘 당장 소송을 해서 3년 넘게 싸워 이겨야 3년 치만 받을 수 있다. 공무원들의 분열 공작 따위에 넘어가 소송하지 않았을 뿐인데.

국가는 '울지 않는 애기 젖 주냐? 법 위에 낮잠 자는 자의 권리는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국가가 아니어도 스스로 자기 권리를 찾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몰라도, 국가한테 방치 당하면서도 세금은 꼬박꼬박 뜯기는 시골 무지랭이들의 권리는 국가가 지켜 줘야 한다.

전국 93개 미군 기지 주변 주민들도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국가는 모든 피해 주민에게, 그것도 3년이 아니라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지난 57년 피해를 모두 배상해야 한다. 세금은 그렇게 써야 한다. '국가 안보' 때문에 "개인 안보"를 짓밟힌 분들의 인권을 위해 쓰는 돈이 아깝다면, 모든 폭격장을 당장 폐쇄하고, 모든 미군 기지를 당장 돌려 받아야 한다.

작은 인권영화제 세 번째 이야기 ■ 슈가 힐, 이발소 이씨 ■

편견 속에 갇힌 이반, 그들의 따스한 삶

작은 인권영화제 세 번째 미당은 한국에서 동성애라는 성적 지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 슈가 힐은 동성애를 숨기고 결혼한 게이의 이야기입니다. 이발소 이씨는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이란 폭력구조에서 아프게 그러나 아름답게 동성과의 사랑을 엮어온 50대의 인생을 담담하게 풀어내고 있는 영화입니다.
- 이번 영화제에서는 동성애자 인권연대측과의 대화의 시간도 마련됩니다. 이반들의 삶과 우리의 편견을 낱알이 파헤쳐보는 뜻깊은 시간에 초대합니다.

일시: 2001. 5.29(화) 저녁 7시/ 장소: 다산인권센터 소극장
문의: 031-213-2105

● 작은 인권영화제는 매달 셋째주 또는 마지막주 화요일에 상영됩니다. 상영프로그램을 받고 싶은 분은 다산인권센터로 연락주세요.

다산인권

제21호

2001. 5. 23.(수)

매주 수요일 발행

●발행처 : 다산인권센터 ●발행인 : 송원찬 ●편집인 : 다산인권편집위원회

442-380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1의6 법전빌딩 313호 ☎ 031-213-2105 Fax 031-215-4395 http://rights.or.kr e-mail: humandasan@hanmail.net

HOT NEWS

'전시에 학생들 강제 동원하겠다'

오마이뉴스, 전시 학도호국단 운영 문건 공개...정부의 '군국주의 발상' 충격 일파만파

정부가 전시에 고등학생을 준 군사조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학도호국단'을 운영한다는 내용의 문서가 최근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를 통해 공개되면서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전라남도 교육청은 2001년 3월6일 시행일자로 찍힌 '2001년 전시 학도호국단 편성 지침 통보' 문건을 각 학교에 보냈다는 것이다.

이 문건은 전시 학도호국단의 편성 요령, 운영, 활동 범위, 학교별 고유단명 및 학생단번(준 군사번호) 부여 요령, 비상연락체계 등을 상세하게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학교의 규모에 따라 사단, 연대, 대대, 중대로 분류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준 군사번호를 부여하고 있다.

또 이 문건은 전시에 학도호국단은 긴급복구사업 지원, 민방공 지원, 경계 지원 등의 활동을 하며 실업계 학생은 "필요시 방위산업체 및 국가기간산업 등 전쟁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산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게끔 되어 있고, 여학생은 구급활동, 유아보호 및 군병원 등에서 간호활동 등을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문서는 전시에 학도호국단을 부

활해 학생들을 강제 동원한다는 군국주의적 발상을 기저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운동사랑방은 21일 성명서를 내고 "재난과 전쟁시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인 학생을 준 군사조직원으로 편입시킨다는 발상

은 군국주의에 지나지 않으며 이런 정부의 형태야말로 국민에게 전쟁만큼 위협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전세계적으로 소년병의 징발을 막기 위해 지난해 채택한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는 (2면으로)

필름에 담긴 동성애자들의 삶과 사랑

★주제가 있는 작은 인권영화제

그 세 번째 마당이 오는 29일 오후 7시 다산인권센터 소극장에서 펼쳐집니다. 이번에는 동성애를 주제로 한 두 편의 영화를 상영합니다.

성적 지향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 속에서 아프게, 그러나 아름답게 사랑을 가꾸어가는 이반들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마당은 우리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동성애에 대한 편견과 그 무차별적인 폭력성을 꺼내 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슈가힐>은 깊이 사랑했던 두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결혼 앞에 무너질 수 없던 그들의 사랑은 연인 누나와의 인연으로 이어지고 결국은 누나의 뱃속에 잉태된 생명을 통해서... 시간이 흘러 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발소 이씨> 80년대 초 서울 변두리의 조그만 이발소. 조그만 체구의 이발사는 이웃들과 살갑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이발사는 구씨와 말다툼을 하다 계집애 같다는 말에 우격다짐까지 하게 되는데...언제나처럼 이발사 부인은 이발사의 불룩한 가슴을 봉대로 푹푹 감아줍니다.

청소년들의 "알럽휴먼라이츠"

26일부터 청소년 인권강좌 열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평화학교가 오는 26일(토)을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오후 2시30분) 다산인권센터 교육실에서 열린다.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열리는 이번 강좌는 청소년들의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다산인권센터와 경기복지시민연대가 공동으로 진행한다.

이번 강좌의 슬로건은 '알럽휴먼라이츠'(I love human rights). 영상으로 보는 권리선언, 왕따 보기, 학교 안에서의 권리 찾기, 내 안에 숨어 있는 편견 찾기 등의 내용으로 꾸며진다. 또 마지막 강좌에서는 인권활동가와의 대화시간이 마련된다. 특히 이번 강좌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만든 학칙에 따라 운영된다.

다산인권센터는 지난 3월 15일부터 수원농생고에서 일주일에 한 번 인권강좌를 시작했으며, 오는 7월25일부터 27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청평 에덴수련원에서 청소년인권캠프를 마련하고 있다. 센터는 이번 인권평화학교를 계기로 수원지역 고등학교 1,2학년생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공개강좌를 계속 열 계획이다. **다산**

(신청문의) 031-213-2105/ 215-4399

(1면에 이어) "당사국은 18세미만 자들이 군대에 의무적으로 징집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발상은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국제적으로 채택된 인권조약에도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다.

다산인권센터 송원찬소장은 "전시에 민간인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임에도 학생들을 준 군사조직으로 편입시키려는 발상에 소름이 끼친다"며 "이 문건은 즉각 폐기되어야 하며, 정부는 공개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산**



그들도 가정을 꾸릴 권리가 있다

조용희목사/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중국담당

요즘 국제결혼의 문제로 상담문의가 많이 온다. 국제결혼을 했거나 아니면 앞으로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대부분의 사람의 신분은 불법체류자다. 특히 외국인노동자들의 체류기간이 길어지면서, 이들은 공장 등지에서 만난 한국인과 '자연스럽게' 사랑에 빠지고, 가정을 이뤘다.

그러나 한국남성과 결혼한 외국여성은 비교적 정착이 수월한 편이지만, 한국여성과 결혼한 외국인노동자들은 정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한국여성과 결혼해 아이까지 낳은 가정도 많지만, 불법체류자라는 신분 탓에 혼인신고조차 하지 못한 이들도 적지 않다.

불법체류자 가정의 고민은 한결같다. 의료문제, 호적문제, 자녀교육문제, 신분의 불안정한 문제 등등.. 한두 가지가 아니다. 가까스로 어렵게 '방문동거자격 비자(F-1)'를 발급 받는다 할지라도 동거만 합법적으로 인정을 할뿐이지 취업할 수 없어 생계를 꾸려나가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다.

한국인여성과 결혼한 대부분의 외국인노동자들은 한결같이 한국사회의 구성원이 되고 싶어한다. 심지어 상당수의 외국인노동자들은 자기 부인의 국적인 한국으로 귀화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귀화하는 것조차 어려움이 많다. 한마디로 그들이 처한 인권의 현실은 열악하기 그지없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는 자국민과 결혼한 불법체류자에게 특별체류를 허용을 한다. 그래서 그들이 일본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이제 우리도 이들이 처한 어두운 인권현실에 관심을 가져 하루빨리 이들의 가정이 어둠에서 소망의 빛으로 전환되길 희망해 본다.

"홈페이지 게시판 글 삭제 부당하다"

수원경실련, 수원시 인터넷 조례안 표현자유 침해 지적

지난해 성남시에 이어 최근 평택시가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된 시정을 비판하는 시민단체의 글을 삭제해 물의를 빚은 가운데, 최근 수원시가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면서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삭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시정 참여를 막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

수원경실련에 따르면 이 조례안을 검토 분석한 결과, 제 11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에서 정치적 목적이나 선한이 이는 경우 특기기관이나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는 글을 시가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시장과의 대화방에서는 실명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표현의 자유에 침해되는 내용이 대폭 삽입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실련은 24일 임시의회 개원을 앞둔 지난 19일 수원시의회 자치기획국 상임의원들에게 분석 결과 및 원안대로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노건형사무국장은 "특히 이 조례안은 주민들의 시정 참여를 원천적으로 막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산**

다산인권

제22호

2001. 5. 30.(수)

매주 수요일 발행

●발행처 : 다산인권센터 ●발행인 : 송원찬 ●편집인 : 다산인권편집위원회

442-380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1의6 법전빌딩 313호 ☎ 031-213-2105 Fax 031-215-4395 http://rights.or.kr e-mail: humandasan@hanmail.net

HOT NEWS

지속된 구타에 탈영, 정신치료...은폐까지

수원 남부서 의경들, 출동 직전 구타 집중돼...인권단체들 진상 규명 등 요구

경찰 내 의경에 대한 폭력이 만연돼 있을 뿐 아니라 교묘한 방법으로 은폐되고 있다는 경찰 내부자의 목숨을 건 제보가 사실임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지난 12일 수원 남부경찰서 소속 의경이라고 밝힌 이 제보자는 A4 용지 3매 분량으로 "제발 살려 주세요. 제발"이란 제목의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이 글에 따르면 경찰서 내 의경들이 지속적으로 구타를 당하고 있으며 가혹행위에 못 견디어 무려 5번씩이나 탈영을 하는가 하면 정신과치료를 받고 자살 미수에 그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제보자는 이 같은 구타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달 안에 경찰청 앞에서 분신 자살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특히 더 충격적인 것은 구타 사실이 드러날 경우를 대비해 축구를 하도록 하고, 상황 진압에서 다친 상처라고 말하도록 하는 등 가혹행위를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산인권센터는 이 제보가 구타상황은 물론 가해자, 피해자의 이름이 상세하게 명시돼 있는 점으로 볼 때 사실이냐고 판단, 지난 22일 사실 확인에 들어갔다.

확인 결과 이 제보가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났고, 현재 경찰 내에서도 조사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제보자는 "1년도 안 되는 시간동안 3명이 정신이상아 되었고... 구타에 못 이겨 5번 탈영한 이모의경은 청장에게 구타사실을 말했으나 이후 조치는커녕 이의경이 꿈에서 본 것이라며 부대에서는 그를 정신이상자로 몰아갔고, 조모의경은 부대 온 지 한 달도 안돼 탈영을 할 정도로 구타를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부대에 온 지 3주 된 신병이 쓴 글을 인용하면서 구타의 정도를 고발했다. "오늘도 난 개처럼 맞았다...조모씨를 죽여버리고 싶다. 중대장도 서장도 죽여버리고 싶다...집에 가고 싶다... 엄마, 엄마, 엄마..."

실제로 취재과정에서 만난 이모의경은 구타로 5번 탈영을 했으며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었다. 그는 "내가 이 부대에 오지 않았다면 정신과치료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 번 탈영을 한 조모의경도 "파출소 근무하다 부대에 들어갈 때는 정말 두렵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들 피해자들의 진술은 경찰내의 구타행위가 만연돼 있으며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잔혹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 같은 구타행위를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제보자는 "구타흔적이 나타나면 축구 하다 다쳤다고 말하러면서 축구를 강제로 시킨다...상황 나가 다쳤다고 말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구타사실을 말하면 정신이상자로 둔갑시키고 병가라는 달콤한 당근을 준다고 했다.

실제로 화장실에서 구타를 당한 한 의경은 상관에게 축구 하다가 다쳤다고 말했다고 실토했다.

또 하나 충격적인 사실은 이 같은 구타행위가 시위 진압 등 출동을 나가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제보자는 "정말 진마안(버스)은 살벌합니다...졸병들에게 조용히 다가가 암기사항을 시킵니다. 조금이라도 머뭇거리면 앉은 상태에서 곤봉과 하이바로 머리와 허벅지를 맞습니다...아무리 구타하는 소리가 난다고 해도 소대장은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라며 출동 직전의 구타상황을 상세하게 명시했다.

피해자들을 만난 결과 구타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은 시위 진압을 하러 나갈 때 차안이었다.

경찰 관계자도 구타 사실을 일부 부인하면서도 "출동 직전 대원들의 긴장을 높이기 위해" 꿀밤을 준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점에 미뤄볼 때 경찰이 의

지금 안산은 노조 탄압의 무법지대

안산 동아공업노조 64일째 천막농성...환경미화원들 무더기 부당해고

지금 안산에서는 곳곳에서 노조탄압이 자행되고 있다.

안산 반월공단에 있는 동아공업노조(위원장 김낙권)가 회사측을 상대로 단체교섭과 노조인정을 요구하며 64일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하루 12시간 노동에 월 60만원에도 못 미치는 월급을 받는 등 70년대의 노동 조건에서 일을 해왔다.

이에 지난해 11월 노조를 결성하고 사측에 단체교섭을 했으나 회사측은 교섭에 응하기는커녕 노조해산을 요구했다. 또 급기야는 쟁의기간 중에는 대체근로를 할 수 없도록 노조법 상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용직을 이용한 대체근로를 실행하고 있다.

더 나아가 사측은 조합원들이 머리띠와 조끼를 착용했다는 이유로 집행간부 4명에 대해 징직 3개월 등 중징계를 감행했고, 용역원을 동원해 조합원들을 협박하고 폭행하는가 하면 지난달 20일에는 조합원 42명에 대해서만 직장폐쇄조치를 취했다.

현재 전체 노동자 100명 중 42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된 이곳 노조는 노조 인정과 단체교섭 수락, 부당 징계 철회 등을 요구하며 천막을 지키고 있다. 한편 이곳은 지난 89년 노조가 설립됐다가 사측의 탄압으로 해산됐었다.

또 다른 노조탄압의 현장. 안산시 8개 청소업체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업체측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정년제에 따라 무더기로 부당해고를 당했다.

이들 청소업체들은 안산시와 청소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그 동안 55세 이상 환경미화원들도 근무했던 전례를 깨고, 일방적으로 정년을 55세로 정한 뒤 해당 환경미화원들을 무더기로 해고했다.

이에 대해 지방노동사무소는 업체측의 행위가 부당함을 인정하면서 원직

복직결정을 내렸으나 업체들은 아직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환경미화원들은 경기도 노동조합 안산분회에 가입한 뒤 업체들의 이 같은 횡포에 대응해 왔다. 그러나 업체들은 정년을 이유로 무더기 정리해고, 임금삭감, 부당 징계, 대체근로 이용 등 노조를 탄압을 일삼고 있다.

경기도 노조 안산분회는 부당해고와 일방적으로 삭감된 임금에 대한 민사 소송을 할 예정이다. **다산**

"인사비리 교육감 공개 사과하라"

전교조경기지부 28일 무기한 천막농성

전교조경기지부(지부장 김홍목)는 조성현 경기도교육감 처남의 인사비리와 관련해 도 교육감의 공개 사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28일부터 도교육청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경기지부는 지난 3월 도 교육감에게 인사청탁을 해주겠다고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조 교육감 처남 방연호씨가 구속되면서 인사 비리 연루자 30여명이 밝혀졌음에도 이들에 대한 가시적인 징계조치 없이 교육청이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지부는 비리 관련자 전원 징계, 도 교육감 공개 사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교원노조의 인사위원회 참여 보장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이선용 전교조경기지부 부지부장은 "이번 인사비리로 교사들은 좌절감을 느끼며 교육계의 권위는 실추됐다"면서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농성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산**

인권침해 사례
제보·상담 받습니다
031-213-2105

다산 인권

제23호

2001. 6. 7.(목)

매주 수요일 발행

●발행처: 다산인권센터 ●발행인: 송원찬 ●편집인: 다산인권편집위원회

442-380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1의6 법전빌딩 313호 ☎ 031-213-2105 Fax 031-215-4395 http://rights.or.kr e-mail: humandasan@hanmail.net

경찰, 의경 구타 사실 인정...징계조치

경기경찰청, 1일 감찰 결과 구타 사실 확인...지역단체들 서장 파면·청장 공개사과 요구

수원 남부경찰서 의경 구타사건과 관련해 경기지방경찰청이 자체 조사에 들어가 일부 구타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조치를 하는 등 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단체들 및 지역단체들은 경찰의 이 같은 조치들이 미온적일 뿐만 아니라 구타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며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경기경찰청은 지난 1일 "피해의경들이 상급자의 구타 등으로 탈영했다"고 밝혀 구타에 못 견뎌 각각 다섯 차례, 한 차례씩 탈영한 피해의경들의 진술이 사실임을 인정했다.

또 조모 의경 등 상급자 15명이 출동버스 안과 내부반, 화장실 등에서 '암기사항을 못 외운다'는 이유로 수차례 구타한 사실이 감찰 결과 드러났다고 말했다.

경기경찰청의 이 같은 감찰 결과는 남부서 의경이 인터넷에 올린 구타진상이 상당 부분 사실이었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

경기경찰청은 현재까지의 감찰 결과 밝혀진 구타 관련자에 대해 징계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 1일 구타 가담자 14명을 전후경찰대설치법에 따라 징계조치하고, 지난달 8일 제대한 상습구타자 신모씨를 형사입건하기로 했다. 또 지

난달 29일 수원 남부서 방범순찰대장을 직위해제 했고 전·현직 소대장 3명과 행정반장 등 4명을 징계조치하고 경찰서장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했다.

이와 함께 경찰서 내에서 '서로의 인

권을 존중하자'는 내용의 리본을 부착하고 인권교육강연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다산인권센터를 비롯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경찰 내부에서 의경들에 대한 조직적, 상시적 (2면으로)

파행 파행 파행의 에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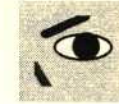
구재단측, 민주적 이사진에 대해 선임취소가처분신청 제출

민주적 이사진 구성으로 에바다가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여전히 어렵게 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열린 에바다복지회 이사회에서 구재단측 이사들이 사사건건 문제제기를 해 안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채 이사회가 파행으로 진행됐다. 이날 구재단측 이사들은 김종인 이사장(나사렛대 교수)의 재신임안을 상정한 뒤 사임을 요구하고 나섰고 신임이사와 에바다학교의 교장선임도 부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이날 이사회가 열리기 전 회의실 바깥에는 양봉애 에바다행정실장과 구재단측을 지지하는 농아원생들이 대기하며 교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구재단측은 이날 이사회가 끝나자마자 지난 3월 이사회에서 결정된 민주적 이사 3인에 대한 선임취소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서를 평택지원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에바다연대회의 관계자는 "민주적 신임이사 3명이 선임되고 에바다 내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행정실장 양봉애의 해임을 결정하려하자 위기의식을 느낀 구재단측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에바다이사회의 정상적 기능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사회 구성에 대한 법적 공박이 이어지면서 또다시 정상화의 길이 지난하게 되었다. 더구나 구재단측은 현 김종인 이사장이 재직하고 있는 나사렛대 앞에서 농아원생들을 대동해서 시위를 벌일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에바다연대회는 가처분신청이 접수된 해당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법적 대응을 포함해 구재단측에 대해 전면적인 투쟁계획을 세우고 있다. 6월 말경 이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다산]



1인 시위 활성화되어야 한다

최강호 운영위원(법무법인 다산 변호사)

얼마 전 삼성그룹 이견회 회장과 그의 장남 이재용씨의 변칙증여 및 탈세의혹에 대한 국세청의 조사지연에 항의하는 윤종훈 회계사의 국세청 앞 1인 침묵시위를 접하면서 매우 신선한 느낌을 받았다.

그런데 최근 서울 종로경찰서장이 인간띠 잇기 시위나 릴레이 시위 등과 같은 변형된 1인 시위에 대하여 위법이므로 적극적으로 단속하겠다고 천명하여, 법을 집행하여 질서를 유지하는 고위 경찰공무원의 의식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시위라 함은 다수가 공동 목적으로 가지고 도로 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진행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가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약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듯 시위의 개념에는 본질적으로 다수인, 즉 3인 이상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시위를 대하는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이념은 원칙적으로 누구도 시위에 대하여 제한을 가할 수 없다는 것이고, 다만 그 시위가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시위를 규율하는 실정법인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도 위와 같은 기본 이념에 바탕해 금지되는 시위 및 시위가 금지되는 장소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렇듯 법에 의해 제한될 가능성이 있는 시위에 1인 시위가 전혀 속하지 않음이 명백하고, 다원화된 사회에서 다양한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1인 시위가 적합하다고 보여져, 1인 시위는 막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활성화되어야 할 시위형태인 것이다.

더구나 국회의사당, 법원, 헌법재판소,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등의 경제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의 시위 및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도 그 제한 장소가 너무 광범위하여 위헌 논란이 있는 마당에, 1인 시위를 단속하겠다는 서울 종로경찰서장의 발상은 호된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 끝내 실형 선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사법부가 끝내 실형을 선고했다.

육군보통군사법원은 지난달 31일 총기수령을 거부해 항명 혐의로 기소된 이모 이병 등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 18명에 대해 실형 3년을 선고했다.

지난 15일 1차 공판에서 이해적으로 선고를 연기했던 육군법원 이인상 군판사는 이날 "형제가 나라히 수행생활을 하거나 아버지와 아들이 교도소에 가기도 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분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는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는 군대이고, 재판부는 실정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밝히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이날 재판은 병역 거부에 대한 그간의 재판에서 볼 때 이해적이었다.

민변 소속 변호사 10명으로 구성된 공동변호인단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은 헌법상 보장된 양심, 종교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었다.

유엔인권위나 국제 인권단체들은 병역거부를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들은 항소할 계획이다. [다산]

(1면에 이어) 구타가 자행되고 있었으며 상급자들이 이런 구타사실을 묵인하고 있던 점을 강조하면서 남부경찰서장의 파면 등 관련 책임자에 대한 처벌 및 지방경찰청장의 공개 사과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오는 8일 오전 11시 경찰청장과 면담을 신청했으며 구타사건에 대한 인권 및 시민단체들의 참관을 통한 철저한 진상 조사, 관련자에 대한 처벌 및 구타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단체들은 다음주에 수원 남부서와 경기경찰청 앞에서 집회를 갖기로 했다.

한편 이번 남부서 의경 구타사건과 관련해 그 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또 다른 피해자 홍모의경이 가혹행위에 못 이겨 탈영했다가 현재 수감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홍의경을 접견한 김철준변호사는 지난해 6월2일 남부서로 배치된 뒤 상급자들로부터 집중적인 구타를 당해 허리에 심한 부상을 입었으며,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말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아스피린만 준 다음 그날 저녁 출동을 나가게 했다는 사실을 본인으로부터 들었다고 밝혔다. 김변호사는 홍의경이 심한 통증에 또다시 구타를 당할 것이 두려워 지난해 7월 1차 탈영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2월 구속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홍의경은 재탈영으로 지난 1일 3년형을 구형 받았다. 현재 홍의경은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차 공판은 오는 15일에 열린다.

이와 관련해 지역단체들은 홍의경역시 구타에 의해 탈영했기에 실형을 받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 구명운동을 포함한 법률적 검토를 계획하고 있다. [다산]

인권침해 사례 제보·상담 받습니다
031-213-2105

다산 인권

제24호
2001. 6. 13.(수)

매주 수요일 발행

●발행처: 다산인권센터 ●발행인: 송원찬 ●편집인: 다산인권편집위원회

442-380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1의6 법전빌딩 313호 ☎ 031-213-2105 Fax 031-215-4395 http://rights.or.kr e-mail: humandasan@hanmail.net

도내 곳곳에서 생존권 보장 파업 돌입

민주노총경기본부, 도내 30여 개 사업장 파업 ...민주노총 비정규직차별철폐 등 요구하며 총파업

민주노총은 12일 오후 3시 서울 혜화동에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저지, 김대중 정권 퇴진 민주노총 6·12총력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는 18일째 여의도에서 노숙투쟁을 벌이고 있는 건설운송노조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노동자들 약 1만여 명 참여했다.

이날 단병호 위원장은 "우리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철폐 및 모성관련법, 사립학교법, 언론개혁법 개정을 수 차례 요구하고 있지만 정권은 아무 답변이 없다"면서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협상이 결렬된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와 아시아나 항공노조가 사상 처음으로 연대 파업에 들어간 데 이어 민주노총 전국 120여 개 사업장 5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연대파업을 벌였다.

민주노총은 공공연맹 소속 19개 사업장, 금속연맹 만도기계, 삼호중공업 등 92개 사업장, 화학섬유연맹 여천 NCC, 울산 고합 등 10개 사업장 등 120여 개 사업장 5만여 명이 연대파업에 돌입하며 13일에는 보건의료노조 소속 1만 1000명의 노동자가 파업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집회에서 농촌을 돕기 위해 '목마른 농심, 불안한 일자리'라고 적힌 성금바구니 20여 개를 돌려 성금을 모았다.

한편 경기지역에서도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파업이 줄을 잇고 있다. 민주노총 경기본부에 따르면 현재 경기 지역에서 파업을 하는 곳은 대략 32개 사업장. 12일 현재 6천3백90여명이 노조 인정, 생존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다.

20일 넘게 장기 파업이 진행 중인 곳만 해도 안산 기아모터, 동아공업, 안양 새마을금고, 부천 소사자동차

전학원, 이천 고려자동차운전학원 등 10여 개 남짓. 이들 사업장은 사측이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교섭 요구에 불응, 적법한 절차를 거쳐 파업으로까지 치닫고 있는 것이다.

이삼노 민주노총 경기본부 대외협력 국장은 "사측에서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불법을 자행, 노동자들이 생존권 보장을 위한 최후 수단으로 파업을 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산**

2001 청소년 모의법정 대본 공모

친구야, 성난 사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

다산인권센터 주최, 학생의 날 연극으로 제작...7월20일까지 접수

다산인권센터는 수원시와 함께 '2001 청소년 모의법정' 대본을 공모한다.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공모는 '친구야, 성난 사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오는 7월20일까지 우편 또는 직접 접수를 받는다.

이번 공모는 청소년들의 인권의식을 고취시켜 주기 위해 마련된 것. 공모 내용은 왕따나 학교폭력 등 청소년들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상생활이나 사건을 소재로 하며 문제의 본질을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풀어 가는 작품이면 된다.

수원지역 중·고등학생 또는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이면 누구나 공모가 가능하다. 분량은 200자 원고지 50매 내외(줄거리 요약본 첨부)이며 PC 신명조체 11포인트, A4 용지로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대상을 포함한 우수작 6편에는 장학금이 지급되고, 당선된 작품들은 오는 11월 3일 학생의 날 무대에 올려질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산인권센터 홈페이지 (www.rights.or.kr)에서 볼 수 있다.

문의: 다산인권센터 박진 사무국장 / 031-213-2105 / leftjin@rights.or.kr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1-6 법전빌딩 313호

“서장 파면, 정장 공개사과하라”

지역단체 15일 항의집회 갖기로

수원남부경찰서 의경구타사건과 관련, 수원 지역 시민단체들은 경찰측의 자체 대응이 미온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철저한 진상 조사 및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요구하며 오는 15일 오후 2시 경기지방경찰청 앞에서 집회를 갖기로 했다.

지역 단체들은 13일 오전 대책모임을 갖고 “경찰 측이 구타 관련자들을 징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구타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 대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하면서 “구타를 막기 위해선 무엇보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들에 대한 분명한 징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단체들은 15일 경기지방경찰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갖고 △지역시민, 인권단체들이 참여한 진상조사 △구타 가담자에 대한 징계는 물론 수원 남부서장 파면 및 경기지방경찰청장 공개 사과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경찰 내부 구타현황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 조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또 이들은 19일 오전 11시 경기지방경찰청 면담을 신청, 이 자리에서 이 같은 요구안을 전달하기로 했다.

한편 남부서 의경 구타사건이 제기되면서 경찰 측은 자체 조사를 벌여 왔으며, 조사 과정에서 구타에 가담한 이들 15명과 감독자들에 대해 징계조치를 했다.

또한 가혹행위 신고 비상벨 설치, 출동 시 버스 안에서 고참 순으로 자리 배치하고 소대장은 맨 뒷자리에 앉는 등 경찰 내에서의 구타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지역단체들은 이 같은 대책만으로는 구타를 근절하기 어렵다고 보고 구타 조치 등 점검할 수 있는 상설 기구의 설치를 요구했다. **다산**



노동자 배제한 국민경제가 낳은 비극

김윤자 한신대 국제경제학과 교수

얼마 전 부평에서 경찰이 대우차 노조원을 과잉 진압하여 물의를 빚은 데 이어 이번에는 또 울산에서 효성 노동자들이 진압봉과 방패를 든 경찰에 마구 쫓기는 장면이 연출되었다. 시가전을 방불케 하는 저런 장면을 언제까지 연출해야 하는 것일까.

어떤 외국인은 한국의 노동운동이 실용성 없이 너무 과격하여 무섭다고 한다. 홍보면서 닦는다고 모두들 파쇼의 폭력에 길들여져 웬만한 폭력엔 둔감하다고 꼬집기도 한다. 심지어 어떤 이는 난폭한 국민성과 집단히스테리 때문이라고도 한다. 과연 그러하다면 우리 모두 마음을 가다듬는 도덕재무장운동을 벌여 국민성을 개조하는 것이 급선무이리라. 그게 아니라면 무엇이 한국의 노사관계를 저런 장면으로 몰아가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으리라.

외환위기 이후 더욱 자주 들게되는 상투어 중에 “노동자의 집단이기주의 때문에 국민경제가 타격을 받는다”는 것이다. 노동자의 집단이기주의와 국민경제는 이렇게 대립되는 것인가. 지금 한국의 형편에서 재벌 회장도 아니고 고위 정치인도 아닌 노동자라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기적 이해를 위해 국민경제를 짓밟을만한 경제적 헤게모니를 잡고 있더라도 한 것일까. 그게 아니라면 도대체 노동자를 배제한 국민경제란 무엇일 수 있을까.

그런 식의 전근대적 편견은 소규모 영세사업주에서 여야 정치권과 고위 정책 당국자에 이르기까지 매우 뿌리깊게 남아있다. 노동자들은 의논을 나눌 대상이 아니라 제압의 대상일 뿐이다. 노동자가 국민이라는 것, 그들을 배제한 ‘국민경제’란 있을 수 없다는 것, 이런 인식이 공유되어야 우리 사회에 미래가 있지 않을까.

“6·15 공동선언 즉각 이행으로 통일 앞당겨야”

경기지역단체들 14일 6·15 선언 1주년 공동 성명서 발표

전농 경기도연맹을 비롯 경기지역 3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14일 오전 11시 경기도청 기자회견에서 6·15 남북공동선언 1주년 성명서 발표와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날 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6.15 공동선언으로 마련된 통일의 새로운 국면이 미국의 정책과 김대중정부의 눈치보기, 냉전수구세력의 반통일적 언행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하며 6.15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을 강력하게 촉구할 계획이다.

이들은 또 앞으로 6·15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모든 노력과 김정

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MD) 구축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사업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는 21일 ‘6·15남북공동선언 1주년 기념식과 2001 수원시민통일한마당 행사 준비위원회 발족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 행사는 수원YWCA의 민족화해와 평화를 담은 만화전시회를 시작으로 2001 수원시민통일한마당 행사준비위원회 발족식 및 사업계획발표, 6·15 1주년을 맞이한 수원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서 발표로 진행된다. **다산**

다산 인권

제25호
2001. 6. 20.(수)
매주 수요일 발행

●발행처: 다산인권센터 ●발행인: 송원찬 ●편집인: 다산인권편집위원회

442-380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1의6 법전빌딩 313호 ☎ 031-213-2105 Fax 031-215-4395 http://rights.or.kr e-mail: humandasan@hanmail.net

경찰, 해머 들고 건설운송노조 여의도 농성장 급습

차량 부수고 조합원 301명 연행...시민사회단체들 "합법 파업 짓밟는 공권력 폭거" 규탄 성명서

노조 인정 등을 요구하며 여의도공원에서 24일째 노숙투쟁을 벌여왔던 건설운송노조 조합원 300여명이 19일 오전 9시20분쯤 경찰에 의해 전원 연행됐다.

이날 오전 경찰 16개 중대 1천900여 병력은 소화기와 최루탄을 뿌려대며 농성장을 급습했고, 해머와 쇠파이프, 방패를 무자비하게 휘두르며 차량 유리창을 깨고 조합원들을 강제로 끌어냈다. 정부에서 노동자들의 시위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이같은 폭거가 자행된 것이었다.

이날 경찰의 무력진압으로 김원식 조합원이 병원에 입원하는 등 조합원 다수가 부상을 입었으며, 차량도 다수 파손됐다.

장문기 건설운송노조 위원장, 이용식 전국건설산업연맹 위원장, 유기수 전국건설산업연맹 조직강화위원장을 비롯해 조합원 301명이 연행됐으며 서울 시내 20여군 데 경찰서에 분산 수용돼 조사를 받고 있다.

남아있는 조합원들은 19일 오후 연대에 집결한 뒤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항의집회를 갖고 서울대로 재집결했다. 이들은 20일 오후 민주노총과 함께 한나라당사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건설운송노조는 노조를 인정하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레미콘 회사들이 단체협약을 거부하고 부당노

동행위를 일삼는 것에 대응, △노동조합인정 및 단체협약 체결 △일요일 휴무 △운반단가 현실화 등 6대 요구사항을 내걸며 지난 4월10일부터 합법적인 총파업에 들어갔으며, 지난달 27일부터 "여의도에 뼈를 묻겠다"는 각오로 여의도공원에서 노숙투쟁을 벌여왔다.

현재 레미콘회사 사업주들은 지난 6월 초 페 레미콘 매립과 불량레미콘 납품으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이며, 국회 환경노동위상임위는 26일 현재 레미콘사태와 관련해 유진레미콘 유재필

사장과 고육 유진지회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청했다.

한편 노동계 및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공권력 투입을 포함해 최근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는 현 정권의 정책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잇따라 발표하고 나섰다.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환경파괴 사업주, 부정비리 사업주는 그대로 둔 채 최소한의 생존권을 지키고자 합법적인 파업을 벌이고(2면에

주제가 있는 작은 인권영화제 네 번째 이야기 **◆싸빠띠스따 Zapatista◆**

신자유주의의 심장에 화살을 쏜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신자유주의에 맞서 싸우고 있는 멕시코 원주민들의 생생한 투쟁을 만날 수 있다.

오는 26일(화) 오후 7시 다산인권센터 소극장에서는 어게인스트 더 머신(RATM)의 음악과 데릴한나의 나레이션으로 진행되는 <싸빠띠스따 Zapatista>가 상영된다. 이 영화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로 가시화 된, 서구자본과 정치권력에 대한 전면적 투쟁을 선언한 멕시코 원주민들의 무장봉기 이야기.

1996년 여름 싸빠띠스따 투쟁소식을 접한 세 명의 대학생이 2대의 디지털 카메라 장비를 들고 치아파스의 라칸돈 정글로 향했다. 미디어매체가 한번도 접근한 적이 없는 혁명지대로 과감히 들어간 이들은 그곳에서 신자유주의에 대항해 싸우고 있는 이들의 삶을 촘촘하게 앵글에 담았다.

이들은 이 기록을 시애틀 투쟁 당시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세계 민중의 가슴을 향해 위성으로 송출했다.



번호판 없이 달리는 미군들

김용한(불평등한 소파개정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용산 미군 기지. 번호판 없는 차가 드나든다. 한두 대도 아니고 10~20분에 1대 꼴이다. 마침 벌어진 환경 파괴 주범 주한미군 규탄 시위대가 이를 발견하고 소리를 친다. 준비하게 늘어선 한국 경찰들은 뻔히 바라만 본다. 시위대가 신고해 보지만 소용없다. 경찰들은 오히려 신고하는 시위대를 감시한다.

보다 못한 한 사람이 도로로 뛰어들어 번호판 없는 차를 가로막자, 한국 경찰들 아주 날렵하다. 우르르 달려들어 그 시민을 잡아간다. 일반교통방해죄! 시위대가 갖은 욕을 다 퍼붓자, 경찰 하나가 마치못해 번호판 없는 차를 세워본다. 하지만, 그 차는 후진하는 척하더니, 경찰 코앞으로 총알같이 도망친다.

이번엔 수염 덩수룩하신 신부 한 분이 지팡이 잡고 나선다. 그러나 미군 헌병들이 한국 경찰에게 강력하게 항의하자, 한국의 덩치 좋은 경찰들은 조직폭력배처럼 달려들어 노 신부를 들어낸다. 경찰은 미군 차를 타고 부대 안으로 사라진다. 둘러섰던 시민들이 야유한다. "경찰이 범인을 연행하는 게 아니라, 범인이 경찰을 연행하는군!"

2001년 6월 서울 용산 미군기지 앞의 풍경이다. 시위대는 용산 경찰서장을 비롯한 몇몇 경찰 책임자들과 주한미군사령관을 서울지점에 고발했다.

하지만, 파주, 동두천에서 대구, 부산까지 미군들은 지금도 번호판 없는 차를 몰고 전국을 누빈다. 이유는 딱 두 가지다. 사고를 내고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과, 한국은 미군에게 '나라'가 아니라는 것. 우리는 언제야 국민의 인권과 우리 나라의 주권을 찾을 것인가?

"경기경찰청장은 지역단체들과의 면담에 응하라"

수원지역 인권·시민단체들은 20일 오전 대책모임을 갖고 경기지방경찰청장과의 면담과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경찰청 앞에서 집회를 갖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경찰 측이 의경들에 대한 구타가 조직적, 상시적으로 자행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책임자 처벌이나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경찰청장과의 공식면담을 재요청하고 '남부서장 파면, 경기지방경찰청장 공개 사과, 구타 근절 대책 마련' 등 지역단체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경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갖기로 했다.

수원지역 단체들은 지난 15일 수원 남부서 의경구타사건과 관련해 경기지방경찰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경기경찰청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서류를 접수하려고 했으나 경찰은 "불법시위를 통한 민원접수는 받아줄 수 없다"면서 거절했다. 경찰 측은 경기지방경찰청장이 19일부터 22일까지 중국을 방문하기 때문에 제1차장 등 경찰 측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제안해 왔었다.

한편 지난 17일 서울 용산경찰서 소속 광모 의경이 의혹의 자살을 한 것과 관련, 수원지역 단체들은 "경찰이 경찰내부의 구타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한지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의경이 의혹의 주검으로 발견됐다"면서 서울 인권단체들과 연대해 경찰 내 구타 근절을 뿌리뽑기 위한 행동을 하기로 했다. [다산]

노조 간부 연행·용역깡패 급습

60일 넘게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안산 동아공업노조에 지난 18일 새벽 5시 사복경찰 50여명이 급습, 농성 중이던 김상완 금속산업연맹 경기본부장과 핵심 노조간부 등 모두 9명을 연행했다.

또 19일 새벽 4시30분쯤 안산 청소차량차고지에 용역업체 직원 120여명이 급습, 경기노조 안산분회 간부 10여명을 폭행했다. 현재 안산분회 조합원들은 안산 노동부사무소에서 용역깡패 철수, 안전 귀가 등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지역 노동, 학생, 사회단체들은 최근 경기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탄압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20일부터 23일까지 공권력 투입 규탄집회를 가질 계획이다. [다산]

다산인권

●발행처 : 다산인권센터 ●발행인 : 송원찬 ●편집인 : 다산인권편집위원회

442-380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1의6 법전빌딩 313호 ☎ 031-213-2105 Fax 031-215-4395 http://rights.or.kr e-mail: humandasan@hanmail.net

합법 파업 막는 경찰 폭력에 강경 대응

경기민중연대, 도내 농성장서 폭력 자행 공권력 규탄 집회 열기로

경기민중연대(준)는 경기도내 곳곳에서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 싸움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측이 용역원들을 고용해 폭력을 행사하는 등 노동탄압이 심각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22일 오전 경기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점상, 철거민, 노조 조합원들에 대해 경찰의 비호 하에 폭력강패들이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면서 "현 정부는 민중을 탄압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으면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사용주에 대해서는 한없이 자애로운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편파적인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동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민중연대에 따르면 지난 3월 건설운송노조 유진, 이순분회를 비롯해 현재 경기도내 30여 개 넘는 사업장에서 파업이 진행 중이며 지난 4월23일 부천지역에서의 노동부 폭력사태와 관련해 부천 노동, 민중단체들이 60일 넘게 천막농성을 벌이는 것을 비롯해 장기화되고 있는 곳만 해도 10여군데.

특히 최근 노동계에 대한 경찰의 폭력적 대응이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내에서도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는 이들에 대해 경찰과 용역원들이 폭력적으로 강제 진압하는 사태가 속속 벌어지고 있다.

지난 18일 새벽 안산 동아공업농성장에 사복경찰 50여명이 급습해 조합

원 9명을 연행했으며, 같은 날 오전 7시 새마을금고 안양북부분회 조합원들이 농성을 벌이고 있는 곳에 용역직원 5명이 들어와 폭력을 휘둘렀다.

또 다음날인 19일 새벽 5시쯤 경기도 노조 안산분회 농성장에도 용역원 1백50여명이 동원돼 조합원들을 무차별적으로 구타했다.

경기민중연대는 지난 20일 안산지역 파업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력행사를 강력하게 규탄하는 집회를 가진 **(2면)**

수원단체들, 경찰청 항의 집회

수원지역단체들은 수원남부경찰서의 경구타사건과 관련해 경찰 측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 오는 30일 오전 11시 경찰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갖기로 했다.

지역단체들은 "경기경찰청장과의 면담 요청에 대해 묵묵부답이며 구타사건 조사 결과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최근 용산경찰서 의경이 의혹의 투신을 하는 등 경찰 내 구타문제가 심각하나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경찰 내 구타 철저한 조사, 책임자 처벌, 근절 대책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다산)**

논평

기획은 이 때다, 무소불위 힘 휘두르는 공권력

지난 22일 대우차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수원지방노동사무소에 화염병을 투척한 대학생 4명에 대해 수원지법이 2년과 1년 6월 실형을 선고했다. - 그리고 계속 잡아들이고 있다. 지난 19일 검찰은 불법시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소송지원을 해주겠다며 '불법집단행동 이동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 그리고 상인의 피해신고가 잇따른단다.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합법화를 시켜줬더니 불법파업을 하고 있다며 민주노총을 혐오하는 발언을 했다. - 그리고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검거령이 내려지고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 경찰이 해머로 차를 부수는 가공할(?) 공권력을 행사하며 레미콘 기사들을 연행해 갔다. - 지금 당산철교 다리 밑에 노숙투쟁을 하고 있다.

한국사회가 살벌하다. 이를 공안정국이라고 하던가. 이미 오래 전에 준비된 것인데 대우차 폭력진압으로 한풀 꺾였는데 이번에 동대문 경찰서장도 기절했다 웬대우냐. 너희들 어디 맞 좀 봐라. 싸늘이 할 기세다. 얼마나 안달이 나 있었을까. 오히려 갈비뼈 부러지고 피범벅이 된 대우차 노조원들 때문에 몇 개월을 늦춰준 풀이 되고 말았으니.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이 수많은 희생을 통해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처지가 되고 있지 않을까.

어느 날 나이 지긋한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농담 반, 진담 반을 섞어가며 '이거 어디 험악해서 살 수 있냐. 현 정권, 검찰, 경찰들로 인해 피해보는 시민들을 위해 피해신고센터를 만들어야지 않겠냐. 아마 전화통에 불이 날 걸. 장사 잘 될 거야.'



집중단속에 침해받는 외국인노동자 인권

조용희목사/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중국담당

요즘 정부의 노동운동에 대한 시각이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정책기조를 무분별한 탄압으로 전환하면서 '국민의 정부'에 마지막으로 희망을 갖게 하는 인권신장의 기대를 무참히 저버리게 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정부 정책 또한 탄압으로 나가고 있다. (서울지검 공안부는 외국인노조의 집단 시위나 집회 가능성 등을 포함해 향후 활동 등에 대해 '경계령'을 내렸다.)

최근 정부는 불법체류외국인 자진출국기간을 설정하고 그와 함께 지난 6월 18일부터 법무부와 경찰, 국가정보원이 합동 단속에 들어갔다. 이러한 무리한 단속이 있을 때마다 늘 심각한 인권침해가 나타나고 있다. 단편적인 한 예로 1)회사 등지에서 일하다 체포되어 회사의 모든 업무가 중단된 경우 2)단속을 피하려다 건물 위에서 뛰어내려 심한 중경상을 입은 경우 3)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식당 및 숙소를 무원칙적으로 단속하다 상인들의 생존권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경우 4)합법체류자에게 수갑을 채우는 행위 등 단편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만 보더라도 도가 지나치고 있다.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는 미등록외국인을 막기 위해 입국과정을 강화할 뿐이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미 거주하고 있는 미등록 외국인에게는 무리한 단속을 시행하지는 않는다.

분명 합동단속은 일시적인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단속에 따른 인권침해 사례도 만만치가 않다. 이러한 단속위주의 정책에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접근이 분명 필요하다. 그동안 외국인노동자 인권단체에서는 외국인노동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시급하게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 것을 정부에게 요구했다. 30만 명이 넘는 외국인중에서 65%가 불법체류에 이르는 현실은 분명 정부의 외국인력 정책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이제 정부는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집중단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법 제정 등을 위해 눈을 돌려야 할 때이다.

"대법원 판결 전까지는 노조 인정할 수 없다"

26일 국회 상임위서 유진측 이같이 주장...건설산업연맹 부당노동 중단 촉구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는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있는 유진레미콘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해 관련자들의 진술을 들었다. 이날 사측에서는 유진기업 김춘수사장이, 노조측에서는 전국건설운송노조 고육 유진지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고육지회장은 사측이 노조 설립 이후 일삼아 온 부당노동행위를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회사는 합

법적으로 설립된 노조를 인정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김춘수 사장은 "대법원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당초 증인으로 채택된 유진기업 유재필 회장이 입원 중이어서 유회장 아들인 유경선 사장이 출석하기로 했으나 이날 갑자기 공업협회 전무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건설운송노조측이 강력하게 항의해 결국 사측 증인으로 김춘수 사장이 출석하느라 새벽까지 위원회가 진행됐다. 유진기업측은 레미콘운송기사들이 건설운송노조에 가입하자 노조 탈퇴 압력과 해고 등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아왔다.

건설산업연맹 이용석위원장은 27일 노동부 장관과의 면담자리에서 합법적인 단체교섭에 대한 지도 감독지침을 각 지방노동사무소에 하달할 것과 부당노동행위 사업장에 대한 전면적인 제조사 등을 요구기로 했다 **(다산)**

다산 인권

제27호

2001. 7. 4.(수)

매주 수요일 발행

● 발행처 : 다산인권센터 ● 발행인 : 송원찬 ● 편집인 : 편집위원회

442-380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1의6 법전빌딩 313호 ☎ 031-213-2105 Fax 031-215-4395 http://rights.or.kr e-mail: humandasan@hanmail.net

민주노총 7월 5일, 정치총파업 돌입

노동운동탄압에 맞선 노동자 총결기...경기본부도 7일 집회 열기로

7월 5일 민주노총이 정치총파업에 돌입한다. 지난 6월 22일 민주노총은 비상중앙위원회를 통해 "노동운동탄압,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분쇄, 김대중 정권퇴진을 내걸고 7월 5일 하루 총파업투쟁을 전개한다. >하루총파업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권이 노동운동탄압과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계속할 경우, 조합원 10만명의 서울 집중투쟁을 전개한다. >10만 서울집중투쟁을 결의하기 위해 7월 13일 대의원대회를 개최한다."고 결정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5일 전국동시다발 집회(오후 2시에 총파업투쟁 승리결의대회를 수도권 집중으로 진행)를 개최하고, 이 집회이후 전국상황을 보면서 6일 전체 노동조합은 잔업거부를 하고 각 지구협의회별 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7일 조합원총회를 각 지역별로 개최하는 등 압박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한편 단병호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들은 정부의 일제 검거령에 맞서 지난 29일부터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이다. 그리고 민주노총은 김대중 대통령과의 면담신청을 하였으나 지난 7월 2일 정부는 검거령이 내려진 단병호 위원장과 이홍우 사무총장을 제외한 나머지 지도부와의 면담을 갖자는 답변을 보내와 민주노총과의 현 대처국면을 대화로서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강경한 투쟁을 선언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현재 경기도내의 장기투쟁이 계속되고 있는 동아공업, 경기도 노조 등 노조를 지원하면서 경기지방노동청장과 찬장배 국회의원의 면담을 통해 부당노동행위 사업주의 처벌과 노사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7월 7일 "민생파탄 개혁실종, 노동운동탄압 김대중 정권 퇴진 결의대회"를 수원 장안공원에서 오후 2시에 개최한다. 이번 파업에는 기아, 현대자동차 등 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15개 노조 2만 명이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다산**



가자! 놀자! 부대끼자!

'알립휴먼라이트프' 여름캠프 떠나자

10대의 여름을 입시, 무더위와의 싸움으로 기억할 수만은 없다. 푸른 자연 속에서 친구들과 함께 놀았으며, 입시 과목 외의 것을 배우기도 했다. 때로는 치열하게 친구들과 논쟁하며 부대끼었다. 그 추억을 만들어 가는 여름으로 청소년들은 떠난다.

- ▷ 일시 : 7월 25일(수) ~ 27일(금). 2박3일
- ▷ 내용 : 인권, 너 도대체 뭐야?, 권리하고 여행하자, 청소년공화국 청문회, 청소년법 감시하기, 인권 체험놀이, 인권 5종 경기 등
- ▷ 참여대상 : 수원시 남녀고등학생 약 40명
- ▷ 장소 : 청평 에덴유스호텔 ▷ 참가비 : 30,000원
- ▷ 접수마감 : 7월 20일(금)까지 ▷ 주최 : 경기복지시민연대
- ▷ 주관 : 다산인권센터, 수원청소년문화센터, 전교조 수원증등지회
- ▷ 문의 : 경기복지시민연대(031-215-4399/kwcs21@kg21.net)

안양장애인복지관 노사교섭 난항

천주교 수원교구 사회복지회(이사장 윤용배)가 안양시청으로부터 위탁관리하고 있는 안양장애인복지관의 노사관계가 난항을 겪고 있다. 노동조합에 따르면 지금까지 천주교구와 실제 운영주체인 수녀회가 교섭을 서로 미루며 해태하고 있어 책임있는 교섭위원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3일 노조상급단체 공공연맹관계자 20여명이 천주교 수원교구청에 항의방문을 통해 성실교섭을 강력히 촉구했다. 안양장복노조는 운영주체인 수녀회의 비민주적 복지관운영에 반발해 2월 30여명이 노조를 결성한 것이다. 사회복지시설의 노조설립은 드문 일이어서 타복지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다산**

호주제 폐지운동에 앞장

7월 5일 기념식 및 가두서명 전개 수원가정법률상담소 등 수원지역 여성단체들은 제6회 여성주간을 맞아 '호주제 폐지를 위한 수원지역 여성단체연대'를 결성하고 가두서명과 결의대회를 한다.

지역 여성단체들은 현행 호주제도가 여아낙태, 남아선호사상을 조장하고 나아가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심각한 걸림돌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호주제 폐지운동이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들은 '호주제 폐지를 위한 수원지역 여성단체연대'를 결성하고 지속적인 조직적으로 호주제의 문제를 일반 시민에게 홍보하는 등 폐지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들은 호주제 폐단 바로 알리기 가두서명을 5일까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남문 중앙극장 등 수원시내 3곳에서 벌일 예정이다. 한편 경기YWCA 경기지역협의회도 이날 오후 2시 청소년문화센터에서 '호주제 폐지를 위한 경기여성한마당'을 열고 수원 뉴코백화점 앞에서 서명운동을 할 계획이다. **다산**



정례화된 세무조사 시스템을 확립해야

최강호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 운영위원

조선일보 등 6개 신문사 및 그 사주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정치권은 여야가 나뉘어 명운을 걸고 비방전의 양상까지 보여주고 있다. 그 만큼 이번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정치권 등 사회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중대함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세무조사란 과세요건에 관한 자료의 입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필요에 따라 질문하고, 관계서류, 장부 기타 물건을 검사할 수 있는 조세법상의 권한을 말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세무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관행상 세무조사는 5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기업을 상대로 하여 이루어져 왔다.

이번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도 5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자산 100억원 이상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이미 김영삼 정권때인 1994년 10개 중앙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있었던 것에 비추어, 그 시기나 법적 절차에 있어 타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저널리즘, 보수언론으로 대변되는 편향적인 언론에 대한 일대개혁을 가져올 도화선이 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번 세무조사에서도 정례화된 세무조사가 아니라 특별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있다. 이점이 이번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아주 바람직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정도의 비판을 받아야 하는 이유이다. 어쨌든 이번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계기로 정권당당자의 그때 그때의 의지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항상 이루어지는 정례화된 세무조사 시스템을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그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의 경우 자산, 매출액 등 현실을 감안한 설정이 필요할 것이나, 그 세무조사의 간격만큼은 5년으로 법제화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인터넷의 자유를 지켜라!"

인터넷 등급제 반대, 500여 개 홈페이지들 사이트 파업동참

지난 6월 29일(금) 정오부터 7월 2일(월) 정오까지 500여개의 홈페이지들이 문을 닫아버렸다. 검은색 바탕에 붉은 색으로 '인터넷검열반대' 구호가 적힌 화면만을 남겨놓고, 홈페이지의 모든 정보를 차단하는 사이트 파업을 전개한 것이다. 이번 파업은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통신질서확립법)'과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반대해서 일어났으며, 큰 규모의 단체뿐만 아니라 개인과 커뮤니티까지 조직적으로 참여했다. 리처드 스톨만, 국제진보통

신연합 등의 해외 활동가, 단체들 역시 파업을 지지하는 배너를 달거나 '사이트 파업'의 지지 메시지를 보내는 등 관심을 보였다. 통신질서확립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문언·화상·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히 전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자신과 부인의 알몸사진을 게시한 김인규교사의 홈페이지가 음란물로 판정되고, 자퇴생들의 온라인모임인 '아

이노스쿨'이 폐쇄조치 되는 등 이 법 시행 이전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에 의한 인터넷검열문제가 논란을 빚어왔다.

[정보통신검열반대공동행동-freeonline.or.kr]은 "이 법의 시행은 인터넷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온라인 시위'를 범죄 행위로 낙인찍음으로써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고 인터넷내용등급제의 경우, 위헌적 기구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정보통신위원회가 그 시행 주체로 나서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앞으로 네티즌들과 함께 인터넷 내용등급제 불복종 운동과 함께 온라인 시위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산**

다산 인권

제28호

2001. 7. 11.(수)

매주 수요일 발행

●발행처 : 다산인권센터 ●발행인 : 송원찬 ●편집인 : 다산인권편집위원회

442-380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1의6 법전빌딩 313호 ☎ 031-213-2105 Fax 031-215-4395 http://rights.or.kr e-mail: humandasan@hanmail.net

김철준변호사 국회 앞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김변호사, 12일부터 레미콘운송기사 노조 인정 요구하며 단식...이용식위원장도 순회단식 중

김철준변호사(법무법인 다산·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장) 12일 오전부터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레미콘노동자 노동조합을 인정하라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다.

김변호사는 지난해 레미콘운송기사들의 노조 설립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레미콘 운송기사들의 노동자성 인정 싸움을 함께 해왔으며, 지난해 5월 아주레미콘 레미콘운송기사의 투쟁 과정에서 참여연대와 함께 레미콘운송기사의 싸움을 승리로 이끌기도 했다.

김변호사는 “노조신고필증을 받았고 지방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조차 적법한 노조임을 인정했지만, 레미콘 업체들은 꿈쩍도 하지 않고 오히려 외부용차를 쓰며 대체근로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면서 “공권력의 강제 진압 이후 한강변 철교 아래서 노숙투쟁을 벌이고 있는 레미콘운송기사의 절박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거리로 나서는 것밖에 없다”며 단식농성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김변호사는 “이미 레미콘업체들의 부당노동행위는 물론 불량레미콘 사용과 환경오염에 대해 고발도 해보았지만 사업주들 그 어느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고, 결국 레미콘 운송기사들은 물론 가족들의 생계마저도 위협받고 있다”며 100여일 넘게 노숙농성

을 하고 있는 레미콘운송기사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을 토로했다.

김변호사는 레미콘노동자들의 노조

인정이 관철될 때까지 국회 앞에서 물러 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일 오전 전국(2면으로)

논평

죽음 부른 가정폭력 가해자 살인죄로 기소되어야

안산에서 지난 5월 가정폭력으로 한 여성이 사망했다. 사건은 이렇다. 당일 여자가 남자의 절친한 친구에게 강간당할 뻔한 일이 발생했다. 그 남자는 여성의 몸가짐이 허술했다면서 가게문을 잠근 채 옷을 벗기고 구타를 했다. 무려 5시간동안이었다. 경찰은 119가 출동해 문을 부술 때까지 1시간 동안 바깥에 서 있었다. 가까스로 구출된 여성은 이미 뇌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고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을 거뒀다.

남자는 상해치사죄로 구속됐다. 가족과 이웃 주민들은 가해 남성이 여성을 잔혹하게 때려 숨지게 했는데도 살인죄로 기소하지 않은 검찰의 태도를 납득할 수 없었다. 결국 한 달이 지난 6월29일 수원 여성의 전화에 민원을 제기했다. 수원과 안산지역 여성, 시민단체들은 가해 남성을 살인죄로 기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사건은 명백한 가정폭력이다. 이는 검찰도 부인하지 않는다. 문제는 가해 남성이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로 기소됐다는 사실이다. 살인과 상해 치사 사이에는 법정 최고형을 비롯한, 형량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 검찰이 상해치사로 기소한 이유는 가해 남성이 사건 당일 날 의도적으로 여성을 죽이려는 목적으로 때린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서였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5시간 동안 사람을 때렸다는 사실은 이미 살인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다. 가해자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것은 상식의 수준이다. 그런데 검찰은 이런 상식을 순식간에 뛰어넘었다.

우리는 수많은 여성들이 가정폭력으로 사망한 비극을 계속해서 목격해 왔다. 가정폭력, 그 자체가 이미 살인의 한 행위임을 이들 비극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 또다시 비통하게 확인하고 있지 않은가.

따라서 이 사건은 재조사되어야 하며 가해자는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혐의로 재기소되어 정당한 판결을 받아야 할 것이다.

'반부패' 공개 수업 나선 전교조경기지부

도교육계 인사비리 척결 위해 공개수업...도교육청, 불법행위로 간주

(1면에 이어) 건설운송노조 100여명의 조합원들은 한나라당사 앞에서 집단 삭발식을 거행하고 부당노동행위 자행 사업주 처벌을 요구하는 전국 자전거순회 투쟁에 돌입, 오는 16일 서울에 도착할 예정이다.

또 10일 낮 12시부터 전국건설산업연맹 이용식 위원장도 광화문 해태상 앞에서 '부당노동행위사업주 처벌과 레미콘 노동자 문제해결'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이위원장은 청와대를 비롯해 법무부, 노동부, 건교부 등 전국건설운송노조와 관련된 관계부처를 순회하는 순회단식농성을 하기로 이날 일차로 광화문에서 농성에 들어간 것이다. 전국건설산업연맹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모든 방법을 동원한 강력한 총력투쟁을 선포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건설운송노조의 문제 해결을 통해 이 땅이 합법과 불법이 구분되는 진정한 법치국가임을 확인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이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11일 오전 경찰은 이위원장과 조합원 30여명을 불법 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연행, 난지도 등에 강제 분산시켰다.

그러나 노조원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또다시 싸움에 나서고 있다. **다산**

에바다 가치분신청 기각결정

지난 10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지난달 2일 에바다 구재단측 이사인 최성호가 제출한 에바다 신입이사직무 집행정지가처분사건이 이유가 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지난 3월 2일 열린 에바다이사회에서 결정한 신입이사 3명(이찬진, 우철영, 윤귀성)에 대한 이사회결정이 유효하게 됐다.

따라서 현재 김두만 이사의 사임으로 인해 공대위에서 추천한 이사가 5명, 구재단측 이사가 4명이 에바다복지회의 이사진으로 구성되면서 향후 에바다 정상화 모색이 급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다산**

전교조경기지부(지부장 김홍목)는 지난 10일 '반부패, 부패 관련 공개수업'을 강행했다.

전교조 경기지부에 따르면 이날 수업과 조회 혼화시간까지 포함해서 도내 초, 중, 고등학교 680개교에서 3000여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업은 경기도교육계에 만연해 있는 부패(인사비리)를 척결키 위해 학생들을 상대로 진행된 것으로, 전교조경기지부 소속 교사 조합원들이 각종 부패로 인한 사회적 현상 등을 수업교재안으로 만들어 조례, 종례, 수업 시간 등을 통해 강의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수업을 밝힌 11

개 학교 가운데 수원 효성초등학교와 성남여고 등 2개 학교만이 제대로 공개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다른 학교들은 학교측에서 수업 공개 불가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공동수업형식으로만 진행됐다.

도교육청은 이번 공동수업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참여한 교사들을 파악해 징계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전교조와의 마찰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교조 경기지부는 각 지회를 통해 경기도교육감을 고발하기 위한 공동 고발인단인 '100인 위원회'를 조직해 고발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다산**

8월11일 수원 통일축제 한마당 펼친다

수원재단체, 제7회 통일한마당 행사위 12일 발족...6·15선언 실현 방침

오는 8월11일 열리는 제7회 수원지역 통일한마당 행사를 담당할 행사위원회 발족식이 12일 오후 7시 수원시 체육회관에서 열린다.

올해 통일한마당 행사는 특히 지난해 남·북간에 맺어진 '6·15 남북공동선언'의 기념 및 그 실현에 방점을 두고 있는 만큼 수원 지역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등 제 단체들과 학생, 정치인들까지 모두 아우르는 지역 최대 규모의 통일축제로 열린다.

행사 준비위원인 수원 여성회 이기원씨는 "이번 행사가 6·15 남북정상회담의 결과인 김정일 국방위원장 답방과 이를 통한 한반도 평화분위기를 수원지역에서 모범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이번 행사의 의미를 설명했다.

행사준비위원회는 지난 4일부터 오는 8월15일까지 민족화해기간을 선포

하고, 행사위 참가 단체별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7회 통일한마당은 8월11일 장안공원 또는 만석공원에서 열릴 예정이며, 전국 행사는 8월15일 치러진다. **다산**

가자! 놀자! 부대끼자!

'알림 후먼라잇즈' 청소년인권캠프

- ▶연제: 7월25일(수)부터 27일(금)까지
- ▶어디서: 청평 에덴유스호텔
- ▶참가비: 30,000원
- ▶내용: 인권 옷놀이, 청소년 공화국 청문회, 자기에게 쓰는 편지, 인권 미니 올림픽 등
- ▶문의: 경기복지시민연대
031-215-4399
kgwelfare@hanmail.net

다산 인권

제29호

2001. 7. 18.(수)

매주 수요일 발행

●발행처 : 다산인권센터 ●발행인 : 송원찬 ●편집인 : 다산인권편집위원회

442-380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1의6 법전빌딩 313호 ☎ 031-213-2105 Fax 031-215-4395 http://rights.or.kr e-mail: humandasan@hanmail.net

“유진기업 사주 즉각 구속 수사하라”

4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 18일 노조탄압 자행 유재필 구속수사촉구서 대검찰청에 접수

참여연대를 비롯한 4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18일 오후 레미콘운송기 사들의 합법 노조를 탄압하며 불법노동행위를 일삼고 있는 레미콘공업협회 회장이자 유진기업 대표인 유재필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수사촉구서를 대검찰청에 접수했다.

이들 단체들은 수사 촉구서를 통해 “레미콘업체 사업주들은 이미 지방노동위원회와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노조임을 인정받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지속적, 조직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심각한 범죄사건에 따라 엄격한 처벌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유진기업 유재필 대표와 관련해서 “특히 다른 사업주들보다 그 부당노동행위의 정도가 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주들에게 부당노동행위를 행할 것을 지시했다는 강한 의혹을 받고 있고 실제로 중심에 서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이”라면서 검찰의 즉각적인 구속 수사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건설운송노조는 지난해 9월22일 노동조합 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고 합법적인 노조로 출범했으나, 레미콘업체 사업주들이 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며 집단 해고 등 온갖 부당노동행위를 일

삼아 왔다.

그 결과 부당노동행위로 접수된 고발장만도 100여건이 넘는다.

그러나 검찰은 이 같은 고발건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으며 지난달 26일 노동부장관이 유진기업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유재필을 검찰에 구속품신했지만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운송노조 유진분회가 지난 3월부터 파업에 들어간 것을 비롯해 조합원들은 노조 인정을 요구하며 현재 100일째 파업으로 맞서고 있다.

또한 지난 16일 자건거로 전국 순회 나섰던 조합원들이 서울로 돌아오는 때에 맞춰 건설운송노조(2면으로)

국가인권위 대응 인권단체협의회(가칭) 창립

30여개 인권시민단체들, 19일 국가인권위 올바른 실현 위해 다시 결함

7월 19일(목) 오전 11시 명동 카톨릭회관 3층 강당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올바른 실현을 위해 대응하기 위한 인권시민단체 30여 개가 모여 창립하게 된다.

(가칭)국가인권위원회 대응을 위한 인권단체협의회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게 될 이 단체는 오는 11월 시행 전까지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 선임, 시행령의 제정에 주력해서 한시적으로 활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올바른 이해와 인권단체의 대응체제를 위한 내부 워크숍과 해설서 제작, 그리고 서울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활동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전국순회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5월 김대중 대통령의 공

포로 발효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조사대상이나 범위 등 여러 가지로 그 실효성이 없다며 인권단체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지난 3년 여 동안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위해 활동해온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는 허점투성이 국가인권위법을 문제삼으면서 항의성으로 공포가 되자마자 해산을 결의한 상태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의 올바른 실현을 위한 대응기구가 필요하다는 인권단체들의 의견이 모아져서 이날 창립에 이른 것이다. 한편 이날 창립대회에서는 조직구성과 사업계획이 논의되고 민주노총에 대한 공안탄압 등 현 인권 상황에 대한 입장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인권위원 선임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다산]

“민주노총 탄압을 중단하라”

20일 경기지역 시민사회민중단체 첫 공동 시국기자회견 개최

경기지역 시민사회민중단체는 7월 20일 오전 11시 경기도청 뒤편 프라다에서 ‘민생파탄, 개혁실종, 노동·민중 탄압을 규탄하는 시국기자회견’을 공동으로 갖는다.

이날 시국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경기본부, 전농 경기도연맹 등 경기민중연대(준) 소속 단체들과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경기환경운동연합 등 경기 시민운동연대 소속단체 등 모두 70개 단체들이 참여한다.

특히 이번 시국선언기자회견은 경기도지역의 대표적인 시민사회단체와 민중운동단체들이 현 시국에 대한 문제의식을 처음으로 함께 공유하고 연대하는 것이어서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참여단체들의 시국간담회를 통해 현 시국에 대한 공유를 하고 이후 시민사회민중단체들이 함께 공동대응을 모색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날 발표될 시국선언은 건설운송노조에 대한 탄압 등 현 정부의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중단, 농민·노점상에 대한 생존권 요구, 국가보안법·새만금 등 민생현안에 대한 개혁실종을 망라한 현 시국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기민중연대(준)은 이날 기자회견이 끝나고 저녁 6시에 수원 남문에서 김대중 정부를 규탄하는 결의대회와 선전전을 갖는다. [다산]

국가인권위 대응을 위한 인권단체협의회 창립대회

- 때: 7월19일(목) 오전 11시
- 곳: 명동성당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주요 내용
 - ▷ 올바른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위한 투쟁 및 ‘인권협’ 건설 경과보고
 - ▷ 인권현안 보고
 - 최근 인권상황 보고
 - 용역깡패, 구사대, 공권력의 폭력성 그리고 민주노총 탄압에 대하여
 - 발족 선언문 채택
- 문의: 송원찬(031-213-2105)

인권침해 사례 제보·상담 받습니다 031-213-2105

▲ 제 5회 주제가 있는 작은 인권영화제-시애틀 투쟁기록

시애틀 투쟁, 그날을 기억하자

이번 영화제에서는 반세계화의 상징이 됐던 1999년 11월 시애틀 투쟁의 기록물이다. 이 영화들은 ‘이것이 민주주의!’라는 영화와 더불어 시애틀투쟁 3부작으로 불리우고 있다. 영화를 통해 시애틀 투쟁 당시의 상황과 이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투쟁한 영화운동가들의 숨은 땀을 함께 느끼면 좋을 듯하다.

■ 세계를 뒤흔든 5일, 시애틀 투쟁 (1999, 미국, 60분)
시애틀 투쟁을 세계에 알려내기 위해 조직된 독립 미디어 센터(IMC)가 현지에서 제작해서 인터넷 및 위성방송으로 상영한 5편의 작품들을 60분으로 압축한 작품.

■ 노동자들, WTO와 투쟁하다 (2000, 미국, 38분)
시애틀 투쟁을 노동자 계급의 입장에서 기록한 필름으로 반세계화를 외친 노동자 시위대에 대한 가혹한 진압장면들이 담겨 있다. 미국의 인터넷과 비디오 영역의 주요한 활동가인 스티브 젤러가 제작, 연출했다.

▶연제: 7월 24일(화) 오후 7시
▶어디서: 다산인권센터 소극장(문의: 031-213-2105)

다산 인권

제30호

2001. 7. 25.(수)

매주 수요일 발행

●발행처 : 다산인권센터 ●발행인 : 송원찬 ●편집인 : 다산인권편집위원회

442-380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1의6 법전빌딩 313호 ☎ 031-213-2105 Fax 031-215-4395 http://rights.or.kr e-mail: humandasan@hanmail.net

유재필 처벌 1000명 대검찰청에 고발장 접수

24일 시민사회노동계 유재필 처벌 시민고발대회 연 뒤 접수, 구속 수사 촉구

24일 오전 10시 서울 지방검찰청 앞에서 전국건설운송노조 조합원들과 시민사회단체, 학생들 1,000여명이 '유재필 처벌 1000명 대검찰청에 고발장 접수'를 가졌다.

민중연대 박석은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집회에서는 보름째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는 전국건설산업연맹 이용식 위원장의 투쟁사와 현재 건설운송노조 조합원들과 함께 동조단식을 하고 있는 학생들의 투쟁사가 이어졌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한 사람씩 자신의 이름과 주소가 적힌 고발장을 들고 대검찰청으로 향했다. 이 고발장은 그동안 계획적이며 지속적으로 노동조합을 탄압한 유재필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하는 것이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자신의 기업인 유진기업 소속 조합원들을 탄압하는 것은 물론 노조의 거듭된 단체교섭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레미콘협회의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음을 기회로 다른 사업장의 사용자들에게 이에 응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고 밝혔고, 또한, '노동자들이 정당한 파업에 돌입하였으므로 정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음에도 불

구하고 용차라고 불리는 일용임대차량을 적극 동원하여 이들로 하여금 레미콘 운송 작업을 하게 하였다.'라며 대체인로행위에 대해서도 고발했다.

이들은 특히 피고발인 유재필을 즉각 구속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경찰은 대검찰청 정문을 봉쇄하면서 고발인들의 고발장 접수를 막았다.

경기지역, 공무원 노조 출범 박차

25일 경기지역 공무원직장협의회연합회 출범...10개 지부 3천명 회원

경기지역에서도 공무원직장협의회연합회가 출범한다.

경기지역 공무원직장협의회연합회(이하 경기리연)는 25일 오후 7시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강당에서 출범식을 갖는다.

그동안 공직사회개혁과 노동기본권 회복을 위해 각 지자체마다 공무원직장협의회를 구성해 활동해온 이들은 경기지역 연합체를 구성해서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경기리연은 이날 출범식에서 초대회장으로 오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 김원근(현재 전공련 노조특별위원장)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기지역에서는 부천, 오산, 파천 등 10여 개 공무원직장협의회와 회원 3천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지난 6월 9일 창원에서 열린 공무원결의대회를 주동한 전공련 집행부에 대한

막았다. 이 과정에서 고발인들과 경찰 사이에 실랑이가 이어졌으나 얼마 후 경찰은 30명 단위로 고발장 접수를 하도록 했다. 이날 고발장 접수는 큰 마찰 없이 오후 늦게까지 이어졌다.

한편, 25일 오후 노동일보 주관으로 '특수고용직 노동권 보장과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에 대한 (2면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경남지역 김영길 대표가 체포되는 등 현 정부의 탄압이 진행되고 있어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노조는 현 김대중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으며, 지난 5월초 유엔사회권위원회에서도 '공무원들의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참여할 권리, 단체교섭권, 파업권이 법과 실제 모두에서 보장되어야 한다'며 공무원노조의 결성을 보장할 것을 우리나라에 권고했었다.

한편 경기지역에서 제 시민사회민중단체와 법조계, 학계, 종교계를 망라한 '(가칭) 공직사회개혁과 공무원기본권 쟁취를 위한 경기지역공동대책위원회'가 조만간 구성돼 본격적으로 공무원노조결성의 지원에 나설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다산]

경기지역 통일 향한 힘찬 행보

6·15남북공동선언 실현 경기통일연대(준) 27일 토론회 개최

경기도차원의 민간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위원이, 한도숙(전농 도연맹 부의장)로 6. 15 남북공동선언과 관련한 토론회가 개최된다. 주최측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경기도차원에서 6.15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8. 15 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경기도추진본부의 결성을 통해 그동안 경기도지역에서 미약하게 논의했던 통일 담론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김준기(4월혁명회 공동대표, 전 신구대학 교수)와 김영기 지부장(민예총 경기도지부장)이 주제발표를 한다. 그리고 토론자로 이기우(경기도의원), 박우형(민중노동당), 유미화(안산YWCA 총무), 홍경표(천주교수원교구 정의평화

위원회), 한도숙(전농 도연맹 부의장)이 참여한다. 주최측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경기도차원에서 6.15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8. 15 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경기도추진본부의 결성을 통해 그동안 경기도지역에서 미약하게 논의했던 통일 담론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경기통일연대(준)에는 민주노동당,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등 17개 경기도연합단체들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다산]

청소년인권캠프

7월 24일부터 2박 3일로 열릴 예정이던 청소년인권캠프가 더 많은 청소년들의 참여를 위해 부득이 일정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캠프는 8월 6,7일(월, 화) 1박 2일로 수원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참가비는 1만원입니다.

- ◆ 일정 : 8월 6일(월) ~ 8월 7일(화) (1박 2일)
- ◆ 장소 : 수원청소년문화센터
- ◆ 대상 : 경기지역 남녀 중·고등학생
- ◆ 참가비 : 1만원
- ◆ 내용 : 인권, 너 도대체 뭐야? 권리하고 여행하자, 청소년 공화국 청문회, 영상으로 만나는 한여름 밤의 인권이야기, 넌 누구니? 바꿔봐! 우리 함께 놀아볼래~
- ◆ 연락 : 031-215-4399

인권단상

정말 그것이 알고 싶다

건설산업연맹 이용식 위원장과 김철준 변호사가 레미콘노조의 인정을 주장하며 보름째 단식투쟁을 하고 있다. 그리고 각계각층의 수많은 단체들이 레미콘공업협회 회장인 유재필의 구속수사를 주장하며 농성, 시위와 고발을 제기하고 있다. 어쩌면 유재필이라는 일개의 한사람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목을 매고 있는지 의아해 할 것이다.

하지만 그는 대단한 사람이다. 100여건의 고소, 고발장이 접수되어 있고 그 죄질이 추악하고 노동부에서 구속품신을 올렸는데도 검찰은 꼼짝도 안하고 있다. 노조필증을 받고도, 법원과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했음에도 이렇게 안하무인으로 나온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의기양양한채 완강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맞서는 우리들의 대응은 처절하기 그지없다. 장기투쟁과정에서 가정이 파탄 날 지경이고 모두들 힘겨워 하는 모습은 정말 눈물겹다. 법으로는 해결되지 않아 길거리로 나오게 되었다는 김철준 변호사의 말이 결코 장난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하고 있다.

그래 유재필은 대단한 사람이다. 모두 혀를 찬다. 그래서 그런지 유재필에 대해 현 정권의 실세와 막연하다느니 온갖 이야기들이 난무한다. 그래 유재필과의 싸움은 단순히 한 개인과의 싸움이 아니다. 자본과 정권, 그리고 검찰과 그 모리배들이 카르텔처럼 형성된 사악한 무리들과 노동자의식이 무언지도 제대로 모른 채 출발한 순진한 레미콘운송기사와 양심적 사람들과의 성전이다. 왜냐하면 이 하나의 싸움으로 우리사회의 온갖 추악상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순진한 우리는 정말 궁금하다. 정말 구속을 안 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그것이 알고 싶다.

인권침해 사례
제보·상담 받습니다
031-213-2105

다산인권

제31호

2001. 8. 8.(수)

매주 수요일 발행

●발행처 : 다산인권센터 ●발행인 : 송원찬 ●편집인 : 다산인권편집위원회

442-380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1의6 법전빌딩 313호 ☎ 031-213-2105 Fax 031-215-4395 http://rights.or.kr e-mail: humandasan@hanmail.net

불량레미콘 사실에도 사업주 비호하는 산자부

100인 위원회, 10일 오전 11시30분 산업자원부 앞 규탄집회...7일 장문기위원장 석방

레미콘 노동자기본권보장과 유재필 구속을 위한 100인위원회는 오는 10일 오전 11시 30분에 과천 산업자원부 앞에서 불량레미콘 사업주를 비호하는 산업자원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연다.

지난 7월 27일 레미콘 노동자 기본권 보장과 유재필 구속을 위한 범 인권시민사회단체 100명으로 구성된 100인위원회는 7월 30일 민주당 김종권 대표를 면담하면서 레미콘 노조인정을 요구하였다. 이후 검찰은 전국건설운송노조가 부당노동행위 사업주를 상대로 제기한 고발 사건을 서울지검으로 모아서 현재 수사중이다. 지난 3일 유진기업 대표 유재필을 소환조사한데 이어 조합원들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조사중에 있다.

그 동안 건설운송노조는 불량레미콘과 관련해 산업자원부에 KS인증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불량레미콘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자원부는 시정조치만으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100인위원회는 산업자원부 장관 면담을 요청했으나 산업자원부는 건설운송노조와 사실여부를 공동조사할 방침이라며 면담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건설운송노조는 산업자원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비판하면서 공동조사를 유보한 상태이다.

100인위원회는 산업자원부가 사업주를 비호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규탄

하는 집회를 갖기로 한 것이다.

한편, 올해 초 레미콘 리베이트와 관련하여 건설운송노조 제일분회 조합원들에 의해 고발되었던 제일레미콘 이석주대표가 지난 2일 구속되어 현재 영등포구치소에 수감중이다. 이대표는 현재 용역깡패를 동원해 조합원들을 구타한 폭력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건설운송노조 일부 조합원들을 제외한 조합원들은 파주지역과 여

주 그리고 동국대에서 노동조합 인정을 위한 집단 단식농성을 10여 일 벌이고 있다.

한편 동부지부 동군분회는 최근 회사측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합의를 작성, 타결을 보았다.

지난 6월 여의도 농성장에서 체포되어 구속 수감되었던 장문기 건설운송노조 위원장과 서용호 부위원장, 조직 1, 2부장은 7일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고 석방되었다. **다산**

■ 레미콘 노동자 기본권 보장 촉구와 산업자원부, 사업주 비호 규탄대회

일시 : 2001년 8월 10일(금) 오전 11시 30분
장소 : 과천 산업자원부 앞

■ 레미콘 노동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과 관련한 노동법학자 기자회견

일시 : 2001년 8월 13일(월) 오전 11시
장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실

■ 레미콘 노동자 기본권 실현과 유재필 구속을 위한 100인 위원회 - 릴레이단식자명단 -

- 7월(목) 유문종(수원KYC 공동대표) / 8월(수) 전영을(수원경찰서 공동대표)
- 9월(목) 김남근(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 10월(금) 최재훈(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
- 11월(목) 오창익(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 12월(월) 임태훈(동성애자인권연대 대표)
- 13월(월) 정병찬(전비련 집행위원장) / 14월(목) 박승훈(한국비정규센터 소장)

에바다복지회, 정상화 길 바쁘다

7일 민주적 이사진 4명 추가선임

지난 7일 저녁 8시 '사회복지법인 에바다복지회'(이사장 김종인) 이사회가 열렸다. 이날 9명 전원의 이사가 참여하여 4시간동안 험악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된 이사회에서는 4명의 신입 이사를 추가 선임했다.

이날 선임된 이사는 김칠준(법무법인 다산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용한(에바다연대회의 공동대표), 박경석(노동장애인야학 교장), 박래군(인권운동연구소 상임연구원)등 모두 4명이다. 이로써 현재 에바다복지회 이사는 총 13명으로, 그동안 에바다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던 민주적 인사들이 대거 이사진으로 참여하게 되어 향후 에바다의 정상화를 비롯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또한 이날 이사회에서는 기존의 김종인 이사장과 최성호 상임이사가 함께 임원에서 사퇴하고 임시이사장으로 윤귀성 치과원장, 상임이사로 이우복 목사를 선임했다.

하지만 향후 에바다복지회의 행보는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지금까지 구재단측 이사들과 이를 옹호하는 세력들이 온갖 물리적 방법을 동원하여 완강한 버티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 이사진체제를 본 궤도에 올려놓고 실무적인 활동을 진행할 사무국 등을 운용해서 갈등을 최소화하고 파행을 막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편, 이날 열린 이사회는 지난 3월 2일 이사회에서 합법적으로 선임한 이

**인권침해 사례
제보 · 상담 받습니다
031-213-2105**

찬진 변호사 등 3명의 민주적 이사진에 대해 구재단측 이사들이 이사직무 집행정지처분신청을 내서 평택지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이 이루어진 후 처음 열린 이사회였다.

이 결정 이후 이번 이사회가 열리기 전까지 구재단측은 평택시와 김종인 이사장을 상대로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온갖 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산**

경기민중연대(준), 경인총련탄압 강력 반발

6일 수원지검에 공개질의서 보내, 12일 수원 팔달문서 항의집회 예정

지난 6일 경기민중연대(준)는 수원지검과 성남지검에 경인총련의 당원직 대의원들에 대한 실정법 위반 등 사법처리방침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이들은 오는 8일까지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이 공개질의서는 구체적으로 9기 한총련의 이적성 여부에 대한 법적 근거와 이번 조치가 헌법에 명시된 '사상과 양심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경인총련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검·경 차원에서 경인총련 대의원(한총련 대의원 겸직)들에게 3차례에 걸쳐 출석요구를 하였으며 한총련을 탈퇴하고 활동중단을 약속하지 않으면 사법처리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는 것이다.

현재 한총련 소속 대학생 1명이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앞으로도 검찰은 전국 한총련 대의원 350여명 중 탈퇴에 불응한 대학생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설 방침이어서 한총련 이적성문제로 또다시 구속자가 속출한 전망이다.

한편, 지난 4일 경인총련이 소속되어 있는 경기민중연대(준)는 성명서를 통해 현 검·경의 시대착오적인 한총련탄압을 중단하고 이적규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오는 10일(금) 오후 2시 경기도경을 항의방문하는데 이어 12(일) 오후 2시에는 한총련 탄압규탄 및 국가보안법폐지 경기지역 결의대회를 수원 팔달문에서 갖고 수원지검까지 시가행진을 벌일 예정이다. **다산**

다산인권센터 www.rights.or.kr

■ 6.15 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경기·수원지의 통일행사 ■

6.15 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제7회 수원시민 통일한마당

- 일시 : 2001년 8월 11일(토) 오후 6시
- 장소 : 수원 중앙공원(만석공원 옆)

6.15 공동선언실현 '2001 경기도 통일한마당

- 일시 : 2001년 8월 12일(일) 오후 6시
- 장소 : 경기도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다산인권

제32호

2001. 8. 16.(목)

매주 수요일 발행

●발행처: 다산인권센터 ●발행인: 송원찬 ●편집인: 다산인권편집위원회

442-380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1의6 법전빌딩 313호 ☎ 031-213-2105 Fax 031-215-4395 http://rights.or.kr e-mail: humandasan@hanmail.net

오산시, 전국 처음 직협소속 공무원징계 말쟁

17일 징계공무원 경기도소청심사위에 소청제기 전공련·시민단체 강력대응

경기도내 지자체 가운데 전국 처음으로 오산시가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직협) 소속 간부들을 징계해 말쟁을 빚고 있다.

지난 4월 16일 오산시는 오산직협의 핵심간부인 이완규 부회장(행정6급)과 한태영 총무부장(행정7급)을 갑자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가입범위 조항의 가입대상이 될 수 없는 부서로 인사발령을 냈다. 하지만 오산직협(회장 김원근)은 인사발령은 직협활동을 위축, 탄압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강력히 항의하며 직협활동을 계속해 왔다. 그러자 오산시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난 6월 29일과 7월11일 2차례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 4월21일 한신대에서 열린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간담회와 4월28일 영도 광양과의 자매결연식에 참석한 것 등을 이유로(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무위반) 당시 직협 부회장이 이씨에게는 견책, 총무부장인 한씨에게는 감봉 3월 등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오산직협은 즉각적으로 직협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부당한 인사라고 주장하고 있고 오산시는 '인사권은 시장의 권한'이라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오산지역 시민단체 등도 오산시의 결정에 대해서 직협을 탄압하는 행위라며 즉각 반발, 지난 7월10일 '공직사회 개혁과 오산직협 수호를 위한 지역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매주 토요일 오산터미널 앞에서 시민 홍보전을 전개하고 있다. 오산직협은 또 '전국직장공무원협의회연합(전공련)'과 '경기지역직장공무원연합(이하 경기련)'은 물론 경기지역 시민단체,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과도 연대해 공동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오산시 징계가 공무원직협활동을 이유로 전국 최초로 발생한 것이어서 이번 소청결과에 따라 전국공무원 직협활동에 직간접으로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공무원 노조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7월 25일 창립한 경기련(의장 김원근)은 경기도청직협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조직확대사업을 펼치고 있고 각 지자체마다 직협구성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고 전했다. 오는 9월 5일(수)에는 이들을 지지하고 있는 경기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가칭)공직사회 개혁과 공무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경기지역 공동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과 동시에 출범한 예정이어서 앞으로 공무원노조와 관련한 논의와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다산**

작은 인권영화제 여섯 번째



굴곡진 우리 현대사의 기록, 인혁당

주제가 있는 작은인권영화제 여섯 번째이야기 '4월 9일'은 1974년 박정희 유신정권에 의해 죽어간 인혁당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영화는 그들이 살았던 어두운 시대, 인간의 눈으로 그들을 쫓아가, 지금 우리에게 진정한 민주주의의 의미를 다시 묻는다.이제 민주주의를 위한 싸움은 끝났느냐고...러닝타임 125분

■ 일시 : 2001년 8월 28일(화) 오후7시

■ 장소 : 다산인권센터 소극장

레미콘운송기사는 사업주가 아니라 노동자다.

13일 노동법학자 21명, 기자회견을 통해 레미콘노동자 인정요구

지난 8월 13일(월) 오전 10시30분에 민변사무실에서 노동법학자 21명이 '레미콘 분쟁에 대한 노동법학자 의견서'를 발표하면서 레미콘운송기사의 노동자성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광택 교수(국민대)는 이번 사태에서 레미콘 사용자들이 '여러 국가기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잘못된 믿음(레미콘 운전자는 근로자가 아니고 건설운송노조는 적법한 노조가 아니라는 것)을 버리지 않고, 부당노동행위 등 위법·범법행

위를 계속함으로써 국가기관의 전문적·합법적 판단을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며 민주적 법질서를 심각하게 위해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그리고 노동법학자들은 정부에게 '이러한 행위에 대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 부득이 국가의 공권력을 대처할 수 밖에 없다'며 레미콘 사업주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요구했다. 그리고 사업주가 제기하는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리라는 주장에 대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대법원의 최종 판단 때까지 이번 사태와 같은 '무법상태'를 계속 방임해야

한다는 생각은 건전한 이성과 사고를 지닌 법률가나 국민에게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발상이다. 백보양보하여 대법원의 최종결정을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때까지는 다른 국가기관에서의 결정이 인정된 권리(이번 사태의 경우 건설운송노조의 근로삼권)가 존중되는 상태에서 기다려야 정상적인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노동법학자들은 앞으로 이러한 분쟁이 다른 비정규직과 특수고용직에 대해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비정규직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정비를 통해 보호대책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다산**

인권침해 사례 제보·상담
받습니다 031-213-2105

레미콘 분쟁과 관련한 주요 판결 및 결정 내용

■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의 점, 즉 노무공급관계의 성립과 종료는 오로지 신청인 회사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운송차주들이 담당하는 레미콘운반업무는 신청인 회사의 사업에 필수적 내지 본질적인 것이며, 운송차주들이 사업자로서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가지지 못하여 독자적으로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완전히 봉쇄되어 있으며, 보수의 액에 있어서도 운송차주들의 실수입이 신청인 회사의 정규직원의 보수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지 아니한 점등에 비추어 보아도, 신청인 회사의 운송차주들은 신청인에게 종속된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노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2민사부 2001. 4. 13 결정(2001가합160)

■ [피신청인 회사들은 노동조합의 거듭된 단체교섭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노동조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단체교섭을 회피하고 있고, 적법하게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이 교부된 만큼 권한있는 기관으로부터 최종적인 판단이 있기까지는 그 실체를 인정하고 대화와 타협의 자세로 자주적·자율적인 해결노력을 보여야 함에도 그리하지 않고 있는 것은 회사의 잘못이 크다 할 것이며, 우리 위원회가 본건 노동쟁의 조정신청사건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정회의를 개최하고 회사측에 거듭 노동조합과의 자주적·자율적인 해결을 위한 대화를 진행하도록 권고하였음에도 회사들은 종전의 이유를 들어 계속하여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우리 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 (있다) ...

본건 노동쟁의조정신청사건과 관련하여서는 회사들이 노동법과 나아가 헌법적 보호 가치를 부정하고 있는 점과 지금의 노동쟁의 상태에 이르는 과정에서 회사들의 잘못이 크...(다)... 우리 위원회는 노·사 당사자간에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루빨리 노사교섭의 장을 만들어 성실하고 진실된 대화를 통해 노동쟁의를 자주적·자율적으로 해결할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

-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중노위 2001. 4. 6 결정, 2001조정10)

다산인권

제33호
2001. 8. 22.(수)
매주 수요일 발행

●발행처 : 다산인권센터 ●발행인 : 송원찬 ●편집인 : 다산인권편집위원회

442-380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1의6 법전빌딩 313호 ☎ 031-213-2105 Fax 031-215-4395 http://rights.or.kr e-mail: humandasan@hanmail.net

“나는 보이지 않는 창살에 갇혀있다.”

22일, 장애인이동권연대와 디지털로 공동으로 서울지법에 이동권침해 손해배상청구

오늘 오전 10시 서울역앞에서 장애인이동권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이하 장애인이동권연대)가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해달라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리고 곧바로 지하철에 장애인편의시설 미비로 인해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침해받는다며 한진구(지체장애 1급)와 9명이 서울시와 지하철사업자(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지법에 제출했다.

장애인이동권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장애인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헌법상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갖고 있고 국가는 이러한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보이지 않는 창살에 갇혀있는 우리사회의 장애인의 현실에 대해 우리사회가 도덕적,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며 이번 소송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리고 소장에서 원고 조미경씨는 '대학수능시험을 앞두고, 오목교에 있는 입시학원을 다니기 위해 지하철을 이용해야하는데 양평역(5호선)에 리프트가 없어, 지하철을 이용하지 못하고 휠체어를 타고 힘겹게 30-40분을 가야한다'며 그 고통을 호소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대학교를 상대로 장애인편의시설 미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박지주씨 사건과 함께 그 투쟁과정과 판결 결과가 장애인인권운동의 새로운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 소송은 특별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130여명의 인권, 시민운동을 펼치고 있는 변호사들로 구성된 '사이버 로펌 디지털로(Digitallaw)와 'imbc 문화방송'이 공동으로 월 1건 이상의 무료공익소송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후, 처음으로 선정되어 무료 변론 지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디지털로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지난 7월 9일부터 디지털로와 imbc의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총 38건의 무료공

익소송 신청자들 중에서 이동권연대의 이번 소송이 공익소송에 적합하다고 판단, 선정되었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이번 소송과 같이 우리사회의 사회적 약자들이 권리와 차별의 횡포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공익소송에 대한 지원을 펼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올해 1월에 발생한 오이도역 수직리프트 추락사를 계기로 노들장애인야학 등 장애인단체들로 구성된 이동권연대는 지난 7월 30일부터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며 서울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고 백만명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다산]

주제가 있는 작은인권영화제 여섯 번째 이야기 1975년 4월 9일 '사법사상 암흑의 날'

그날 박정희 정권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도예종씨를 비롯한 8명을 사법살해했다. 대법원 판결 15시간 뒤, 사형집행이라는 초유의 사건을 만든, 박정희... 그를 다시 찬양하는 우리들에게 그날의 일을 묻는다.

- 일시 : 2001년 8월 28일(화) 오후7시
- 장소 : 다산인권센터 소극장
- 러닝타임 : 125분

한총련 대의원 구속, 제동 걸렸다. 수원지방법원, 제9기 한총련 대의원에 대한 첫 영장 기각

지난 18일(토)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영장담당판사 : 김수일 판사)에서 제9기 한총련 대의원 김희인(한국의국어대 동아리연합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법원은 사유를 '피의자가 당연직 대의원으로 활동하였지만 한총련 정기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직책상 한총련의 활동에 단순 참가한 정도에 불과한 자인 점 등'을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검찰과 경찰의 제9기 한총련 대의원에 대한 탈퇴압력과 비탈퇴 대의원 연행·구속에 대한 사회 각계의 비난이 높은 가운데 이뤄진 것이라서 의미가 크다. 지난 4일 경기민중연대는 한총련 이적규정철폐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12일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집회를 한 것을 비롯해서 지난 10일에는 경기도경찰청을 항의방문하기도 했다.

김희인 학생의 변호인 박태현 변호사(법무법인 다산 종합법률사무소)는 변호인 의견서에서 '제9기 한총련이 이적성 시비가 있던 강령을 철회한 마당에 다시금 이적성여부로 대의원 탈퇴를 강요하고, 탈퇴유무에 의해 구속과 불구속을 결정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번 영장기각은 향후 제9기 한총련 당연직 대의원으로 활동하는 대학생들의 구속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검찰과 경찰의 무리한 수사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총련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영장기각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여

전히 제9기 한총련에 대한 이적성 여부에 다가가지 못한 채 단순히 가담 정도 등의 표피적인 문제로 접근한 것'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다산]

●100인위 레미콘 사업주 구속처벌촉구 기자회견

레미콘노동자 기본권 보장과 유재필 구속을 위한 100인위원회는 21일 오전 10시에 서울지검 기자실에서 '유재필등 레미콘 사업주 구속 처벌촉구 100인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철준, 차병직, 윤기원 변호사와 이광택교수가 참석하였다.

100인 위원회는 기자회견문에서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 회장 유재필은 합법적인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용역강패를 동원하여 노조를 탄압함은 물론 타 레미콘회사에게도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도록 사주하였고, 더 나아가 검찰수사에도 불구하고 반성은커녕 일간지에 허위광고를 유포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레미콘운송기사들로 구성된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은 노동부, 지노위, 법원도 인정한 합법적인 노조임은 자명하다'라며 거듭 건설운송노조의 합법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대한민국 검찰이 진정으로 법치주의 실현의 의지를 갖고 있다면 즉시 건설운송노조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이를 부정하는 유재필을 구속수사 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현재 서울지검 공안2부에서는 건설운송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쳤으며 레미콘 사업주 유재필(유진기업)과 이석주(제일레미콘)를 소환

조사 한 바 있다. 하지만, 조사과정에서 사업주들의 부당노동행위가 여실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와 노조의 눈치만을 살핀 채 검찰은 수사종결과 수사발표를 늦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00인위원회는 지난 7월 27일 결성된 이래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릴레이 철야 단식농성을 계속하고 있으며, 건설운송노조는 당산철교아래에서 노숙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사업주들은 건설운송노조와의 단체교섭을 회피하고 있다. [다산]

삼성해고자들 수원삼성전자 앞에서 연대집회

삼성계열사의 해고자들로 구성된 삼성해고자복지투쟁위원회(이하 삼성해복투)는 오는 24일(금) 오후 1시에 수원 삼성전자 정문앞에서 '삼성제별 노동자 탄압분쇄, 민주노조건설, 해고자원칙복지 쟁취 결의대회'를 갖고 인근 삼성전자, 삼성코닝, 삼성SDI을 순회하며 행진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 집회는 삼성생명 등 전국 해고자들을 비롯한 계열사 해고자들의 어려운 복지투쟁을 지원, 엄호하기 위해서 삼성해복투가 전국 순회 집중집회를 가지는 가운데, 수원에서 열리게 된 것이다. 삼성생명은 98년 IMF 외환위기때 1700여명(여성 1200여명)의 노동자들이 강제해고된 후 3년이상 원직복직투쟁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1999년과 2000년에 수원과 천안SDI 노동자들이 노조결성과과정에서 납치와 감금을 통해 강제 해고시켜 삼성의 무노조 방침과 반노동자성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아 왔다. 한편 삼성해복투는 지난 7월 2일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에 가입하여 민주노총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다산]

다산인권

제34호
2001. 8. 29.(수)
매주 수요일 발행

442-380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1의6 법전빌딩 313호 ☎ 031-213-2105 Fax 031-215-4395 http://rights.or.kr e-mail: humandasan@hanmail.net

또! 또! 경찰의 폭력적인 강제연행

비정규직 대책위, 국회의사당 진입 시도

비정규직 투쟁 승리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어제 오후 2시 30분경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처벌을 위한 6차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하였다.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한통계약직 노조 조합원 7~8명이 여의도 국회의회관 옥상에 올라가 '한국통신키약직 현안문제 정부는 즉각 해결하라'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유인물을 배포하자, 집회참가자들은 국회의사당으로의 진입을 시도하였다. 그 과정에서 린나 이, 건설운송, 대송택 노조 노동자 5~6명이 국회의사당 앞마당으로 들어가 '비정규직 철폐' 플래카드를 들고 농성을 시작하였다. 이들은 곧 달려온 영등포 경찰서 기동대 전경들에 의해 10분만에 10명 전원이 영등포경찰서로 연행되었다.

농성 노동자들이 연행되자 영등포 경찰서 앞으로 항의하러간 노동자들을 경찰은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며 연행하였다. 연행과정에서 건설운송노조cki분회 석원희 분회장이 방패로 머리를 맞아 머리에서 피가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은 응급처치도 하지 않은 채 연행하기도 하였다. 현재 영등포경

찰서에는 71명의 노동자들이 연행되어 어제 밤에 강서, 구로, 관악, 남부, 노량진, 방배경찰서로 각 각 분산수용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

28일 경찰의 폭력적인 연행을 규탄하는 성명서가 파견철폐공대위를 비롯하여, 한통계약직 노조등에서 발표되었으며 오늘 오전11시 세종문화회관 뒤편에서 '비정규직 장기투쟁사업장 현안문제 해결촉구와 무차별적 폭력연행 규탄을 위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가졌다.

비정규직투쟁승리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어제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장기투쟁을 벌이고 있는 한통계약직노조, 건설운송, 린나이코리아노조등 비정규직노조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당국이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과 생존권유린과 부당노동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였고, 정부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노동법 개악을 중단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개정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였다. 한편, 레미콘 노동자 기본권 보장과 유채필 구속을 위한 100인위원회는 오늘 서울지검 앞에서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처벌을 위한 집회를 가졌다. 건설운송노조 조합원들은

아직도 당산철교 아래에서 노숙을 하며 130여일째 농성 중이다. **다산**

수원시민단체, 지방선거 참여 본격시동

9월 3일(월) 오후 7시에 수원경찰서와 수원KYC 주최로 '지자체 2기 시정·의정평가 네트워크 구성과 2001년 지자체선거 대응전략 모색'을 위한 워크숍을 가진다. 주최측에 따르면 '그동안의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2002년 6월 제 3기 지자체 선거를 9개월 앞두고 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수행나갈 사업들을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나 개인을 망라해서 별도로 '(가칭)수원시와 수원사회 활동평가를 위한 시민단체네트워크'와 '(가칭)지방자치실현을 위한 수원지역 연대모임'등을 구성해서 논의수준에 머물렀던 단계를 높여서 본격적으로 조직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시민단체의 지방선거 참여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각 지자체마다 이러한 논의가 확대될 것으로 보여 내년 지방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다산**

<기고>수구 언론과 야당에 의해 조작된 매카시즘 선봉

8·15 방북단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의 문제점

남북분단이래 초유의 대규모 민간단체 방북행사가 수구 언론과 야당에 의해 그 성과들은 사상된 채 일부 시행착오만이 부각되며 '평양 광란극'으로 매도되고 있다. 탈세 등 범죄행위로 인해 사주들이 구속되자 보복의 칼날을 갈고 있던 신문들은 마치 먹이라도 걸려든 양 이성을 잃은 채 난도질을 하고 있고, 오직 집권에만 눈이 어두운 정상배들이 우굴거리는 야당은 신이 나서 광란극 운운하는 비난들을 연일 퍼붓고 있다. 집권 여당의 거듭되는 내치 실패에 염증을 느끼고 있던 많은 국민들도 실상을 제대로 모른 채 신문들의 여론조작에 우왕좌왕하고 있다.

이처럼 신문권력에 의해 오도된 여론의 위협에 물리자 공안당국은 방북단중 16명을 김포공항에서 불법적으로 긴급체포하여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과정에서 변호인들이 주장한 긴급체포의 불법성과 국가보안법 남용의 문제점들을 모두 무시하고 신문권력의 위협으로부터 독립하여 재판을 하지 못한 채 7명 전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사태를 접하면서 그 동안 인권단체와 시민사회단체에서 왜 그토록 강력하게 국가보안법 폐지주장을 하여 왔는지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된다.

동국대 강정구 교수의 경우 만경대 방명록에 '만경대정신 이어받아 통일

위업 이룩하자'고 기재한 것이 국가보안법 7조 1항의 이적 고무, 찬양, 동조죄에, 그리고 그 혐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집을 압수 수색하여 2001. 4.부터 8.까지 서울대 등 4개 대학에서 주체사상 토론회에 발표한 내용이 국가보안법 7조 5항의 이적표현물 제작,반포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방명록 기재는 순간적으로 떠오른 단상을 가볍게 기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북에서는 사용조차 되지 않는 용어이고 항일독립운동의 유자녀를 보호하고 교육시킨 1946년 설립당시의 역사적인 의미로 사용한 개념이지 주체사상의 옹호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북한과 통일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교육하는 대학교수의 입장에서 대학교 학생회의 초청을 받아 공개적인 발표를 한 것을 가지고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도 삼지 않다가 이번에 이적표현물이라고 몰아부치는 것 역시 정말 어처구니없는 매카시즘 수법이 아닐 수 없다. 방명록기재는 비슷한 경우인 문규현 신부의 방북사건 판결문에서 이미 무죄가 선고되었고, 대법원판례도 학문적인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표현물에 이적성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수차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처럼 정치적 필요에 따라 여전히 국가보안법은 남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범민련 관련 6인의 경우도 오히려 그 동안 문제시되었던 연방제를 6.15

선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회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희생양으로 삼아 국가보안법상의 잠입, 탈출, 회합,통신죄 등을 적용하여 구속하였으니 이 역시 국가보안법 남용의 극단적 사례이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남북이 화해하고 평화롭게 교류하면서 통일을 이루어 나가는 데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국가보안법이며 이 국가보안법을 시급히 폐지하지 않으면 남북화해와 평화통일의 길에 한 걸음도 전진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다시금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 김동균 변호사

청소년모의법정대본공모
심사 및 이후일정

- 작품선정완료 : ~9월 7일
- 심사결과 발표 : ~9월 12일
- 시상식 : ~9월 14일
- 공연준비 : ~11월 3일
- 공연 : 11월 3일(학생의 날)

다산인권센터
www.rights.or.kr

제6회 수원인권영화제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문의:031-213-2

다산인권

442-380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1의6 법전빌딩 313호 ☎ 031-213-2105 Fax 031-215-4395 http://rights.or.kr e-mail: humandasan@hanmail.net

제35호

2001. 9. 5.(수)

매주 수요일 발행

●발행처 : 다산인권센터 ●발행인 : 송원찬 ●편집인 : 다산인권편집위원회

결혼앞둔 신랑, 국가보안법으로 구속

경인총련학생들, 수원지검 앞에서 연일 격렬한 항의시위 벌여

1996년 경인총련 의장이었던 김건수(경희대 졸업생)가 지난 9월 2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김건수는 9월 9일 결혼예정일을 앞둔 채로 3년전의 혐의사실로 구속되었는데, 가족을 비롯한 각계로부터 가정파탄을 부르는 무리한 수사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8월 30일 수원 영통소재에 있는 신혼살림집에서 나오던 위 김건수를 경기지방경찰청 보안과 보안수사2대 경찰들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체포하고, 9월 1일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수원지검 정점식 검사는 구속영장에서 '제3기 경인총련 의장으로 활동하다가 검거 구속된 이후 한총련을 혁신 강화발전 시키기 위하여 1998학년도 제5기 경인총련을 이끄는 비공개 중앙집행위원회 정책위원장등을 역임하며 한총련 대의원대회 및 각종 행사를 주도하였고, 주거지가 불확실하며, 집행유예 결정자에 해당하여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적단체 가입죄로 처벌을 받을 경우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라며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영장은 당일 오후 6시에 발부되었다.

담당 변호인인 박태현 변호사(법무법인 다산)는 영장실질심사에서 '1998년

경인총련 중앙집행위 정책위원장, 학생의 본분으로 열심히 공부하여 성적이 우수 장학생으로 선발되기까지 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학생운동을 했고 올해 8월 20.졸업을 하였다. 그리 정리하고 2000년 4학년으로 복학하여 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설계(2면으로)

<단상> 신랑없는 결혼식

결혼을 며칠 앞둔 신랑이 구속되었다. 신부는 석방이 안되더라도 예정된 결혼식을 치루겠다고 검찰을 버리고 있다. 이런 예비신부의 장문의 편지가 온라인을 통해 여러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다. 과연 신랑없는 쓸쓸하고 초라한 결혼식을 우리는 지켜보아야 할 것인가? 작년 한총련 대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생의 임종을 지킬 수 없었던 홍익대 학생, 아버님의 임종을 끝내 지키지 못했던 영남대 학생의 일이 있어와서 뭐 그리 놀랄일은 아닐 수 있다. 국가보안법이 어디 인륜까지 배려한 적이 있었나.

이 예비신랑은 이번까지 3차례 수감생활을 경험하고 있다. 그 첫 번째는 1996년 경인총련 활동으로 구속되어 1년 6개월 실형을 받고 만기출소했다. 그 이후인 1998년 수배친구를 연행하려는 것을 막다가 공무집행방해로 구속되었다. 그리고 이제 또다시 3년전 활동을 이유로 구속되었고 특별한 변경사항이 없을 경우 1년 이상의 실형을 살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것이다. 구속될 때마다 접하는 친인척, 대학친구들을 만나는 것 자체도 이제 우리가 오히려 미안해서 얼굴을 차마 들수 없는 지경이다.

이번 사건은 음습한 공안당국의 속셈까지 보여주고 있다. 동지 몇 명을 불면 풀어줄 수 있다는 치졸한 거래까지 꺼리낌없이 요구하고 있다. 더 이상 국가보안법의 반인권적 악법을 설명하기조차 지겨워 진다. 오히려 국가보안법과 자기조직의 운명을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이 공안당국은 현 분위기를 속에서 자기의 존재의 이유를 알리기 위해 안달하는 모습이 가관이다. 건수를 올려야 하는 것이 이들의 본색인 것을. 아! 아찔하다. 신랑없는 결혼식이 정보수집차 참석한 공안경찰이 하객으로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으며 진행될 것을 생각하면... 국가보안법을 언제까지 이대로 둘 것인가?

공무원 노조, 경기지역 공동대책위 구성

오늘 5일 저녁6시, 경기민중연대와 경기시민운동연대, 한국노총 등의 경기지역 100여개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가칭"공직사회 개혁과 공무원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경기지역 공동대책위원회" (이하, 경기공대위라고 함)결성 기자회견이 전교조 경기지회 사무실에서 열린다.

경기공대위는 현정부에게 '98년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3년간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이하 전공련)의 활동을 불법활동으로 매도하고 전공련 지도부에 대한 소환장 및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있는' 강도 높은 비난을 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직사회 개혁과 공무원 기본권을 지키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며, 전공련과 경기련 및 산하 단위직협 탄압에 대하여 적극 대응해 나갈 것, 경기련의 활동을 적극지지. 지원해 나갈 것이다."라며, "지난 50년간 정권유지와 홍보의 도구로 전락해온 공무원들이 스스로 떨쳐 일어나 오랜 구시대적 관행과 구태를 청산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자정노력으로 공직사회 개혁을 천명하고 그간 유보한 그들의 당연한 기본적 권리를 되찾기 위해 노동기본권을 요구함은 공무원의 공공성에 기인한 사회적 책임에 충실하기 위함"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단상]**

에 있어서 실정법이라는 이유만으로 장했다. 적용을 한다면,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 결과적으로, 6일 있을 구속적부심사하여 김종필 자민련총재 등 사회각계 청구를 법원이 기각 할 경우 법원은 의 고위급 지도층 인사들 또한 형평성 도덕적인 타격을 면치 못할 것으로 전에 맞게 처벌을 해야 마땅하다.'고 주장 망된다. **[단상]**

'국가인권위 바로세우자! 인권단체연대회'와 '국가인권위원회설립준비기획단' 간담회

- 일 시 : 2001년 9월 7일(금) 오전 11시
- 장 소 : 기획단 사무실(이마빌딩 908호)
- 참석자 : 상임공동대표, 집행위원, 정책위원 등

'국가인권위 바로세우자! 인권단체연대회의' 내부워크샵

- 일 시 : 2001년 9월 7일(금). 오후 5시~8일(토). 오전 11시
- 참석자 : 인권단체연대회의 각 참가단체 활동가
- 장 소 : 복지사랑 피정의집
- 진행사항 :
 - 진행활동 보고 및 상황공유 / 국가인권기구의 이해 / 국가인권위원회법 / 각 단체 인권현안 보고 및 국가인권위원회 활용방안 / 모의조정위원회 / 뒷풀이

다산 인권

제36호
2001. 9. 12.(수)
매주 수요일 발행

●발행처 : 다산인권센터 ●발행인 : 송원찬 ●편집인 : 박진

442-380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1의6 법전빌딩 313호 ☎ 031-213-2105 Fax 031-215-4395 http://rights.or.kr e-mail: humandasan@hanmail.net

철도노조, 본격 민영화저지 투쟁 박차

11일, 수원 장안공원에서 '2001년 철로역정' 순회공연 진행

지난 11일 수원소재 장안공원에서 500여명의 철도노조원, 일반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집회와 문화공연을 가졌다. 이날 행사 1부에서는 경기지역 민중단체과의 연대투쟁 결의를 모아내는 자리와 2부에서는 노동문화예술단 '일터'가 준비한 '2001년 철로역정'의 공연이 1시간 30분동안 진행되었다. 이 공연은 54년만에 민주노조 출범의 과정과 철도노조원들 현장, 투쟁의 이야기들이 생생하게 보여주어 참석자들의 공감과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들은 앞으로 울산, 대구 등 각 지역을 60여일 동안 순회하면서 집회와 공연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행사는 정부의 철도민영화 방침에 맞서 현 정부가 신자유주의 기초하에 실시하는 공공부문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올 9월 정기국회에서 철도민영화를 위한 법안상정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으로 기획된 것이다.

이날 철도노조 김재길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경기지역 민중단체 대표자들의 간담회에서 철도민영화저지투쟁에 대한 지원 및 연대투쟁에 대한 원칙적 동의를 얻어내고 향후 구체적인 실천투쟁을 조직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참석한 철도노조 관계자는 '철도민영화는 사실상 해외자본이나 재벌에게 철도를 팔아넘기려는 처사다. 이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10월 경에 민영화가 입법추진될 예정인데 만약 법이 통과되면 철도노조 3만조합

원은 곧바로 파업투쟁을 전개할 것이다'라며 강력투쟁을 예고했다.

한편, 철도노조 서울지역 운수지부장단은 8월 29일부터 청량리역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을 하고 있고, 철도해고노동자 50여명은 대전정부종합청사 앞에서는 지난달 20일부터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연일 집회를 열고 있다. **다산**

청소년모의법정

대본공모 시상열려

대상작 - 극적 반전과 선명한 주제 의식 돋보인 '굴레를 벗어나'

2001청소년모의법정 공모사업 '친구야, 사자의 성난 눈으로 세상을 보라!'의 대상은 '굴레를 벗어나'를 쓴 수성고등학교 이학영(2년)이 당선되었다.

이번 공모사업은 다산인권센터가 주관하고 수원시가 주최한 것으로 수원 시내 거주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모집이 이뤄졌다. 또한 청소년들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모의법정대본으로 꾸며봄으로써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직접 발견하고 분석하는 기회를 갖고, 이를 통해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길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이뤄졌다.

담당자는 '옹모작 대부분이 자신들의 문제를 모의법정이라는 다소 어려운 형식을 빌어 소화해내는 솜씨가 뛰

어나고, 학교폭력문제에서부터 청소년 간의 동성애문제까지 아우른 주제선택의 폭이 넓었다. 아쉬운 것은 사업 첫해인 만큼 응모편수가 적었다'고 말했다. 옹모작은 청소년성매매등의 사회문제에서부터 시험시 컨닝을 보여준 당사자의 처벌문제(미당선작)등 청소년생활문제까지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산인권센터는 이번 사업을 매년마다 치를 예정이며, 오는 14일 시상식에 이어 당선된 작품중 대상작과 우수작 두편은 오는 11월 3일 학생의날 '2001 청소년한마당 -g.o festival-'에서 공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산**

수상작

- ▶대상 : 이학영(수성고2년)
- ▶우수상: 김수철외9(속지고2) 김지혜외1(영복여고3)
- ▶장려상: 이효정(동우여고3) 최미경(영일중1)

시상식 및 이후 일정

- 시상식 -2001년 9월 14일(금) <오후 2시> 다산인권센터 회의실

- 공연 -2001년 11월 3일(토)~4일(일) 수원청소년문화센터

신랑없는 눈물의 결혼식,

김건수석방대책위원회, 수원지검 앞에서 매일 1인 단식 시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지난 9월 2일 구속된 전 경인총련의장 김건수(경희대 졸업생)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사청구는 물론 구속집행정지 신청도 기각되었다.

지난 9일(일) 예정되었던 결혼식은 신랑이 없는 채로 경희대 중앙도서관 앞에서 진행되었으며, 신랑의 성혼서약을 받기 위해 신부와 양가 부모님, 하객들은 김건수씨가 구속되어 있는 수원구치소로 향해 특별면회신청을 하였다.

하지만 수원구치소측의 거부로 인해 신부 홍은주씨는 신랑을 면회 할 수 없게 되었으며, 신부와 하객들은 신랑의 성혼서약없는 결혼식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아직 결혼식은 진행 중이라며 수원구치소앞에서 철야농성을 하였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철야 농성을 한 신부 홍은주씨는 이튿날인 10일 오전이 되어서야 신랑을 면회 할 수 있었다.

김건수 석방대책위원회에서는 수원지검 앞에서 매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1일 단식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한편, 지난 6일 김건수 석방을 위하여 검찰청 앞에서 쇠사슬을 묶고 시위를 하였던 11명의 학생들 중 8명은 7일 저녁 풀려났으며 건조물침입혐의로 이 중 3명은 구속장장이 청구되어 1명은 기각되고 나머지 2명은 영장이 발부되어 현재 수원구치소로 송치되어 있는 상태이다. **다산**

인권침해신고전화로 연락주세요
031-213-2105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를 다녀와서

안양전진상복지관/ 이주 · 여성인권연대 이금연

'평등과 정의 그리고 존엄을 위한 연대'를 다지는 자리, WCAR(World Conference Against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Intolerance)에 한국의 활동가 여섯명이 다녀왔다. 흑인이 백인보다 열등함을 못박아 놓고 차별정책을 펴왔던 남아공, 그것을 종식시킨 흑인들의 오랜 투쟁의 열기가 아직 살아있는 곳에서 인류사 안에 누적되어온 많은 억압의 소리들을 직접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팔레스타인의 해방을 외치는 소리, 인도의 불가촉 천민들이 인간으로 인정받자하는 몸부림, 떠도는 자들인 짚시들의 추방당함에 대한 항의, 세계화로 인하여 정체성의 위기와 더불어 전통을 잃어가고 있는 원주민들과 소수민족들의 호소, 식민제국주의자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간 흑인후예들의 도전, 이주노동자들과 난민들의 외침이 NGO회의장 가득하였다. 뿐만 아니라 인종청소, 에이즈, 빈곤과 사회적 소외, 노동, 성적지향, 인신매매, 환경, 재분배, 종교적인 불관용, 장애인, 청소년 그리고 여성과 관련된 NGO워킹샵이 수백가지의 제목으로 열렸다. 청년포럼(Youth Forum)이 8월 27일에서 28일까지, NGO 포럼이 28일부터 9월 1일까지 그리고 정부간 회의가 8월31일부터 9월 7일까지 열렸다.

NGO와 유스포럼에서 채택한 각각의 선언과 행동강령은 이번WCAR의 의장인 유엔 인권 고등 판무관인 메리로빈슨에게 어렵게 전달이 되었고, 정부간 회의에 NGO대표들이 각국의 대표단들에게 주제별로 채택된 선언들의 내용을 직접 전달하는 시간도 마련되었다. 정부기구(GO)에 비정부(NGO)기구들이 전달하는 내용을 경청하면서 앞서 언급한 핫이슈가 되는 내용이 거론될 때마다 NGO 참가자들은 환호성을 통한 지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미국대표단은 일찍 회의의 철수를 하는 무례한(?) 행동을 보이기도 하여 비난을 샀으며, 과거 식민지시대의 역사 청산과 배상등에 관한 민감한 사안들로 신경을 곤두세워 온 유럽연합의 국가들은 '인종'이란 분류의 경계가 어렵다는 주장을 하여 오랜세월 인종차별을 당하여 온 참가자들이 분통을 터뜨렸다.

회의 제목에서도 나타났듯이 인종차별이나 인종주의에 관련된 문제 뿐만 아니라 불관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간의 억압에 관한 모든 문제들이 난무한 이번 회의에서 채택된 선언과 행동 강령이 지구적으로, 지역적으로 어떻게 실천 될 것인가 하는 숙제를 남기고 있다. 남아공의 흑인 분리정책이 종식되었듯이 이 유엔회의가 의미가 없다, 실패했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더반은 억눌린 자들의 외침들이 만나 합창을 이룬 자리였다.

인권영화제 자원활동가를 모집합니다.

활동기간 : 2001년 9월부터
활동분야 : 온라인 오프라인 홍보 및 영화제 스텝, 기타 등등

다산인권

제37호
2001. 9. 19.(수)

매주 수요일 발행

●발행처 : 다산인권센터 ●발행인 : 송원찬 ●편집인 : 박진

442-380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1의6 법전빌딩 313호 ☎ 031-213-2105 Fax 031-215-4395 http://rights.or.kr e-mail: humandasan@hanmail.net

안산시 청소용역업체 합의서 불이행....

안산시, 합의서 이행촉구 환경미화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

오늘 19일(수) 안산시장의 명예훼손을 했다는 혐의로 체포된 경기도 노동조합 안산분회 소속 환경미화원 강모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이번 사건은 안산시 청소용역업체에게 합의서 이행을 요구하는 집회 과정에서 강씨가 안산시장에게 'XX자식'이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혐의를 받아 지난 17일 안산경찰서 출두했다가 긴급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던 것이다.

이 사건의 발단은 지난 3월 27일 안산시내 8개 청소용역업체 환경미화원 110명이 경기도 노조에 조합원 가입신청을 내면서 단체협상체결을 요구하는 경기도노조와 이에 응하지 않는 회사간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난 4월 10일, 회사측은 업무를 마친 노조원들의 휴식장소인 휴게실문을 잠그고, 이에 항의하는 노조원들 10여명을 징계조치하였고, 6월 19일에는 150여명의 용역깡패를 이용하여 폭력을 휘두르는 사태를 야기시켰다.

이후 조합원들은 안산시청 앞에서 '노조인정, 단협체결'을 요구하면서 천막농성을 했고, 수원지검앞에서 1인시위를 계속했다.

결국 8월 28일 안산시도시국장과 7개

업체사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7개업체와 조합원 대표들이 '근로자원적복귀, 용역경비철수, 해고철회'에 합의하여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경안, 서진, 한일등 3개 업체가 합의서 이행을 하지 않았고, 문제는 다시 불거진 것이다.

현재 조합원들은 안산시와 수원지검을 번갈아가며 집회를 하면서 합의서 이행촉구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수개월동안 문제해결은 커녕 청소업체를 비호하고 오히려

노조탄압을 거들고, 집회도중 욕 한마디했다는 이유를 들어 검찰에 고발까지 하여 구속영장까지 청구되도록 사태를 만든 안산시청은 비난의 화살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경기도노조 김인수 법률국장은 '청소용역업체들은 합의서를 성실히 이행하고, 행자부지침대로 임금을 지급함은 물론 열악한 근무조건외의 환경미화원들이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인원을 보충하여야 한다'라며 청소용역업체의 무책임함을 지적했다. **다산**



제가 있는 작은인권영화제 일곱 번째 이야기

<팬지와 담쟁이>

장애인 자매의 일상의 이야기,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본 이웃의 이야기로 인권영화제는 일곱 번째 이야기 타래를 풀어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 일정 : 2001년 9월 25일(화) 늦은 7시
- 장소 : 다산인권센터 소극장
- 상영시간 : 60분
- 상영료 : 영화와 인권을 소중히 하는 마음을 받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 전·의경관리 문제있다

신세대 사병인 전, 의경들이 부대적응을 제대로 못해 탈영은 물론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7일 2001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경기지방경찰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체 부적응자 1145명중 876명이 부적응 및 이성문제, 가정문제등 기타사유로 탈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33명의 전, 의경이 우울증 등 정신적인 이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37명이 이성적인 판단과 자기 통제력을 잃고 자살과 자살기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최근 3년간의 전체 부적응자중 19%인 221명이 경기지방경찰청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98년도부터 올 상반기까지 경기지방경찰청의 전, 의경 구타 및 가혹행위 발생건수는 모두 293건으로 14개 경찰청 총 발생건수(2천 31건)의 14.4%를 차지한다. 연도도별로 분석해보면 98년 53건에서 99년 67건으로 26.4%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전년도보다 40.2%가 증가한 94건이 발생,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만도 79건이 발생했다. 박진 다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이수치는 경찰청의 공식적 집계이기 때문에 그 외의 수를 포함하면 상당할 것이고 심각한 수준이다. 10월경 경찰인권침해신고센터를 두고 항시적이고 적극적으로 신고상담, 감시활동, 대응을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다산**

'인권의 눈'

새로운 필진을 소개합니다.

- ▶윤재훈(수원외국인노동자쉼터상담실장)
- ▶차미경(국제민주연대 정책위원)
- ▶허선(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 ▶박태현(인권센터 운영위원,변호사)



모든 전쟁은 폭력이며 범죄이다

윤재훈 (수원외국인노동자쉼터 상담실장)

요즘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미국에 대한 '야만적인' 비행기 테러와 이에 대응하는 미국의 '더러운' 전쟁 선포에 쏠려있다. 미국의 대통령 부시는 연일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한 "복수"를 외치며 다른 나라들도 이에 동참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적어도 현재 상황에서 비폭력은 낭만에 불과하다.' 미국 민주당원들도 MD 계획예산 삭감노력을 포기하고 내년 국방예산안을 되도록 빨리 통과시키기로 했듯이 <균형과 균형>도 무너졌다. 단지 둘중에 한명은 반드시 죽어야 하는 룰렛게임만이 존재한다. 야만은 악이며, 이에 대한 전쟁은 더러워도 선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간단치 않은 것 같다.

미국은 이번의 야만적인 테러에 "정부의 통제하에 훈련된 군대가 저지르는 폭력에 의한 <더러운 전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천명하고 있다. <정당한 전쟁>이라는 것이다. 정상이 참작된다고 해도 다소 무리하게 여겨지는 이번 미국의 행보는 지난날 베트남 전쟁에서도 경험한 것처럼 매우 우려스럽다. 민주주의를 위해 기여한다는 믿음으로 폭탄을 떨어뜨리는 정의의 조종사들에게, 그 폭탄에 맞은 어린 소녀의 떨어져 나간 다리는 보이지 않는다. 수많은 전쟁에서 미국은 '그들 스스로 권리를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파시즘에 맞선 정당한 전쟁이었다고 의심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양차 세계대전 등도 결국 국가의 세력과 이익확장, 그리고 정치권력자들의 더욱 강력한 권력을 위한 것이었다.

세계평화수호라는 전쟁동기도 비판받고 있다. 미국의 국무차관보로 일했던 아치벌드 메클리시는 "우리가 만들고 있는 평화는 석유의 평화, 그의 평화, 해운업의 평화"라고 얘기했듯이 말이다. 따라서 전쟁은 어떤 경우에도 정의일 수 없으며, 더욱이 인권을 신장시킬 수 있는 정당한 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 전쟁은 테러까지 포함한 어떤 폭력보다 대규모적이며 광범위한 폭력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은 미국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필요한 모든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고 한다.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지도자가 했다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비상식적이고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도 달지 않았던 조기계양과 10시 사이렌 울림을 지시, 시행했다. '우리는 식민지'라는 자괴감 어린 농담이 회자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은 테러는 용서받지 못할 범죄이지만, 전쟁으로 대응해서는 안된다. 벌써 미국의 다국적 무기제조사들은 조만간 다가올 호황에 감으로 한창 들떠 있다고 한다. 김대중 대통령은 테러를 포함한 모든 폭력에 반대하는 모든 국내, 국제적인 연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되,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적어도 <전쟁반대>와 <전투병 파병반대> 방침을 분명히 하는 가운데, 가능한 협조와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다산 인권

제38호
2001. 9. 26.(수)
매주 수요일 발행

442-380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1의6 법전빌딩 313호 ☎ 031-213-2105 Fax 031-215-4395 http://rights.or.kr e-mail: humandas@hanmail.net

인권위원, 불투명한 인선과 국제기준 미흡

24일, 국회의 여야 인권위원 4명 추천발표

오는 11월 출범할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위원 선정에 있어서 인권위원의 애매한 기준과 절차, 시민사회의 다양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24일 국회가 추천한 인사를 보면 민주당은 상임위원에 유시춘 전 민주당위원과 박노현 방송통신대 교수를, 한나라당은 상임위원에 유현 판사와 비상임위원에 김덕현 변호사를 각각 추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 바로세우자! 인권단체연대회의'는 논평을 통해 인권위원 선정방식에 있어서 인권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의 충분한 공론화나 수렴절차는 무시된 채 인선기준조차도 애매하게 이루어졌다고 비판했다.

또한 현 추천된 5명중 3명(김창국 기획단장 포함)이 법조인 출신으로 사회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가져야 한다는 국제기준을 제대로 반영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평했다. 따라서 여야의 추천된 인사들이 뚜렷하게 인권활동에 헌신한 전력이 가진 인사로 추천되었다고 보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다.

그리고 인권시민단체들은 가뜩이나 실효성 없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제된 인권위원 인선 등 여기저기가 함량미달의 인권위원으로 구성될 경우 파행적인 설립과 운영을 우려했다. 따라서 남은 대통령과 대법원장 몫의 인권위원은 인권신장에 헌신하고 지속적으로 인권활동을 전개한 검증된 인사가 추천이 요구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번 여야 정식추천 절차는 10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나머지 인권위원은 대통령 3명과 대법원 3명이 추석을 전후에서 추천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11월 25일 출범할 예정이다. **다산**

안성축산민영화(사기업화)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소동... 민영화반대투쟁 3인 체포영장발부

지난 9월 8일 안성축산공사에 대한 "민간위탁저지"투쟁을 위한 집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로 안성경찰서에 자진출두했다 체포된 사건이 발생했다. 체포된 김은천(민주노총평택지구협사무차

장), 정용기(안성축산위원장), 김동수(평택노동자의힘대표)등은 구금되었다가 26일 조사를 받고 불구속으로 풀려났다.

안성축산 민영화 문제는 올 3월 대통령이 감사원에 민영화를 지시하면서 정부와 안성시의 민영화추진으로 시작되었다. 정부는 5월24일 행자부에서 개최한 지방공기업관계관 회의시 지방공기업 구조조정을 예산과 연계하여 재정적 패널티를 적용할것임을 시달하였다. 이에따라, 9월5일 안성시의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안성축산 민영화를 의결하였고, 급기야 9월8일 본회의에서 시의원들은 민영화를 반대하는 안성시민과 노동조합의 요구를 무시하고 안성축산민영화를 의결하였다. 그동안 안성축산노동조합(위원장 정용기)은 안성축산이 민영화할 경우 도축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영세한 축산농가의 피해와 공기업으로서의 공공성이 파괴, 그리고 인원감축의 고용불안을 지적하였다. 노조 관계자는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방침에 따라 무수히 발생할 공기업 사업장에 대한 민영화에 대한 올바른 절차와 모델들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비판했다. **다산**

논평

대용 감방?

NO war! YES peace!

제6회 수원인권영화제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아주 대 다산관 강당에서 열려

여섯번째 수원인권영화제의 배가 출항했다. 인간을 위한 영상발굴, 표현의 자유 확대라는 기치를 내 걸고, 지난 5년간 영화제를 이끌어왔던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아주대학교 총학생회와 공동으로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동안 아주대학교 다산관에서 제6회 수원인권영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영화제는 미국테러사건을 통해서 전세계적으로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전쟁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파괴행위에 반대'한다는 것을 큰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작년에 이어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의 목소리를 싣고, 여성, 장애인, 노인, 동성애자들 소수자의 아픔을 담은 영상을 발굴할 예정이며, 표현의 자유를 위한 인권영화제 원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영상과 부대 행사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화제 추진위원회에는 수원민예총을 비롯 10여개의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영화제의 목표에 동의하는 단체 및 개인의 참여와 후원을 확대할 계획이며 현재는 영화제 상영작을 선정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다산**

'인권의 눈'

새로운 필진을 소개합니다.

- ▶윤재훈(수원의국인노동자쉼터상담실장)
- ▶차미경(국제민주연대 정책위원)
- ▶허선(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 ▶박태현(인권센터 운영위원, 변호사)

인권계시판

민주노동당 경기도지부 창당대회(대의원대회)

- 일시 : 2001년 10월 6일 오후 4시
- 장소 : 수원시 체육회관 (수원 종합운동장 옆)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 노동·인권·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 일시 : 2001년 9월27일(목), 오후 1시
- 장소 : 남대문 삼성본관 앞(시청에서 남대문 방향으로 위치함)

쌀 생산비 보장을 위한 2001년 경기민중연대(준) 추수 농촌활동

- 일시 : 2001년 10월 6일(토) ~ 7일(일)
- 장소 : 평택시 일원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다산인권은 다음주에 찾아가겠습니다

다산인권

제39호
2001. 10. 10.(수)

매주 수요일 발행

●발행처: 다산인권센터 ●발행인: 송원찬 ●편집인: 박진

442-380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1의6 법전빌딩 313호 ☎ 031-213-2105 Fax 031-215-4395 http://rights.or.kr e-mail: humandasan@hanmail.net

인권은 없고 위원만 있는 국가인권위?

9일 인권단체 밀실인선 규탄속에 대통령 인권위원 11명 임명

지난 9일 오후 2시 인권단체연대회의 소속 인권활동가 30여명은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무원칙한 밀실인선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인권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이후 한결같이 주장해 온 것은 인권위원들을 공명정대하고 민주적인 선정과정을 통해 임명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인권위원회는 우리 사회 각 부분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성과 다원성에 입각해 선정되어야만 인권위원회의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참석한 인권활동가들은 '국민의 인권침해방지를 위한 인권위원회를 만든다면 여느 국가기관을 조직하는 것처럼 임명되는 사람의 이름만 발표하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원칙마저 훼손하며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가 과연 인권을 보장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위원만 있는 국가인권위가 우려된다'며 강력히 비난했다. 또한 인권단체들은 '이후에도 인권위원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자체적인 검증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시행령 문제에도 적극 개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와대에서 김창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인권위원 11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하지만 11월 25일 예정된 출범을 앞두고 2달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인권위원이 이제야 임명됨으로 인해 물리적으로 각종 법제와 직제 마련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 설립에 난항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다산]

경찰개혁 미룰수 없다.

경찰폭력근절과 개혁등...인권단체개혁촉구나서

이달 10일 인권실천시민연대, 다산인권센터 등 5개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경찰폭력근절, 경찰중립화, 경찰수사독자성 확보 등 -2면에서 이어짐-

인권위원 명단 (위원장 포함 11명)

인권위원장 1명

▲김창국(남, 61) 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준비기획단장, 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상임위원 3명

▲박경서(남, 62) 현 인권대사, 전 성공회대 객원교수
▲유시춘(여, 51) 현 통일문화학회 창립준비위원회 고문, 전 새천년민주당 당무위원
▲유현(남, 56) 전 수원지법 양평군 이천시법원 판사,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비상임위원 7명

▲곽노현(남, 47) 현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김덕현(여, 43) 현 법무법인 호민 변호사, 현 여성변호사회 회장, 전 서울민사지법 판사
▲김오섭(남, 59) 현 변호사,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신동운(남, 49) 현 서울대 법학부 학부장, 현 서울대 법대 교수
▲이진강(남, 58) 현 변호사, 전 서울지방법변호사회 회장
▲정강자(여, 48) 현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조미경(여, 62) 현 아주대 법학부 교수, 현 한국가족법학회 회장

한편, 김대중 대통령은 9일 오후 청

-1면에서 이어짐- 김대중 정부가 내건 경찰개혁관련 공약이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는것에 대해 인권단체가 그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애초 내걸었던 경찰개혁방안은 △경찰중립화, 자치경찰제 △민생치안 중심으로 경찰행정전환 △의무·전투경찰의 정규경찰제 대체 △경찰서 증설과 파출소 근무인원 증원등이다. 그러나 현 실정은 경찰의 중립화방안을 보면 검찰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되어 현재는 논의조차 되지않고 있다. 경찰인력증원을 통한 민생치안확보 또한 전·의경이 전체인력의 3분의1이상을 차지하는 과거인력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파출소당 평균인원이 13.3명에 불과해 3교대근무기준으로 파출소장을 제외한 실제근무인원은 파출소당 4.1명에 불과하여 치안수요에 부응하기엔 역부족인 실정이다.

이에따라 인권단체들은 이달 8일부터 28일까지 경찰개혁을위한 집중적 캠페인을 벌이기로하고 △경찰폭력등 피해자신고센터운동 △대통령의 경찰관련 공약이행을 위한 1천인서명운동 △경찰개혁을 위한 토론회 △경찰폭력 근절을 위한 일선경찰서, 파출소항의방문등 다양한 행사를 벌일 예정이다. 특히 이 기간동안 경찰폭력 피해사례를 집중적으로 신고받아 공익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피해사례집도 함께 발간할 계획이다. [다산]

경기지역 개인, 시민단체 언론개혁과 조선일보반대운동 본격 시동

지난 8일 민예총경기지회에서 수구반동세력비호, 대변하는 조선일보반대 경기도연대기구건설을 위한 개인,시민

단체 실무자회의가 열렸다. 이날 참석자들은 조선일보의 편파·왜곡보도로 인한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는 것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경기지역에서 여러 양심있는 단체와 개인이 모여 조선일보구독중지등 실질적인 조선일보 반대투쟁을 위한 연대운동을 벌여나기로 했다.

한편 언론개혁차원에서 "가칭 경기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준)" 10월경으로 발기인 창립총회를 가질 계획이다.

민주노총 비정규노동자 주간 선포 수원지법 앞 1인 릴레이시위, 수요집회등

민주노총은 지난 10월 8일부터 13일까지를 비정규노동자 노동기본권쟁취 주간으로 선포하고 전국적인 집회 및 대국민 캠페인을 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비정규 노동자 기본권쟁취 투쟁 선포에서 '지난 상반기동안 대송택, 한통계약직, 레미콘노동자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을 비롯한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이 가속화되었으나, 비정규 노동자들의 문제는 국정감사에서도 제외되고, 노사정위원회에서도 노동시간단축에만 집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비정규 노동자들의 현실은 더욱 더 열악하여져만 가고있다'고 하였다. 이에, 민주노총 경기본부는 반노동자적인 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한민국법원을 규탄하는 의미로 10월 8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경기본부 김영수 본부장을 시작으로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일주일간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한편, 여주군 소재의 대영cc에서는 회사측이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경기보조원 55명을 해고하였고, 성남 대한송유관공사의 하청인 대송택에서는 노동조합에서 대송택을 불법파견업체로 고발하였더니 근로자 81명을 해고하는 심각한 상황이 초래되

경기민언련(준)은 △계도지 폐지운동 △기자실폐지운동 △정간법개정운동△시민,학생언론교육 △출판홍보사업등 다양한 방향에 언론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그동안 여타의 지역에 비해 언론개혁활동이 미미한 실정에서 경기지역차원에서도 본격적으로 언론개혁과 조선일보반대운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다산]

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민주노총은 노동부와 노사정위원회 앞에서 매주 수요일 비정규노동자기본권쟁취집회를 할 예정이다. [다산]

제6회수원인권영화제

일정과 장소 옮겨...

제6회 수원인권영화제 추진위원회는 오는 10월 27일부터 아주대학교 강당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수원인권영화제의 일정이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경기문화재단 강당으로 일정과 장소가 변경되었다고 발표했다.

추진위원회는 보다 많은 시민들과 함께 하는 영화제를 위해 장소와 시기를 검토한 결과 변경하게 되었으며, 현재 사무국에서는 영화선정작업이 한창이라고 말했다.

개막작으로는 '아시안 블루'가 섭외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상영 확정된 영화는 '옥천전투', '1991년 1학년'등의 작품이라고 밝혔다.

다산 인권

제40호

2001. 10. 17.(수)

매주 수요일 발행

●발행처 : 다산인권센터 ●발행인 : 송원찬 ●편집인 : 박진

442-380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1의6 법전빌딩 313호 ☎ 031-213-2105 Fax 031-215-4395 http://rights.or.kr e-mail: humandasan@hanmail.net

민주노총 경기본부 17일부터 무기한천막철야농성 돌입

83개 인권, 시민, 사회단체 단병호위원장석방대책위 발족

지난 10월 16일 오전 명동성당 들머리에서는 83개 인권, 시민, 사회단체들이 모여 '단병호 위원장 석방을 위한 공동 대책위원회'를 발족하였다. 이들은 대책위 발족에 앞서 '단병호 위원장 석방 촉구와 김대중정권 부도덕성 규탄' 기자회견을 하였다.

석방공동대책위는 기자회견문에서 '지난 4월 대우자동차의 최대 정리해고와 노조원에 대한 경찰의 살인폭력 진압에 대해 국민 대다수는 분노하였다. 부패 재벌들은 감싸안고 노동자들에게만 고통을 떠넘기는 정부정책에 노동자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였고, 정부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에 대하여 정부는 탄압을 일삼고 민주노총 지도부에게는 일제 검거령을 내렸다'며 반노동자적 정부를 규탄하였다.

이어서,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이 깊어지자,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김승훈 신부가 정부와 민주노총간의 중재를 하였으며 양자의 약속에 따라 단병호 위원장은 검찰에 자진출두 하였지만 약속은 헌신짝처럼 내던져지고 단병호 위원장은 여전히 갇혀있다'며 단병호 위원장 재수감 경위를 설명하였다.

또한, '이 문제는 단순한 노동사안이 아니며, 천주교회와의 약속을 깬 김대

중 정부의 도덕성 문제이자, 노벨평화상을 탄 김대중 대통령재임기간 중 노동계 대표가 세 번씩이나 수감된 양심수의 문제이고, 더 나아가 노동자들의 인권의 문제다'며 김대중 정부 부도덕성을 규탄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부당국은 그 동안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노정간의 신뢰구축을 희망해온 국민들과의 약속을 뒤집은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지금 즉시 단병호위원장을 석방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수밖에 없음을 직시해야한

다'며 석방공동대책위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아울러 석방공동대책위는 민변을 중심으로 한 공동변호인단을 구성, 탄원활동, 국제연대활동을 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17일부터 모든 지역본부가 주요 또는 민주당 상 앞에서 무기한 철야농성에 돌입하였고, 명동성당에서 진행되고 있는 철야농성을 확대, 강화하기로 결정하였다. 민주노총 경기본부도 17일 오후부터 수원 남문 중앙극장 앞에서 상근자 전원이 무기한 천막 철야농성에 돌입하였다. 민주노총<2면에서 이어짐>

주제가 있는 작은 인권영화제 여덟 번째 이야기

독립단편영화 2편이 작은인권영화제에 상영됩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인디스트들의 선언, 꼭 들어보세요.

▶구타 유발자... 잠들다(Four million blows) 유정현 / 16mm / 15분
공만 제대로 막았더라도...노랑머리에게 죽도록 맞은 정현, 학교 책상 위에서 잠이 든다.

▶남정순, 엄마누라질마(Don't cry Mommy) 신현경 / 16mm / 22분
우리 엄마 남정순, 남루한 일상을 들여다 본다.

● 2001년 10월 23일(화) 오후7시부터

● 다산인권센터 소극장

인권단체, '대통령의 경찰관련 공약이행을 촉구하는 1천인선언운동전개

1천인선언운동전개

인권실천시민연대를 비롯한 인권단체들은 김대중정권의 경찰관련 공약이행을 촉구하는 1천인선언기자회견을 오는 19일(금) 참여연대 느티나무에서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김대중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걸었던 경찰제도 개선 3대 목표가 김대통령 임기 1년 남짓 남겨진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하며, 경찰개혁을 위한 인권 캠페인을 전개할 것임을 선언하기도 했다.

이선언은 경찰이 과거 권위주의시대의 잔재를 청산하고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경찰로 거듭 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대통령의 경찰개혁관련 선거공약이행 △정보,공안정권안보만을 위한 부서폐지,축소와 민생치안강화 △검찰의 기소독점권 폐지와 수사권 분리독립 △지방자치경찰제시행 △불구속 수사원칙의 평등 적용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보장 등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성토했고 있다.

이들은 경찰폭력 피해사례를 계속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산]



제6회수원인권영화제

수원인권영화제추진위원회는 1차로 작품선정을 마쳤다. 현재 추가로 상영 확정된 작품은 양심수를 위한 시와노래의 밤에서 상영되었던 '내컴퓨터'를 비롯, 사북탄광노동자들의 '먼지의 집' 등 다수의 영화이다.

<1면에서 이어짐>경기본부 김영수본부장은 '노동자들과 민중들의 요구를 외면한 채 노동자들의 대표조직인 민주노총위원장을 전과자로 만드는 김대중 정권은 반노동자적 정권이며, 재수감 불가 약속을 저버린 채 단병호 위원장을 재수감 한 것은 김대중 정권이 스스로 부도덕성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라고 하였다. [다산]

범민련 경인연합 '범민련 강령개정 설명회' 가자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경기인천연합(의장 이태형)은 17일 오후 7시 민주노총 경기본부 회의실에서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를 초청해서 강령개정 설명회를 가진다. 범민련의 강령 및 규약 설명회 자료집에 의하면 "6.15선언이 채택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범민련 사업을 개선, 강화하는 것은 민족대통일전선을 구축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핵심과제"이며 "범민련은 조국통일 3대 원칙과 6.15 공동선언에 따라 범민족적인 통일국가 수립을 총적(궁극적인)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주요한 개정내용은 "연방제 통일방안을 삭제하고 '모든 외국군 철수', '동족사이 대결과 반목을 조장하는 정치적, 물리적 장애 제거'조항을 강령에서 삭제한 것"이며 "그대신 '교류와협력', '인도주의' 관련 조항을 강령에 명시한 것이다"고 밝혔다. 그리고 범민련 경인연합은 설명회이후 지역 단체들의 만남과 토론을 진행하고 범민련 참여를 유도하며 공동의 연대연합 사업을 통해 더욱더 통일운동에 헌신, 매진할 것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번 범민련의 강령 및 규약개정은 6. 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과 정

세에 맞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요구에 의해 지난 8. 15 방북때 범민련 북측본부, 남측본부, 해외본부가 협의를 통해 강령과 규약을 새롭게 개정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8. 15 방북 때 이 범민련 강령개정을 위해 협의를 가져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범민련 관계자들이 구속 수감 중에 있다. [다산]

민주노총 최저임금위반사업장 신고접수·고발 예정

민주노총은 시급 2,100원, 일급 16,800원, 월급 474,600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최저임금위반사업장에 대하여 신고접수를 받고 고발할 예정이다. 임시직·일용직·시간제 노동자를 포함한 상시노동자 1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그동안 특히 비정규, 여성, 영세중소사업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근로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들의 횡포와 해고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이들 근로자들은 제대로 사업주들에게 요구한 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는 실정이다.

민주노총은 지역협의회와 지역노조등에서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신고접수를 받고 노동부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사업주들이 시정하지 않을 시 고소, 고발도 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로인해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던 근로자들에 대한 현황과악과 아울러 근로조건 개선이 일면이나마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산]

경찰인권침해신고접수

www.right.or.kr

다산인권

제41호

2001. 10. 24.(수)

매주 수요일 발행

●발행처: 다산인권센터 ●발행인: 송원찬 ●편집인: 박진

442-380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1의6 법전빌딩 313호 ☎ 031-213-2105 Fax 031-215-4395 http://rights.or.kr e-mail: humandasan@hanmail.net

초지일관 흔들리는 교육정책!

전교조 합법화이후 최대규모 집회강행!

전교조는 오는 26일과 27일 서울여의도 문화마당에서 “교육시장화 정책저지, 교육재정확보”를 위한 집단적인 연가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전교조는 이미 지난 10일 “학교간 경쟁으로 입시전쟁터를 만드는 자립형 사립고 정책철회”를 요구하며, 2만5천여명의 교사들이 조퇴투쟁을 벌이기도 했고, 7만 5천여명의 교사가 교원성과급 340억여원을 반납하기도 했다.

이들은 초등교육의 전문성을 무시한 정책이라고 반대하는 ‘중등자격증소지자 초등임용방안’을 교육인적자원부가 고수하는 한편, 교육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5개 학교 자립형 사립고 시범실시를 발표한 것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 관계자는 “실현가능성 없는 7차 교육과정의 강행을 위해, 시행전에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새로운 입시제도를 도입하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의도를 알 수 없다.”고 하며 교육을 극한 파행으로 몰고 가는 정책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전교조는 현재 진행되고있는 성과급 반납투쟁을 더욱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벌여나가기로 하는 한편 학교별 잡

무거부, 단식수업, 공동혼회수업 등을 전개해나가며 국회교육위원, 예결위원 및 각 정당대표 면담을 통해 교육재정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집회는 26일 정규수업을 마치고 철야농성을 한 뒤, 27일 전국교사결의대회와 교육시장화저지와 교육재정확보를 위한 국민행동대회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집**

경찰인권침해신고접수 211-5855

동아타이어(주)인권유린, 산업연수생 파업.단식돌입!

경남 양산 소재 동아타이어공업(주)에 근무하는 중국인 산업연수생 63명이 회사측의 부당한 횡포에 대해 집단적인 파업과 단식에 들어갔다.

이들은 연수기간 동안 숙식을 무료로 제공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는데, 회사측은 이들이 국내에 입국한 첫날, 월 6만원의 식대부담에 관한 재계약을 강요했고,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중국으로 돌아가라는 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롭게 체결된 계약서에 의해 지난 8월까지 식대6만원이 매월 공제되었고, 9월에는 10만원이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되었다고 주장했다. 현재 산업연수생들은 조업을 중단하고 협상과 시정을 요구하며 파업과 단식으로 맞서고 있으며 양산 외국인노동자의집은 회사측을 상대로<계약상위반과 강제적 임금 및 신분증(여권)소유의 문제>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향후 산업연수생들은 사업장항의방문, 집회, 1인시위, 중국영사관통보, 노동사무소항의방문 등을 펼칠 예정이다. **특집**

수원지역 시민단체 전쟁반대 캠페인 나서....

오는 26일 12시부터 팔달문 중앙극장 앞에서 경찰선을 비롯한 수원지역시민사회단체는 “전쟁을 반대하는 평화행진(가칭)”을 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들어 지속되고 있는 미국의 아프카니스탄에 대한 테러보복전쟁을 반대하고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며, 이 <2면에서 이어짐>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앞서...

허 선(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개정과 제정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시대의 변화란 퇴보가 아닌 진보일 것이고, 근로기준법의 개정이나 제정 역시 퇴보가 아닌 진보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 역사의 순리일 것이다. 이러한 개정과 제정은 노동자의 삶과 질의 향상이란 측면에서 문제를 바라보아야만 한다. 그렇다면 그동안 근로기준법의 개정과 제정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 근로기준법으로 부터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노동자일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명시된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란 뚜렷한 문구가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근로기준법의 개정 및 제정을 지켜보면서 마치 근로기준법이란 최고의 기준을 마련한 것처럼... 사용자는 착각 속에서 근로기준법에 족쇄를 채워왔다. 사용자들은 주 5일제 근무와 관련하여 생리휴가 및 주휴 무급화, 연월차 휴가 축소, 초과근로 수당 축소 등 교환적 의미로 주 5일제 근무를 도입하려고 한다. 이러한 교환적 의미의 주 5일 근무는 단호히 거부하여야 한다. 앞에서 이야기 한 교환적 의미의 주 5일 근무제가 아니라 조건 없는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사용자들은 기존의 근로기준법을 최대한 악용할 것이다. 1일(주 5일)이란 근로일수가 줄었다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고, 1주 6일간의 근로시간을 1주 5일 근로시간에 맞추기 위해 당연히 1일의 근로 시간이 늘어나 노동강도는 높아질 것이다. 또한 1일의 근로시간이 늘어난다고 하여 사용자들은 과연 초과 근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것인가. 결론은 아니다. 사용자들이 기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근기법 제50조), 선택적 근로시간제(제 51조), 연장근로의 제한(제 52조)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삼척동자에게 물어보아도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5일제 근무를 도입한다는 이유로 또다시 근로기준법이 퇴보한다면 이는 주 5일 근무라는 당근과 채찍을 사용자에게 안겨주는 꼴이 될 것이다. 차라리 주 5일 근무를 도입하는데 목 메이지 말고 1일 8시간의 노동시간이라도 확실하게 지켜지는 근로기준법이 되었으면 한다.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되기 이전에 기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시간 제한 등의 악법을 폐지하는데 중점을 두자. 그것도 안 된다면 차라리 10년전의 근로기준법으로 되돌아가자. 1970년에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쳤다면, 2001년의 오늘 우리는 조건 없는 주 5일제 근무를 쟁취하자고 외쳐야 할 때이다.

<1면에서 이어짐> 자리에서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미국의 아프카니스탄 탈레반 정권에 대한 보복전쟁이후 전세계 대다수국가와 국민들이 바라는 문제해결은 전쟁이 아닌 외교적 접근에 의한 평화적 방법이라는 것에 동감하는 선언을 할 예정이다.

또한 수원지역시민단체는 11월 2일 12시부터 제2차 전쟁을 반대하는 평화행진을 계획하고 있다. **특집**

구치소내 폭력행위 사망자에 대해 원고승소판결

지난 98년 성동구치소에서 제조자들의 폭력행위로 사망한 망 박모씨 가족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 민사 제8부(재판장채영수판사)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과 70만원의 벌금을 이유로 제조자의 건강이 심각한 상황에서 성동구치소측이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에게 고지를 하지 않아 망인이 가족들의 간호를 받다가 사망할 수 있는 기회마저 놓친 것에 대한 손해를 대한민국은 배상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그 동안 망 박모씨의 가족들은 제조자들의 양심선언으로 인해 성동구치소측의 묵인속에서 제조자들의 구타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성동구치소측의 불법행위를 주장하였지만 재판부는 이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3년여를 끌어온 이 재판에서 일부 원고승소판결이 나왔지만 아직도 구치소내 폭력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는 길은 멀고도 험하기에 제조자들의 인권침해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의 눈길을 가져야 할 것이다. **특집**

NO WAR! YES PEACE! 제6회 수원인권영화제 11월 15일-17일 <경기문화재단 다산홀>

다산 인권

제42호

2001. 10. 31.(수)

매주 수요일 발행

●발행처 : 다산인권센터 ●발행인 : 송원찬 ●편집인 : 박진

442-380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1의6 법전빌딩 313호 ☎ 031-213-2105 Fax 031-215-4395 http://rights.or.kr e-mail: humandasan@hanmail.net

에바다 농아학교 무기한 휴업

교장실 집기와 유리창 파손. 올해만 벌써 2번째

지난 26일 평택 소재 에바다 농아학교는 다시 무기한 휴교에 들어갔다. 26일 오전 7시 30분 주변교사가 학교에 출근하여보니 학교안에는 '이번에는 윤00이나, 에바다는 개나 소나 다 이사장이냐'라는 현수막이 걸려있었고, 교장실 샷시와 유리창은 완전히 깨져있었으며, 컴퓨터를 사무집기는 바깥에서 집어 던진 듯한 쇳덩어리로 크게 손상되고 바닥에는 식당에서 나온 음식물 쓰레기로 범벅이 되어 있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에, 김지원 교장은 교감과 부장교사들과 협의하여 학교가 정상화 될 때까지 무기한 휴교한다는 휴교령을 내렸다.

이러한 사태가 사실 처음은 아니다. 지난 5월 15일 현 김지원 교장이 취임하던 날부터 김지원 교장을 반대하는 학교 외벽의 낙서를 비롯하여 교장실 파손 등이 있었고, 급기야 6월초부터는 교장실 유리창과 집기가 파손되고 경찰에 신고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게 되었다.

이번 일은 새로 최근 이사진의 개편과 관련하여 그동안 에바다 정상화 투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왔던 인사들이 새롭게 이사로 선임되면서 이사

회의 과반수를 차지하게 되는 시점에 발생한 일이다.

사회복지법인 에바다복지회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들은 지난 29일 '이번 일로 인한 학교장의 휴업조치를 적극 지지하며 이번 폭력 사태와 에바다 학교에 산재해 있는 모든 문제가 완전히 정상화 될 때까지 휴업조치를 유지하도록 한다'라는 논의를 하였다.

또한, 위 이사들은 '이번 휴업조치를 하루 빨리 풀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사법당국에 범행 용의자를 조속히 검거하고 그 배후를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평택시청과 경기도 교육감, 평택경찰서장에게 발송하였다.

지난 96년부터 5년여 동안 파행을 거듭하여온 에바다 농아학교의 문제는 단순히 평택 에바다 농아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사회복지시설의 구조적 문제들에 대한 폭로이며 이를 헤쳐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모범적인 사회복지시설을 일구어 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장애인 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들에게도 각인시켰다. 이제, 무기한 휴교에 들어간 에바다 농아학교가 어떠한 모습으

로 거듭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산**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안 상정"

엠네스티 지지성명

지난 30일 국회 여야의원 154명은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안)"을 제출했다.

이번 특별법안에 대해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국회모임은 성명을 통해 "국가에 의한 살인을 합법화하는 사형제도가 있는 한 인권신장 및 의식의 증진은 요원한 것이며, 국회가 특별법을 반드시 채택 해 한국국민의 인권을 신장하고, 인권증진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동참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108개 국가가 사형제도를 폐지하였으며, 유엔은 국제인권협약(B협약) 제2선택의정서를 통해서 세계 모든 국가들에게 사형제도를 폐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다산**

경찰인권침해신고접수
211-5855

시대흐름 역행한, 국방부의 복지부동!

국방부, 징총 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수용 절대불가 밝혀

국방부는 지난 23일 "남북분단의 특수한 환경, 병역거부 움직임의 확산, 특정 집단의 특례시비"등을 이유로 징총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수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 입장에 대해 인권운동사랑방, 평화인권연대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특정집단의 권리가 아닌 인간이면 누구나 갖는 보편적 권리이며, 6.15남북 공동선언 이후의 군사적 긴장관계 완화,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정당한 인권으로 인정할 유엔결의안에 대해 찬성한 정부의 태도"등을 불 때 이번 국방부의 발표는 시대흐름을 역행하는 행위라고 밝히며, 국방부에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이들은 공개질의서에서 △ 해외에서는 거부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논의가 160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특히 중국과 긴장관계에 있는 대만에서도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점 △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과 대체복무제"의 대표적 사례로 거론되는 독일에서의 복지국가건설에 대체복무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 점 △ 대만의 경우 우려했던 병역거부자들의 확산이 발생하지 않은 점 △ 국제무대에서 한 한국정부의 약속과 어긋나는 국방부의 입장 △ 대체복무제도를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면 앞으로 계속 발생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국방부의 정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국방부의 공개적 답변을 요구했다.

현재 전국교도소에 수감된 징총거부자는 1600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다산**

우리가 열어놓은 세상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11월 3,4일 청소년문화센터 g.o Festival 열려

오는 11월 3일과 4일, 양일 간 수원청소년문화센터에서는 2001 수원청소년한마당행사위원회 주최로 '수원청소년한마당(g.o Festival)'이 열릴 예정이다. 전교조수원중등지회와 수원지역청소년네트워크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기존의 보여주기 식 공연위주의 행사를 탈피하여 모든 프로그램에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열린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우리가 열어놓은 세상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라는 부제 아래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그룹사운드 공연, 연극제, 댄스페스티벌, 모의법정, 작은 뮤지컬, 영상제, 만화페스티벌, 국악한마당, 길거리 농구대회, 도전 장원급제 등 다

채로운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

청소년문화센터 곳곳에서 토요일 오후 3시부터 일요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될 이번 행사는 청소년들이 대거 참여한 청소년위원회가 이번 행사의 주축이 되어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청소년들의 큰 잔치마당을 준비하고 있다.

2001 수원청소년한마당행사위원회는 '일제통치하의 암울한 시기에 우리민중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전국의 학생들이 역사의 주체로 분연히 일어섰던 1929년 11월 3일 학생항일운동을 기리기 위하여 제정된 학생의 날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하여 이번 행사를 개최하였다'고 이번 행사의 기획 취지를 밝혔다.

특히, 이번 한마당에는 다산인권센터가 주관하여 왔던 모의법정 대본 공모사업의 당선작 3편 '굴레를 벗어나', '청소년 성매매', '동성애, 이성애' 등의 작품이 연극으로 공연될 예정이다. **다산**



제6회수원인권영화제

제6회 수원인권영화제 추진위원회는 1998년 제3회 인권영화제에서 상영된 '칠레전투'를 심야 상영하기로 결정했다.

개막작으로는 '매향리에서 돌아가는 먼길', 폐막작으로는 '애국가게임'이 상영될 것이다. 둘째날은 '옥천전투' 상영 후 감독과의 대화가 준비되어있다. 지난 29일부터는 제6회 수원인권영화제 추진위원회의 참여단체 활동가들이 중심이 되어 반전평화를 염원하는 1인 릴레이시위를 남문중앙극장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시위는 행사 전날인 오는 11월 14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 반전평화를 위한 1인 릴레이시위

10월 29일 ~ 11월 14일 수원남문중앙극장 앞

▶ 제6회 수원인권영화제

11월 15일(목),17(토) 오전10시 ~ 오후10시 / 경기문화재단 다산홀

11월 16일(금) 오후1시 ~ 새벽 4시 / 다산인권센터 소극장